

전략연구 2014-00

충청남도 지역생활권별 실태분석과 추진방향

임형빈 · 김정연 · 한상욱 · 이상준 · 오명택

발간사

인구감소에 따른 중복투자 방지와 시설의 효율적 이용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간 연계협력 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간 인적, 물적 교류의 증가는 생활권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지역간 협력을 전제로 하여 생활인프라, 복지, 일자리, 교육, 환경 등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남의 경우 6개 지역행복생활권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권 정책을 추진한지는 얼마 되지 않아 사업 추진을 위한 생활권별 사전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충남의 생활권내 시군간 특성을 파악하고 사업추진 과정의 정책적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생활권내 시군간 특성을 반영하여 향후 생활권별 사업 추진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군 생활권 담당 공무원들의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사업추진 과정상의 애로점과 생활권 정책 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시군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생활권 정책이 자리잡기를 바라며, 지역 발전의 기본 모델로 정착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충남의 생활권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한 지역도시연구부원들과 심층 인터뷰 과정상 많은 도움을 주신 생활권계획 담당 공무원분들, 충실한 조언을 주신 원내의 연심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5월 31일

충남발전연구원장 강 현 수

연구 요약

1. 필요성과 목적

2009년 5+2 광역경제권정책으로 시작된 지역간 공동사업의 추진은 지역간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3년부터 지역행복생활권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의 배경으로 인구감소와 같은 쇠퇴현상이 진행됨에 따라 일자리 감소, 생활기반시설의 노후 및 유희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근의 시군이 함께 활용하는 시설과 프로그램 체계를 구축하는 공동이용 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충청남도에서도 지역 내 15개 시·군을 6개의 지역행복생활권으로 구성하고, 각각의 생활권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 내 6개 생활권의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방향을 도출하고,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생활권 계획 시 애로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업발굴단계인 사업계획 수립, 추진, 집행단계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복수의 시군이 참여하는 추진체계상 어려움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생활권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 내 6개 생활권의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방향을 도출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생활권 계획 시 애로점을 파악하여 정책적인 제안을 하였다.

먼저 충청남도 내 6개 생활권의 특성과 사업추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

여 지역 생활권별 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성 분석을 위하여 중심지 계층구조, 지역발전지수, 통행구조, 산업간 연계구조, 농작물 특화 분석을 실시한다.

그 결과 생활권별 사업추진 방향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지역간 통행량을 통한 지역간 통행실태를 파악하였다. 생활권 내 시군의 산업연계구조를 파악하여 생활권내에서 공동추진 가능한 산업을 도출하였다. 농업생산품 역시 생활권내에서 추진 가능한 특화 농산품을 도출하였다.

두 번째로 생활권별로 분석된 결과와 생활권 계획으로 신청된 선도사업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시군별 생활권계획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때 사업발굴, 사업분야, 사업추진과정으로 세분화 하여 생활권 사업추진 전반에서 발생하는 난맥상과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였다.

<표 1> 생활권별 사업 분야 도출 결과

구분	지역발전위원회 사업분야			지역간통행구조	산업연계구조	농업생산물
	교육및의료	일자리창출	생활인프라			
천안 아산 생활권	공교육기반 의료기반시설 노인복지기반	고용기회 소득수준	녹색휴양기반 체육시설	천안:아산>논산 순 아산:천안>예산 순	전기전자/수송/정밀기계	콩/팥/고구마/참깨/ 땅콩/화초/ 헛개나무/오이/포도/배/화초/시 설/매실/호두/은행
홍성 예산 생활권	공교육기반 의료서비스질 의료시설기반 아동복지기반 노인복지기반	인구변화 인구활력 사업체기반 소득수준	식수보급 녹색휴양기반 문화시설 체육시설	홍성:예산>보령>천안 순 예산:홍성>당진>아산>천안 순	비금속광물/음식료품	팥/고구마/배추/인삼/참깨/땅콩/ 오이/수박/은행
공주 부여 청양 생활권	인구구조 공교육기반 사교육기반 의료서비스질 의료시설기반 노인복지기반	인구변화 인구활력 사업체기반 소득수준	하수처리 녹색휴양기반 문화시설 체육시설	공주:논산>천안 순 부여:논산>공주>천안 순 청양:예산>공주>홍성>부여 순	농림 수산물/음식료품	고추/산양삼/헛개나무/구기자/ 조경수/고추_시설/시금치/호박/ 오이/수박/토마토/버섯/밤/호두/ 은행
서산 태안 당진생활권	공교육기반 사교육기반 의료서비스질 의료시설기반 아동복지기반 노인복지기반	인구변화 인구활력 사업체기반 소득수준	주택신규화 식수보급 하수처리시설 녹색휴양기반 복지기반 문화시설 체육시설	서산:태안>당진>예산 순 태안:서산>천안 순 당진:서산>예산>천안 순	1차금속/전기전자/수송/ 정밀기계/농림수산물/음 식료품	콩/감자/고구마/고추/마늘/양배 추/땅콩/화초/조경수/화초_시설
논산 계룡 금산 생활권	인구구조 공교육기반 사교육기반 의료서비스질 의료시설기반 노인복지기반	인구변화 인구활력 사업체기반 고용기회	주택신규 녹색휴양기반 문화시설 체육시설	논산:계룡>천안 순 계룡:논산>공주 순 금산:논산>천안>공주 순	비금속광물/농림수산물/ 음식료품	콩/고구마/인삼/참깨/땅콩/도라 지/조경수/호박/수박/딸기/배
보령 서천 생활권	인구구조 공교육기반 의료시설기반 노인복지기반	인구변화 인구활력 사업체기반 소득수준	하수처리 녹색휴양기반 문화시설 체육시설	보령:홍성>천안>부여 순 서천:보령>부여>홍성 순	수송/비금속광물/농림수 산물/음식료품	팥/고구마/고추/고추_시설/포도/ 토마토/은행

그리고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분석된 생활권별 사업 방향과 지역발전위원회에 신청 사업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생활권 정책 추진과정상 그리고 복수의 지자체로 추진되는 추진체계 상의 문제점과 애로점을 파악하기 위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 사업발굴 과정

생활권 사업으로 발굴한 사업의 이유는 공동의 필요성, 비슷한 지역적 특성, 공동의 현안문제로 조사되었다. 사업발굴 과정의 경우 거의 모든 시군에서 사업발굴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이유로는 지속적인 정보공유, 생활권내 시군간 협의 어려움, 시군 내 관련 사업부서와의 협의 어려움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생활권협의회의 지속적 운영, 생활권 정책의 홍보 및 교육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제시된 생활권 협의회를 제도화 하여 구속력을 높이는 방안이 생활권별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사업의 유형은 생활권 기반구축을 위하여 교통분야, 생활인프라 분야, 교육 및 의료분야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일부 생활권(논산 계룡 금산생활권)에서 기존의 지역간 통행 연계가 별로 없어 발굴 할 수 있는 사업의 한계가 있다고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생활권은 정책적으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발굴 시 2개의 지자체로 이루어진 생활권 보다는 그 이상의 지자체로 이루어진 생활권의 사업협약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동의 지역 특징을 발굴하여 추진하기가 어렵고, 지역적으로 넓어 주민 혜택 측면에서 서비스 공급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 사업분야

향후 추진 가능한 님비해소 관련 사업의 경우 화장장 건립, 쓰레기 처리장, 도축장 등의 사업이 제시되었다. 생활권내 산업간 연계를 반영한 산업과 관련한 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생활권이 사업수립이 구체화된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화 농산물의 가공을 통한 제품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업과 관련한 계획의 경우 일자리와 함께 추진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 생산물의 경우에는 생활권 내 통합브랜드 구축, 로컬푸드 사업이 주로 추진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생활권내 지역간 통행구조와 관련된 교통분야 사업은 버스환승시스템, 택시영업권역, 버스 시간연장 및 회수 확대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간 통행 비율이 낮은 지역의 경우 장기적으로 생활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통측면의 사업을 통하여 수요를 발굴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인 생활권으로의 재편성이 필요하다.

■ 사업추진 과정

대부분의 생활권들은 생활권 정책이 지역발전 및 주민 체감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그 이유로는 공동의 현안사업 추진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며, 사업 발굴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동의가 이루어져 사업 추진이 원활하기 때문이다. 사업의 규모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였다. 적은 생활권에 사업을 선정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과, 예산은 적더라도 많은 생활권을 선정하여 주민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

선정된 일부 사업의 추진 과정상의 난맥상이 존재하고 있었다. 사업추진

과정상 어려움으로 조사된 내용은 예정된 국비지원의 지원이 지연되거나 절차상의 중복 심의 등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사업 진행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생활권 계획으로 선정되면 투융자심사 등의 과정을 의제처리 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생활권 사업기간 동안에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생활권 정책의 문제점으로는 정책을 단순화 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선도사업과 취약지역 개조 프로젝트 정도만 생활권 계획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사업인 연계사업과 단독사업은 각 개별부서에서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생활권계획에 포함시키려면 포함된 사업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생활권 구성이 지자체의 자율적인 협의에 따라서 구성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2013년 연계협력사업 모델), 사업 추진 시 중앙부처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추진의 일원화(사업선정과 예산집행) 등의 의견이 있었다.

건의사항으로는 지자체 자체사업과 중앙부처 지원 필요사업을 구분하여 선정 필요, 사업발굴의 노력에 비하여 사업비가 적다, 사업발굴, 계획수립을 위해서 별도의 재원(예, 포괄보조금형태) 마련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지속적인 생활권 정책 추진 필요 등의 의견이 있었다. 성공적인 생활권 정책 추진을 위한 각 주체별 역할로는 지역발전위원회는 제도의 간소화, 생활권별 특성을 감안한 사업발굴, 사업발굴의 유연성(5대 중점과제 이외의 사업발굴, 공간적 자율성), 적정한 예산의 배정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 충청남도는 사업발굴에서부터 도청 관련 성과와의 협력, 적정한 예산집행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 각 생활권 및 지자체는 일방적인 사업추진이 아니라 협의와 양보를 통한 사업협의를 필요, 주민 공감을 위한 주민협의, 생활권내 정보공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결론 및 시사점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3년부터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맞춰 충청남도는 총 6개의 생활권역이 지정되어 생활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는 충남지역의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추진을 위하여 생활권별 특성분석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생활권별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추진 시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충남의 생활권 정책을 위한 분석결과 생활인프라, 교육 및 의료, 일자리 창출 모든 분야에서 질적 양적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활권 정책을 통하여 시설의 효율성을 높여 추진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활권 내 교통관련 사업의 추진도 지속적인 생활권 정책을 위한 과제로 도출되었다.

실태조사 분석 결과 사업발굴과정에서는 지속적인 정보공유, 생활권내 시군간 협의 어려움, 시군 내 관련 사업부서와의 협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결방안으로는 생활권협의회 지속적 운영, 생활권 정책의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님비해소 관련 사업의 추진 수요로 화장장 건립, 쓰레기 처리장, 도축장 사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특화 농산물의 가공을 통한 제품화, 통합브랜드 구축, 로컬푸드 사업, 산업과 관련한 계획의 경우 일자리와 연계전략, 버스환승시스템, 택시영업권역, 버스시간 연장 및 운행 횟수 확대 등의 사업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발굴 시 생활권내 주민간, 지자체간 행정의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 모색될 필요가 있어 구속력 있는 생활권 협의회 추진이 모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추진 과정상의 정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정된 국비의 지원

이 지연, 사업선정 절차상의 간소화 및 일원화, 정책을 단순화 하여 효율성 제고, 연계사업과 단독사업계획의 의미 부재, 생활권 구성의 자율성 보장, 자유로운 사업발굴 분야 보장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는 생활권계획의 간소화(선도사업과 취약지역 개조 프로젝트 정도만 생활권 계획에 포함), 연계협력사업, 단독사업 제외 혹은 인센티브 제공, 사업을 중심으로 시군간 자유로운 생활권 형성등으로 나타났다.

〈표 2〉 생활권 사업추진 실태 분석 결과

구분	사업분야	사업발굴 과정	사업추진 과정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님비해소 관련 사업: 화장장 건립, 쓰레기 처리장, 도축장 · 특화 농산물의 가공을 통한 제품화 · 통합브랜드 구축, 로컬푸드 사업 · 산업과 관련한 계획의 경우 일자리와 연계전략 · 버스환승시스템, 택시 영업권역, 버스시간 연장 및 운행 횟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정보공유, 생활권내 시군간 협의의 어려움 · 시군내 관련 사업부서와의 협의 어려움 · 3개의 시군으로 이루어진 생활권 사업발굴이 상대적인 어려움 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정된 국비의 지원이 지연 · 사업선정 절차상의 간소화 및 일원화 · 정책을 단순화 하여 효율성 제고 · 연계사업과 단독사업계획의 의미 부재 · 생활권 구성의 자율성 보장 · 자유로운 사업발굴 분야 보장
해결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권내 주민간, 지자체간 행정의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권협의회 지속적 운영 · 생활권 정책의 홍보 및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도사업과 취약지역 개조 프로젝트 정도만 생활권 계획에 포함 · 연계협력사업, 단독사업 제외 혹은 인센티브 제공 · 사업을 중심으로 시군간 자유로운 생활권 형성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3
2. 연구범위 및 방법	4
1) 연구범위	4
2) 연구방법	5
3. 연구수행 체계	6
 제2장 관련 연구 및 정책동향	9
1. 지역생활권 관련 연구	9
1) 시·군 단위 정주생활권 또는 기초생활권 관련 연구	9
2) 광역도시권 관련 연구	12
3) 복수의 시·군에 의한 지역생활권 연구	13
2. 관련 정책 동향	16
1) 정주생활권과 기초생활권정책	16
2) 지역행복생활권정책	17
3) 국외 관련 정책과 계획	23
 제3장 생활권별 특성 분석	39
1. 중심지 계층구조 분석	39
1) 분석방법	39
2) 이용자료	40
3) 중심지 계층구조 분석의 종합	50
2. 지역발전수준(Region Development Index, RDI) 분석	51

1) 분석방법 및 이용자료	51
2) 생활권별 분석결과	52
3) 생활권별 지역발전지수 종합	82
3. 지역간 통행구조 분석	84
1) 천안시	84
2) 공주시	85
3) 보령시	86
4) 아산시	87
5) 서산시	88
6) 논산시	89
7) 계룡시	90
8) 당진시	91
9) 금산군	92
10) 부여군	93
11) 서천군	94
12) 청양군	95
13) 홍성군	96
14) 예산군	97
15) 태안군	98
4. 시·군간 산업연계구조	99
1) 분석의 방법 및 이용자료	99
2) 분석결과	99
5. 농작물 분석	102
6. 생활권별 분석 종합	108
1) 천안 아산 생활권	108
2) 홍성 예산 생활권	109
3) 공주 부여 청양 생활권	109
4) 서산 태안 당진 생활권	110
5) 논산 계룡 금산 생활권	111

6) 보령 서천 생활권	111
제4장 생활권별 사업추진 실태 분석	113
1. 생활권별 특성과 사업추진 비교 분석	113
1) 천안 아산 생활권	113
2) 홍성 예산 생활권	116
3) 공주 부여 청양 생활권	118
4) 서산 태안 당진 생활권	120
5) 논산 계룡 금산생활권	122
6) 보령 서천 생활권	124
2. 생활권별 사업추진 실태 인터뷰 조사	126
1) 천안 아산 생활권	126
2) 홍성 예산 생활권	128
3) 서산·당진·태안생활권	129
4) 공주·부여·청양생활권	131
5) 논산·계룡·금산생활권	132
6) 보령·서천생활권	134
3. 생활권 사업 실태 분석 결과	136
제5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141
1.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제언	141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42
<input type="checkbox"/> 참고문헌	145
[부록 1] 생활권 사업 담당자 인터뷰 결과	148

표 목차

<표 1-1> 지역구분	4
<표 2-1> 과거정부와 현정부 지역발전정책의 비교	22
<표 2-2> 일본의 정주자립권 현황 (2012년 4월19일 현재)	26
<표 2-3> 국가별 도시권 정책 종합비교표	38
<표 3-1> 중심성을 나타낼 수 있는 업종의 구분(2013년 전화번호부)	40
<표 3-2> 천안 아산 생활권	42
<표 3-3> 공주·부여·청양 생활권	43
<표 3-4> 보령·서천 생활권	45
<표 3-5> 서산·당진·태안 생활권	46
<표 3-6> 논산·계룡·금산 생활권	48
<표 3-7> 홍성·예산 중추도시생활권	49
<표 3-8> 지역발전지수(RDI)의 도출 체계	52
<표 3-9> 주민활력부문 분석	53
<표 3-10> 지역경제력 분석	54
<표 3-11> 생활서비스 분석	55
<표 3-12> 삶의 여유공간 분석	56
<표 3-13> 천안시 발전수준 실태 분석	57
<표 3-14> 아산시 발전수준 실태 분석	57
<표 3-15> 주민활력분석	58
<표 3-16> 지역경제력 분석	59
<표 3-17> 생활서비스분석	60
<표 3-18> 삶의 여유 공간 분석	61
<표 3-19> 공주시 발전수준 실태 분석	61
<표 3-20> 부여군 발전수준 실태 분석	62

<표 3-21> 청양군 발전수준 실태 분석	62
<표 3-22> 주민활력 분석	63
<표 3-23> 지역경제력 분석	64
<표 3-24> 생활서비스분석	65
<표 3-25> 삶의 여유 공간 분석	66
<표 3-26> 보령시 발전수준 실태 분석	67
<표 3-27> 서천군 발전수준 실태 분석	67
<표 3-28> 주민활력분석	68
<표 3-29> 지역경제력분석	69
<표 3-30> 생활서비스분석	70
<표 3-31> 삶의 여유공간 분석	71
<표 3-32> 서산시 발전수준 실태 분석	72
<표 3-33> 당진시 발전수준 실태 분석	72
<표 3-34> 태안군 발전수준 실태 분석	72
<표 3-35> 주민활력 분석	73
<표 3-36> 지역경제력 분석	74
<표 3-37> 생활서비스분석	75
<표 3-38> 삶의 여유 공간 분석	76
<표 3-39> 논산시 발전수준 실태 분석	76
<표 3-40> 계룡시 발전수준 실태 분석	77
<표 3-41> 금산군 발전수준 실태 분석	77
<표 3-42> 주민활력 분석	78
<표 3-43> 지역경제력 분석	79
<표 3-44> 생활서비스분석	80
<표 3-45> 삶의 여유 공간 분석	81
<표 3-46> 홍성군 발전수준 실태 분석	81
<표 3-47> 예산군 발전수준 실태 분석	82
<표 3-48> 시군별 지역발전지수 순위와 등급 종합	83

<표 3-49> 천안시 통행구조 분석	84
<표 3-50> 공주시 통행구조 분석	85
<표 3-51> 보령시 통행구조 분석	86
<표 3-52> 아산시 통행구조 분석	87
<표 3-53> 서산시 통행구조 분석	88
<표 3-54> 논산시 통행구조 분석	89
<표 3-55> 계룡시 통행구조 분석	90
<표 3-56> 당진시 통행구조 분석	91
<표 3-57> 금산시 통행구조 분석	92
<표 3-58> 부여군 통행구조 분석	93
<표 3-59> 서천군 통행구조 분석	94
<표 3-60> 청양군 통행구조 분석	95
<표 3-61> 홍성군 통행구조 분석	96
<표 3-62> 예산군 통행구조 분석	97
<표 3-63> 태안군 통행구조 분석	98
<표 3-64> 충남 16개 시군의 지역별 중간재화 조달 비율 상위 1~3위	101
<표 3-65> 생활권별 사업 분야 도출 결과	112
<표 4-1> 천안아산 생활권 수요 분석 결과와 공모 신청사업 비교	115
<표 4-2> 홍성 예산 생활권 수요 분석 결과와 공모 신청사업 비교	117
<표 4-3> 공주 부여 청양 생활권 수요 분석 결과와 공모 신청사업 비교	119
<표 4-4> 서산 태안 당진 생활권 수요 분석 결과와 공모 신청사업 비교	121
<표 4-5> 논산 계룡 금산생활권 수요 분석 결과와 공모 신청사업 비교	123
<표 4-6> 보령 서천 생활권 수요 분석 결과와 공모 신청사업 비교	125
<표 4-7> 생활권 사업추진 실태 분석 결과	139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의 주요내용	7
[그림 2-1] 생활권의 개념	18
[그림 2-2] 지역행복생활권의 중심지 계층과 서비스 유형	18
[그림 2-3]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추진의 절차	21
[그림 2-4] RDA와 LEP의 지리적 분포	24
[그림 2-5] RDA와 LEP의 추진체계 사례	25
[그림 2-6] 정주자립권 형성 및 추진절차	27
[그림 2-7] 시정촌의 역할	29
[그림 2-8] 미국 CBSA (942개)	30
[그림 2-9] CBSA 구성 및 획정 과정	31
[그림 2-10] CBSA 획정 조건	32
[그림 2-11] 독일 Metropolitan Areas	34
[그림 2-12] 프랑스 도시공동체(좌)와 메트로폴 구상(우)	35
[그림 3-1] 충청남도 생활권별 중심지 기능지수에 따른 계층구조 분석	50
[그림 3-2] 생활권별 농작물 특화도	102
[그림 3-2] 생활권별 농작물 특화도_계속	103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지역간 연계 협력의 필요성 대두

2009년 5+2 광역경제권정책으로 시작된 지역간 공동사업의 추진은 그동안 지속되어 왔던 단일지역의 개발 사업을 탈피하여 지역간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지역간 계획의 추진은 규모의 경제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과소지역의 투자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광역경제권정책은 실제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있고 또한 지역 산업정책으로 초점이 맞춰져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3년부터 지역행복생활권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충청남도에서도 지역 내 15개 시·군을 6개의 지역행복생활권으로 구성하고, 각각의 생활권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치단체 간 협력을 전제로 하는 지역발전 전략을 채택하여 추진하는 나라가 증가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2008년부터 시·정·촌이 협력하여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는 정주자립권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국 등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도 지역 간 협력을 전제로 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접한 복수의 지자체간 자발적 협력으로 생활권이 구성되며 생활인프라, 일자리, 교육·의료·복지, 문화·환경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간 연계·협력에 의한 지역발전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첫

째, 교통과 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해 지역 간의 인적·물적 교류 및 상호작용이 증대되고, 생활권 및 경제권이 광역화되면서 지역 간 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농어촌지역의 경우는 절대인구 감소로 인한 수요 부족으로 단일 행정구역 내에서는 생활서비스의 충분한 공급·전달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지자체가 협력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김현호, 2011; 지역발전위원회, 2013).

■ 시설의 효율적 이용, 중복투자 방지 필요성

기존에 추진되어왔던 기초생활권의 경우 시·군 단위의 권역 설정을 통하여 생활기반확충, 소득제고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중소도시들은 인구감소와 같은 쇠퇴현상이 진행되고 있어 일자리 감소, 생활기반시설의 노후 및 유희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근의 시·군이 함께 활용하는 시설과 프로그램 체계를 구축하여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공동이용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지역행복생활권정책은 인구감소에 따른 시설의 임계 규모를 높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복투자의 비효율성을 방지하는 정책이다.

■ 충남의 6개 생활권사업의 효율적 사업 추진 방향 도출

전술한 바와 같이 충남에는 6개의 생활권역이 지정되어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생활권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을 뿐 지역발전위원회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분야별 사전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권내 시군간의 특성을 파악하고 향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때 지역발전위원회의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생활권별 사업 추진 방향을 분야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내 6개 생활권의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방향을 도출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생활권 계획시 애로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업발굴단계인 사업계획 수립, 추진, 집행단계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복수의 시군이 참여하는 추진체계상 어려움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생활권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생활권별 낙후된 분야와 특화된 강점 분야를 파악하여 향후 생활권별 사업 도출시 사업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생활권별 낙후된 분야의 사업분야를 도출하기 위하여 지역발전위원회의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한다. 분석시 생활권별 낙후된 지표를 파악하여 지역발전위원회의 5대 중점분야와 비교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생활권별 특화된 사업분야 도출을 위하여 산업간 연관도를 파악하여 연계 가능한 산업을 도출하고, 농업 생산품 특화도를 파악하여 공동의 사업을 위한 특화 농작물을 도출하도록 한다. 또한 생활권내 시군간 통행분석을 실시하여 현재 구성된 생활권역 체계와 사업추진의 가능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러한 분석으로 도출된 결과를 중심으로 생활권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 공무원들의 인터뷰를 실시하도록 한다. 인터뷰를 통하여 생활권별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의 발전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인터뷰 과정을 통하여 생활권별 사업추진 과정상과 정책 추진의 난맥상을 파악하여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내 6개 생활권의 특성과 사업추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지역 생활권별 특성 분석을 실시한다. 특성 분석을 위하여 중심지 계층구조, 지역발전지수, 통행구조, 산업간 연계구조, 농작물 특화 분석을 실시한다.

둘째, 지역 생활권별로 도출된 분석결과와 실제로 지역발전위원회에 신청

한 사업을 비교 분석하도록 한다.

셋째,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분석된 생활권별 사업 방향과 지역발전위원회에 신청 사업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생활권 정책 추진과정상 그리고 복수의 지자체로 추진되는 추진체계 상의 문제점과 애로점을 파악하기 위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연구의 범위는 충남 전역을 중심으로 하며 기 설정된 6개 생활권별로 분석과 인터뷰 조사가 이루어진다. 생활권별 사업방향 도출을 위한 분석은 중심지체계분석, 지역발전지수(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통행구조분석(국가교통DB, 2014), 산연연계구조 분석, 농작물 특화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생활권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담당자 인터뷰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범위인 생활권별 지자체는 다음과 같다.

<표 1-1> 지역구분

생활권	세부지역
천안·아산생활권	천안시, 아산시
홍성·예산생활권	홍성군, 예산군
서산·당진·태안생활권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공주·부여·청양생활권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논산·계룡·금산생활권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보령·서천생활권	보령시, 서천군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충남의 생활권별 특성을 분석하여 생활권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연구, 분석연구, 인터뷰 조사로 구분된다.

중심지 계층구조 분석은 크리스탈러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데이비스(W. K. D. Davies)의 기능지수법(Functional Index Method)에 의하여 분석되어진다. 기능지수법은 중심기능의 규모(중심성) 차이에 의해 나타나는 중심지 계층을 구분하고 그 특징을 설명하는 것이다.

생활권별 낙후분야 도출을 위하여 지역발전지수(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의 기초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역발전지수의 분야별 하위 지표를 분석하여 생활권별 발전수준을 비교분석 한다. 생활권 내 산업간 연계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지역 산업연관분석에 의한 중간재화의 지역간 의존도를 활용하도록 한다. 생활권 내 시군의 산업적 연계구조를 파악하여 협력 가능한 산업을 도출하도록 한다. 그리고 농업생산물을 분석하여 생활권내 특화 농작물을 활용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도출하도록 한다. 이때 농업적 동질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농업 작물을 대상으로 특화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74개 품목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 작물부분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생활권을 구성하고 있는 시군간의 지역간 통행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통연구원의 국가교통 D/B 자료를 활용하여 생활권내 시군의 통행구조를 분석한다.

3. 연구수행 체계

본 연구는 6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방법과 범위를 설정하고 제2장에서는 관련 이론 및 정책동향을 파악한다. 제3장에서는 생활권별 특성 분석을 실시하여 충청남도 내 6개 생활권의 특성을 분석하도록 한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생활권별 사업 추진 실태 분석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때 생활권별 특성분석 결과와 신청사업간의 비교 분석을 실시하도록 한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마지막 5장에서는 연구의 요약 및 정책 제언, 향후과제를 도출하도록 한다.

구분		주요내용	수행방법
제1장	서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연구방법과 범위 	
제2장	관련 이론 및 정책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이론 및 선행연구 · 관련 정책 추진동향 	· 관련 연구 및 정책 동향 분석
제3장	생활권별 특성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심지체계분석, 지역발전지수, 통행구조분석, 산연연계구조 분석, 농작물 특화분석 	· 데이터 활용
제4장	생활권별 사업 추진 실태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권별 특성분석 결과와 신청사업간의 비교 분석 · 생활권별 인터뷰 	· 관련 공무원 인터뷰 조사
제5장	결론 및 향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의 요약 · 정책 제언 · 향후과제 	· 연구의 종합

[그림 1-1] 연구의 주요내용

제2장 관련 연구 및 정책동향

1. 지역생활권 관련 연구

지역생활권 육성 관련 연구는 시기별로 초점을 달리하며 전개되어 왔다. 1980년에는 제2차 국토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복수의 시·군을 포함하는 지역생활권 형상방안, 1980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도농통합생활권론에 기반한 시·군 단위 정주생활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복수의 시·군을 포함하는 광역개발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대도시 중심의 광역도시권 관리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2000년대 후반에는 MB 정부의 광역경제권의 중추역할을 하는 대도시권에 대한 연구와 함께, 시·군 단위 기초생활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박근혜 정부들어 지역행복생활권정책이 추진되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시기별로 지역생활권 관련 논의가 일정 수준에서는 방향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논점을 그 당시의 정책목적에 따라 다르며 일관성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과거의 생활권정책이 실질적인 정책집행이 되지 못한 채 개발구상 차원에서 명목적이고 형식적으로 운영된 것에 기인한 면도 있다(김선기·박승규, 2014)

1) 시·군 단위 정주생활권 또는 기초생활권 관련 연구

시·군 단위의 정주생활권에 대한 논의는 1977년부터 일본 총무성이 추진하였던 정주권 구상에 영향을 받았다. 내무부는 「지방정주생활권의 설정

과 개발에 관한 연구(1981)」를 진행하는 한편, 정주생활권 시범계획 수립을 진행하였다. 1981년에는 영월, 서산, 정읍, 강진을 대상으로, 1982년에는 괴산, 청송을 대상으로 5개의 기관이 시범계획이 수립되었다. 그 후 안성, 고성, 공주, 청송, 강진에서 추진되었다.

최양부 외(1985)는 “하나의 중심지가 최소거리 내에서 갖는 자체의 생활권, 하나의 중심지를 중심으로 하는 주민의 1일 생활권”을 정주생활권(human settlement area)로 정의하고, 도시정주생활권과 농촌정주생활권을 구분하였다(최양부 외, 1985). 그 당시 정주생활권의 범위는 버스 1시간(도보 포함) 또는 승용차 30분권을 기준으로 중심지로부터 반경 16km인 권역으로 설정하였다. 도시정주생활권은 중심도시가 배후지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 성장을 할 수 있으며, 배후지를 지배하고 있는 정주생활권(인구 10만명 이상 되는 중심도시를 갖는 종주생활권)으로, 농촌정주생활권은 중심도시의 성격과 기능이 그 배후 지역인 농촌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의존하는 농촌성이 강한 정주생활권(인구 10만명 이하 중심도시를 갖는 정주생활권)으로 설정되었다.

최양부·정철모(1984)는 농촌정주생활권 내부의 정주(중심지)체계로서 ‘농촌중심도시(소도시)-농촌중심지(소도읍Ⅰ)-농촌중심지(소도읍Ⅱ)-마을’로 이루어지는 4계층의 농촌정주체계를 설정하였다. 여기서 제안된 농촌정주체계의 기본구조는 인구규모에 따라 설정되어 생활환경과 서비스와 관련한 계획이 수립되었다. 구체적으로 인구 2만 이상의 시·읍급 도시를 ‘농촌정주생활권 중심도시’로 하고, 인구 3,000명 이상의 읍·면소재지를 ‘소도읍Ⅰ’으로 하여 주변의 2~3개 면을 서비스 하도록 하고 이를 정주구라 하였다. 인구규모 1,000~3,000명인 오지·벽지의 면소재지나 중심취락은 ‘소도읍Ⅱ’로서 소규모의 하위 서비스 중심지로서 정책적으로 거점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인구규모 1,000명 이하의 면소재지나 중심취락(또는 마을)은 배후지역에 대한 중심지로서 기능을 부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자체의 생활환경

개선이나 생산기반 강화를 위하여 농촌중심지 개발이라는 차원보다는 주거 환경개선과 경지기반 정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마을종합개발 차원에서 개발토록 제안하였다.

농촌정주생활권의 특성비교 연구(이정환·김정연·이정기, 1987a)는 전국의 시·군지역을 다변량분석에 의해 유형을 구분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전국 139개 군 지역을 대상으로 인구, 가구, 토지이용, 산업, 서비스, 생활환경, 재정, 접근성, 지가 등 총 53개의 지표를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11개 요인의 득점을 기초로 한 군집분석으로 지역유형을 구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수도권대도시근교형, 목축·과수·어촌형, 서남해안어촌형, 동남부공업화진행형, 접적지 및 태백산간형, 영남내륙형, 서남부평야형, 발전잠재형 등 총 8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정주공간의 구조적 변화와 대응방향(김창현 외, 2003)에서는 우리나라 정주공간 및 정주체계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고, 정주구조 변화요인 전망과 정책과제 도출하여,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정책적 대응방안 모색하였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수도권 중심성 강화에 따른 지방 정주체계의 수도권 예측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의 정주체계가 독자성을 유도하였다. 국토정책이 지방에서 '중심대도시-주변지역-배후 농어촌지역'으로 구성되는 정주체계가 계층성과 체계성을 가지면서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는 독자적인 자립형 대도시경제권 형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송미령 외(2008)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 일자리, 환경 등 기본수요(basic 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간정주의 기본적 공간단위로서 '기초생활권' 개념을 제시하고, 주거, 교육, 문화, 복지 등 생활여건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여건이 하나의 완결된 생활공간 내에서 충족될 수 있도록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재준 외(2010)는 기초생활권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인 생활서

비스 공급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하여 기초생활권 중심지 계층별 적정 서비스 공급방안을 제안하였다. 기초생활권 서비스 확충을 위한 정책방안으로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 대안적 교통수단 운영 등 교통접근성 강화 방안, 관련 서비스·시설의 복합화 및 연계 프로그램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2) 광역도시권 관련 연구

제2차 국토계획에서 지역생활권 전략을 도입함에 따라 국토연구원을 중심으로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권 연구가 수행되었다. 특히,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수도권 인구분산을 유도하고 국가교통망의 재편성 및 지역잠재력을 극대화하기에 유리한 대전대도시생활권을 중심으로 대전대도시생활권계획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서창원 외, 1983).

광역도시권의 공간체계분석과 개발방안-청주권을 중심으로-(김행중, 1994)에서는 청주시를 중심으로 하는 광역도시권의 토지이용과 생활권, 산업입지 등의 광역공간체계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개발방안을 제시하였다.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단위 설정 연구(이동우 외, 2003)는 지역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와 자립적 발전이 가능한 광역경제권역의 공간단위를 설정하였다. 시·군을 기본 단위로 한 다음 직주연계, 즉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충분히 자립적인 권역이라는 전제 하에 통근권 중심으로 이를 통합하여 전국을 28개 기초생활권으로 구분하였다. 광역경제권은 1) 도시세력권을 기준으로 한 7대 광역경제권, 2) 국제경쟁력을 기준으로 한 5대 광역권, 3) 수도권과의 관계를 고려한 3대 초광역권으로 구분하였다.

대도시 광역도시권 설정과 권역별 공간 특성 비교(권창기·정현욱, 2007).

3)는 광역도시권 설정을 위한 기능적 연계성 측정의 새로운 모형 제시,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도시권간 공간적 특성 비교, 수도권의 초광역화 현상에 대한 시사점 제시하였다. 주요 결과로는 광역도시권간 공간적 연계패턴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광역도시화의 진행 정도, 중심도시의 역할 및 중심도시와 주변도시간 도시기능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주 외(2010, 2011, 2012)는 생활권의 일종으로서 대도시가 중심이 되는 글로벌 도시권 개념을 도입하여 도시권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도시권 육성을 위한 경쟁력 강화방안, 분야별 중점전략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경구 외(2012)는 대도시권의 상생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체제 구축방안과 대도시권 육성을 위한 기본전략과 대도시권 계획체제 및 효과적인 연계협력사업을 모색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대책과 제도적 기반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태헌 외(2012)는 중소도시권 육성을 위해 중소도시권의 이론적 개념·육성 필요성과 과제·중소도시권의 기능과 역할 정립 방안을 제시하고, 외국의 지역개발정책 사례로부터의 시사점을 검토하는 한편, 우리나라 도시의 변화와 그에 따른 대도시권, 중소도시권, 농촌도시권에 속한 도시를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소도시권의 육성 비전, 목표, 유형 및 권역을 설정하고 중소도시권별 특화 육성전략 및 추진체계구축·정책영역확보·재원확보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3) 복수의 시·군에 의한 지역생활권 연구

(1) 제2차 국토계획과 연계한 1980년대 초반의 연구

1980년 초반 지역생활권에 관한 논의는 국토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것이

었으나, 정책적 실현성이 낮아, 그 이후는 시·군 단위 정주생활권에 관한 논의가 대신하게 되었다. 국토개발연구원은 제2차 국토계획 수립을 위한 일련의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한순은 중심지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도시권을 지역생활권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이한순 외, p.130).

최진호는 도시-농촌간의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 중소도시의 성장을 촉진하여 국가 전체의 발전에 따른 혜택이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배분하고, 도시-농촌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와 농촌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른 사회개발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지역생활권 개발전략을 제안하였다. 여기서 지역생활권은 도시와 주변 농촌배후지역을 결합시킨 일정 범역의 지역단위로서 도시와 농촌의 연계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개발권역인 동시에 배후지역 주민의 중심도시에 대한 생활편익시설의 이용권역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경제성과 생활권내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인 전문대학 1개, 종합병원 1개의 시설을 유지하는 데 요구되는 최소인구가 25~30만명이라는 기준을 제시하였다(최진호 외, 1981, pp.11-15).

유영휘는 생활권 계층구분의 기준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중심지의 기능과 세력권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광역도시권 중심도시(2000년대 150만 이상, 주변에 위성도시, 중추관리기능 및 전문기능, 국제수준), 지역중심도시(계획인구 50만 이상으로서 광역중심권의 도시기능을 보완하며, 도시세력은 제2차 국토계획에서 제시한 지역생활권과 그 이상의 범위지역에 미치는 도시), 지역 서비스 도시(계획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로서 상위계층 도시의 개발효과가 농촌지역에 확산되도록 교량적 역할을 하는 도시), 농촌지원도시(10만 이하의 시·읍에 해당되며, 도시와 농촌을 연계하는 결절기능과, 농산물·농업용자재이 유통기능, 농촌복지시설의 공급기능 등을 갖추어 농촌인구의 대도시 유출방지에 기여하는 도시) 등으로 생활권 계층별 중심도시의 규모와 기능 등을 제시하였다(유영휘 외, 1984,

pp.17-23).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국토연구원을 중심으로 전국을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정주생활권체계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중심지계층구조와 지역간 연계구조(버스통행, 상품유통 등)를 분석하고, 정주체계 변화를 전망하였다(권원용 외, 1986). 이와 함께 지방의 정주생활권체계를 안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소도시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되었다(박양호 외, 1986).

(2) 지역행복생활권 정책과 관련된 2010년대의 연구

교통, 통신 발달 등에 따라 주민의 일상생활 영역이 시·군 경계를 넘어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따라서 대도시와 중소도시, 도시와 농어촌, 농어촌 상호 간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연계·협력하는 지역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들이다.

정희윤 외(2011)는 지역발전정책의 실태와 지역격차 분석을 토대로 새로운 균형발전전략으로서 지역생활권 도입을 주장했으며, 지역생활권정책의 가이드라인 등 현 정부 지역생활권정책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이원섭·송미령(2014)은 지역행복생활권의 두 가지 유형인 중추도시생활권과 농어촌생활권에 대하여 일자리 창출 등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차미숙외(2014)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의 연계협력 활성화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정책의 실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례조사, 설문조사, 사업수요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사업 추진과정시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발전방안과 사업추진의 효과성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2. 관련 정책 동향

1) 정주생활권과 기초생활권정책

내무부는 국토개발 전략의 수정과 궤를 같이하여 1980년부터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주생활권개발을 추진하였으며,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1984년부터 1994년까지는 농림수산부가 주로 농촌형 정주생활권 즉, 군 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¹⁾

정책 추진에 있어서 시·군 단위의 정주생활권정책은 선언적인 것이었고, 실제로는 면단위의 농촌정주권개발사업(농림부), 오지개발사업(내무부) 등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의 상호 공생’을 지향하는 도농통합적 접근은 1980년대 이후의 지역개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MB 정부는 그 핵심정책인 글로벌 경쟁력 중심의 광역경제권정책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군 단위의 기초생활권정책을 도입하고, 기초생활권별로 자율과 창의에 의해 지역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시·군별로 기초생활권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지역 주민의 기본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통합적 정책수단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중앙부처로부터 포괄보조사업을 확보하는 근거 자료 정도로 활용되었다.

1) 농어촌지역종합개발계획은 내무부의 「지방정주생활권개발」에 대한 연구와 정책실험(1980~1984)을 이어받아 발전시킨 것이다. 농어촌지역종합개발정책의 추진 경위에 대해서는 (이정환 외,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의 장기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2.)을 참조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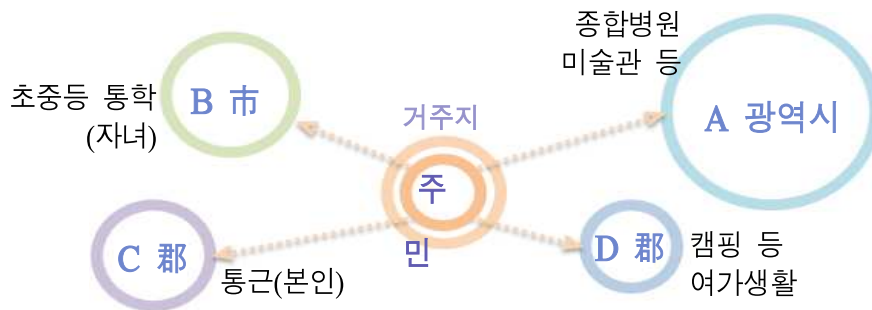
2) 지역행복생활권정책

(1) 지역행복생활권의 개념

그동안 지속되었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은 물론 지역의 중소 도시까지도 인구감소 등의 쇠퇴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기업과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도시의 활력이 저하되고 인구가 유출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 교육 보건 등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분야도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지역행복생활권의 개념은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의료, 복지 서비스가 충족되는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을 의미한다. 이것은 인접한 시(특별시, 광역시 포함), 군이 자발적으로 협력하여 구성하는 공간으로 중심도시, 농어촌 중심지, 인근마을을 포괄하는 개념이다(지역발전위원회, 2013). 공간적 범위는 주민, 지자체가 주도하여 '중심도시-농어촌중심지-마을'로 연결되는 공공, 상업 서비스 공간을 기반으로 설정한다. 지역행복 생활권의 중심도시는 고차서비스, 농어촌 중심지(읍·면)는 복합서비스, 인근마을은 기초생활서비스 기능을 분담한다. 이와 같은 지역행복 생활권은 교통, 통신의 발달로 주민의 통근 및 통학, 여가 등의 공간이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확장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절대인구의 감소로 인한 수요부족으로 단일 행정구역내에서는 생활 서비스의 충분한 공급과 전달이 어렵다. 특히 중심도시를 이용해야 하는 의료, 문화 등 광역 생활서비스의 지역간 격차가 커서, 중심도시와 주변도시를 연계하는 생활권 단위의 접근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자체간의 불필요한 경쟁과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생활서비스이 연계를 통해 상생발전, 주민 복리증진에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역행복생활권 개념이 도입되었다.



자료: 지역발전위원회(2013),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가이드라인.

[그림 2-1] 생활권의 개념

각 지역 위계별 생활서비스 공급은 마을, 농어촌중심지(읍면), 도시로 구분되며, 마을단위에서는 기초생활서비스, 읍면의 농어촌중심지는 복합서비스, 도시는 고차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각 위계별 제공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기초단위인 마을에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한 기초생활인프라를 중심으로 공급된다. 중간위계인 읍·면 단위에서는 향토산업, 교육, 문화·체육공간, 기초의료 등의 복합서비스 센터가 제공된다. 가장 고차 위계인 도시에서는 쇼핑, 일자리, 산업, 거점병원, 대형도서관 및 공연장 등의 고차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자료: 지역발전위원회(2013),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가이드라인.

[그림 2-2] 지역행복생활권의 중심지 계층과 서비스 유형

(2) 지역행복생활권의 유형

지역행복생활권은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농어촌생활권으로서 농어촌 성격이 강한 지역으로 상호 연계성이 높아 지역별로 기능별 특화 및 역할 분담이 중요한 시·군으로 구성되는 생활권을 말한다. 두 번째 유형으로 도농연계생활권은 중소도시 및 인근 농어촌이 중심이 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중소도시와 연계성이 높은 주변 농어촌 지역으로 구성되는 중소도시 생활권이 중심이 된다. 세 번째로 중추도시생활권은 대도시권 및 중소 연담도시권으로서 이러한 지역은 광역시 등 지역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대도시, 특화된 중소규모 도시가 연담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대도시 생활권을 의미한다.

농어촌생활권은 농어촌 성격이 강한 2~3개 시·군으로 구성되는 생활권으로서 특별한 중심도시 없이 농어촌 성격이 강한 지역들끼리 대등한 연계생활권을 설정하여 서로 기능을 분담하는 형태이다. 구성기준은 특별한 중심기능이 발달하지 않은 인구 10만명 전후의 농어촌 시 또는 군이 지리적·기능적으로 연계된 생활권으로 구성된다.

도농연계생활권은 1~2개의 중소규모 중심도시 및 인근 농어촌으로 구성되어 도시적 특성과 농어촌적 특성이 병존하는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 및 농어촌 지자체간에 상호보완적 협력이 중요한 목표이다. 구성기준을 살펴보면 인구 10만명~50만명 전후의 개별 중심도시 또는 2개 이상의 연담도시가 인근 지역과 일자리·교육·문화·의료·복지서비스 등을 연계·공유하는 생활권으로 이루어진다.

중추도시생활권은 지역발전의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중심도시 및 이와 연계된 지역들이 상호간의 기능적 연계와 협력의지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구성하는 도시형 연계협력 생활권이다. 이러한 유형은 대도시 중심형과 네트워크 도시형으로 구분된다. 대도시 중심형은 광역시 등 중추기능을 제공

하는 대도시와 연계된 인근지역으로 구성되며, 네트워크 도시형은 중소규모의 특화된 도시가 연담하여 중심을 이루고 인근지역과 상호 연계를 맺는 구조를 갖는다. 구성기준을 살펴보면 중심도시 또는 2개 이상의 연담 도시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지역이 인근 지역과 동일생활권을 형성하는 지역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지역생활권은 기존의 광역경제권 및 기초생활권과 비교하여 정책 목표, 권역구성 방식, 중점 추진분야 등에서 차별화된다. 우선 광역경제권의 경우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역 선도산업 및 관련 인력 육성, 광역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그리고 기초생활권은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별 시·군 단위의 지역개발 및 생활기반 확충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지역생활권의 경우 주민의 편의를 고려하되 복수의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하여 생활권 내에서 지역위계에 맞는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은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지역생활권은 정책성과의 주민체감도 중시, 지역 자율과 지자체간 협력에 의한 권역구성 및 사업시행, 맞춤형 사업추진 및 지원체제 구축이라는 차별성이 있다.

(3)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의 수립과 추진

이러한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은 지역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상향식으로 생활권이 설정되며, 기본적으로 생활권의 공간범위, 인구규모 등이 적정수준이 되도록 구성된다. 또한 도시의 기능적, 역사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구성됨에 따라 광역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생활권 구성도 가능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지역 생활권은 2개~4개의 지리적으로 연속된 지자체로 구성된다. 광역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중추도시생활권은 관할 자치

구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4개 이상의 연속된 지자체로 생활권 구성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준으로 구성되는 하나의 생활권내에서 추진되는 사업은 지자체간 협력사업 및 주민 체감형 사업이 우선 지원하여 서비스 공급 및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하나의 생활권으로 구성되기 위한 지역간 연계성 기준은 지자체 간 접근성, 기능적·지리적 관계, 역사·문화적 동질성, 지자체 협력의지 등을 감안, 연계성 높은 지역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연계성을 나타내는 기준은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로 구분된다. 활용되는 정량지표는 지자체간 통근통행지표(통근율, 역통근율, 통근량 비중), 상품구매 및 서비스이용권, 산업·경제연계지표 등이 있다. 정성지표로는 지자체간 연계협력 의지, 연계협력 실적 등 사회적 통합성, 생태·환경 및 역사·문화적 동질성 등이 있을 수 있다.

정책 추진을 위한 절차는 지역생활권 구성, 발전계획 수립, 사업추진 모니터링 및 평가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1	지역생활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위 가이드라인 제시 - 지자체 협의체 구성 - 생활권 구성안 마련
▼		
2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지자체 공동수립 - 생활권 사업, 제도 개선사항 발굴 - 주민 의견수렴, 광역지자체 협의 -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 시·도 발전계획 반영
▼		
3	지역생활권 사업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계획 사업에 대한 시·도, 중앙부처 지원 - 지자체 시너지 효과창출 - 상호기능적 연계 및 분담
▼		
4	사업추진 모니터링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위, 광역지자체, 전문가 - 우수 생활권 인센티브

[그림 2-3]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추진의 절차

(4) 지역행복생활권정책의 차별성

참여정부는 균특법 제정, 균형위 및 균특회계 설치 등 균형발전의 추진을 위한 체계를 정비했다. 그러나 수도 이전을 둘러싼 논쟁, 재원과 사업이 긴밀하게 연계되지 못하고 비효율적인 추진체계를 동원함으로써 정책성고를 높이지 못하였다. 이명박정부는 참여정부의 기능분산형 발전시책을 보완하기 위해 광역경제권의 설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시책을 추진하였다. 광역경제권 정책을 통하여 시·도간의 공동사업 추진을 시도하였고, 지역 간 연계발전의 필요성을 제시한 면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주민의 실제 생활권과의 괴리가 발생하였고, 장기적 성장동력 확보에 치우쳐 오늘의 지역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현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 정부에서는 기존의 광역경제권 및 기초생활권과 비교하여 정책목표, 권역구성 방식, 중점 추진 분야 등에서 차별화를 시도하려고 한다. 특히 지역생활권을 설정하여 정책성과의 주민체감도를 중시하고, 지역 자율과 지자체 간의 협력에 의한 권역구성 및 사업을 시행하며, 맞춤형 사업추진 및 지원체제의 구축이라는 차별성을 보유하고 있다.

〈표 2-1〉 과거정부와 현정부 지역발전정책의 비교

	종전			변경
	균형발전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지역행복생활권
목적	· 혁신주도형 균형발전	· 글로벌 지역경쟁력 제고	· 기본적 삶의 질 보장	▶ 주민행복 + 지역경쟁력 증진
권역 설정	· 정부 주도	· 정부 주도	· 정부 주도	▶ 지자체 자율
권역 단위	· 인위적 권역 설정	· 인위적 권역 설정	· 인위적 권역 설정	▶ 자연적 생활권 반영
추진 기구	· 수도권과 비수도권	· 2~3개 시·도를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지정	· 시·군 단위로 기초생활권을 설정	▶ 주민생활, 서비스 이용 등으로 연계된 복수의 시·군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 없음	▶ 시군(자율적 협의체)
중점 분야	· 지방분권	· 광역선도산업 육성	· 지역유형별 특화발전	▶ 도시재생, 지역공동체 육성
	· 지역균형발전	· 선도산업 인력양성	· 삶의 질·소득 제고	▶ 지역산업·일자리 창출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 광역기반시설 확충	· 생활기반 확충	▶ 지역인재·지방대학 육성
		· 광역성장거점 개발		▶ 문화·환경, 복지·의료

자료 : 지역발전위원회 자료를 재구성

3) 국외 관련 정책과 계획²⁾

국외 관련 정책과 계획에서는 국외의 지역개발 정책 및 중소도시권 정책을 살펴보기 위하여 영국의 RDA와 LEP, 일본의 정주자립권 등의 지역정책, 미국의 MA와 CBSA 정책을 중심으로 사례를 정리하도록 한다.

(1) 영국 RDA와 LEP

■ LEP 도입배경 및 개념

영국의 대표적인 도시권정책인 RDA정책은 우리나라 광역경제권 정책의 형성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던 사례이다. 그러나 영국의 RDA는 2012년부터 LEP(Local Enterprise Partnership)로 전환하였으며 정책의 기본 철학과 내용측면에서 RDA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LEP 도입배경으로 기존의 RDA는 중앙정부 통제하에 운영되어 지역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고, 계획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업무분야를 지역경제 관련 분야로 집중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이 자율적으로 권역을 설정하고 내용적으로도 지역경제 관련 분야에 포커스를 둔 LEP를 도입하게 되었다. 2012. 3 현재 39개의 LEP가 지정되었으며 향후 영국의 지역개발은 LEP를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2) 지역발전위원회(2012), 중소도시권 육성방안 연구 내용을 요약하였음



<RDA권역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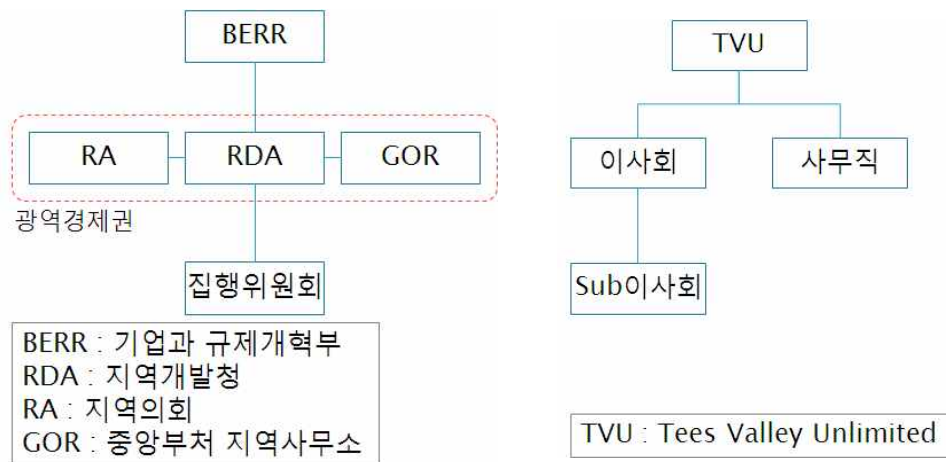
<LEP권역 분포>

[그림 2-4] RDA와 LEP의 지리적 분포

LEP의 도입은 영국내 전 산업분야에 걸쳐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기회가 특정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노력하고 재능 있는 사람은 누구나 성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LEP 추진 전략은 공공에 지나친 의존에서 민간부문의 지속가능한 고용창출을 증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정부는 14억 파운드의 지역개발펀드 (Regional Growth Fund)를 조성하여 민간부문에서 위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LEP 추진체계

RDA와 LEP의 추진체계 비교해 보면 RDA는 중앙조직인 BERR(기업과 규제개혁부)과 지역개발청으로서 RDA를 두고 지역의회 등 중앙과 수직적 관계에 있으나, LEP의 경우는 LEP 중의 하나인 티즈벨리의 사례에서와 같이 유한회사 개념의 TVU(Tees Valley Unlimited)를 설치하여 지역 주도의 추진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림 2-5] RDA와 LEP의 추진체계 사례

RDA와 LEP의 주요 차이점으로 RDA에 비해 LEP는 민간 주도적이고 친 기업적 정책을 표방하고 있으며, RDA는 운영위원회의 위원과 지역위원을 중앙정부에서 임명하는 형태이지만, LEP는 운영위원회의 위원들 중 50% 이상을 지역기업인에서 선출하고, 지역기업인이 의장직을 수행하도록 한다.

LEP는 기존 RDA보다 규모가 작으며 몇 개의 카운티가 연합하여 구성되고 있다. RDA의 경우처럼 중앙정부에서 권역을 설정하지 않고, LEP는 지역 간에 협의를 통해 LEP의 경계를 정한 후,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다. RDA는 중앙정부의 일괄적인 예산배분이 이루어지나, LEP는 사업계획에 따른 경쟁입찰 방식으로 예산(지역성장기금)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RDA의 기능 중에서 지역경제 관련 분야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LEP의 예상되는 한계점으로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 민간위주의 LEP가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경쟁입찰 방식의 예산지원으로 소권역 LEP들 간의 경쟁과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정책의 효력이 미치는 행정적 권역의 불일치로 정책의 실효성이 하락 할 수도 있다.

(2) 일본 : 정주자립권 정책

■ 정주자립권의 개요

일본의 정주자립권 정책은 인구의 감소, 고령화에 따라 지방권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을 각지에 형성하고, 지방권에서 3대 도시권으로 인구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정주자립권의 추진 개념은 집중과 네트워크 형성이며, 주요 목적은 ①협정을 통한 기능의 강화, ②권역내외의 연계강화, ③중심시의 권역 관리능력의 강화 이다. 정책의 추진은 시정촌(市町村)이 주체가 되어 중심시의 도시기능과 주변 시정촌의 농림수산업, 자연환경, 역사, 문화 등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고, NPO나 기업 등 민간과 협력하여 추진된다. 이때 각 주체별 역할을 포함하여 상호 역할을 분담하며,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한 생활기능을 확보하여 지방의 정주인구를 촉진시키는 계획이다. 이러한 정주자립권 정책은 2009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전개하였으며, 2012년 4월 현재 77개시가 중심시와 65권역의 정주자립권이 형성되었다.

<표 2-2> 일본의 정주자립권 현황 (2012년 4월19일 현재)

구 분	갯수	내용
선언중심시	77시	중심시 선언한 시의 갯수
정주자립권	65권역	정주자립권 형성 협정의 체결 또는 정주자립권 형성방침의 책정에 의해 형성된 정주자립권의 수
비전을 마련한 시	64시	정주자립권 공생비전을 책성한 선언중심시의 수

출처 :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 (<http://www.soumu.go.jp/>)

■ 정주자립권 내용 및 형성 절차

정주자립권은 지방의 중심시와 주변 시정촌이 스스로의 의사로 1대 1의

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으로 형성된다. 권역마다 '집약과 네트워크'의 개념에 기초하여 중심에는 권역전체의 생활에 필요한 도시기능을 집약적으로 정비하고, 주변 시정촌에서 필요한 생활기능을 확보하도록 한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민간투자를 촉진, 내수 확대 방안, 분권형 사회에 어울리는 안정된 지방권 형성, 인구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인구유출 방지를 위하여 3대 도시권의 구역 밖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주자립권 형성을 위한 중심지의 기준은 인구 5만명 이상으로서 주야간 인구비율이 1이상이 기준이 된다. 그리고 중심시와 연계하려는 의사를 가진 주변 시정촌 중에서 중심시로 통근통학이 10% 이상 되는 경우 등을 판단하여 주변 시정촌은 중심시와 정주자립권 형성 협정을 맺게 된다. 그후 중심시는 주변 시정촌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주자립권의 장래상과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포함한 '정주자립권 공생비전'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출처 :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 (<http://www.soumu.go.jp/>) (그림은 내용적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함)

[그림 2-6] 정주자립권 형성 및 추진절차

■ 정주자립권 형성의 특징 및 추진 방법

정주자립권의 특징으로 중심시가 5~10만명일 경우는 '정주자립권'이 되고, 중심시가 중핵시나 특례시인 경우는 '고도정주자립권'으로 구별된다. 정주자립권의 중심시는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도시기능으로, 고도정주자립권의 중심시는 고도의료(뇌질환, 심장병 등)병원, 대학, 백화점 등 고도의 도시기능을 갖춘 중심지로 구분된다. 생활공간의 다양성과 중층성이 허용되며, 즉 주변지역과 합의에 의해 현의 경계를 뛰어넘어 정주자립권을 형성할 수 있다. 중심시와 주변 시정촌은 자의에 의해 협약을 맺음으로서 권역을 결정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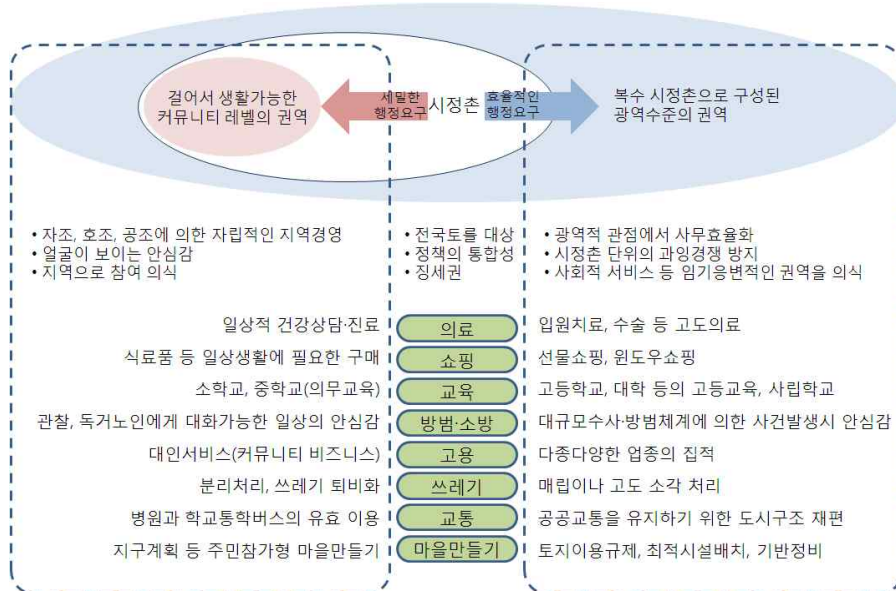
주요 분야별 협정 내용으로는 생활기능 강화에 관련된 분야로, 주로 의료, 복지, 교육, 토지이용, 산업진흥이 중심이 된다. 연계와 네트워크 강화에 관한 분야로는 지역공공교통, 디지털 격차 (digital divide)의 해소를 위한 ICT 인프라 정비, 도로 등의 교통인프라정비, 지역의 생산자와 소비자등의 연계에 의한 지산지소(地產地消, 현지생산-현지소비의 의미), 지역내외의 주민과 교류 촉진, 기타 네트워크 강화와 관련된 기능들로 이루어진다.

■ 주체별 기능분담

민간은 생활기능의 및 권역 내 고용을 확보 측면에서 역할을 담당한다. 중심시가 주변의 시정촌과 역할을 분담하고, NPO나 기업 등 민간과 연계하여 생활기능의 확보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인구정주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중심시와 시정촌의 역할분담으로 중심시의 역할은 집적성이 강한 대규모 상업, 오락기능, 중핵적인 의료기능, 생활관련 서비스 제공 기능 등 행정·민간 상관없이 생활에 필요한 도시기능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정촌의 역할로는 환경, 지역커뮤니티, 식료생산, 역사, 문화면의 역할을 수행한다.

■ 성과 및 특징

주민의 생활 실태를 바탕으로 시정촌 주도의 추진으로 다양한 권역의 형태와 규모가 나타나고 있으며, 권역별 인구규모는 6만에서 50만 정도까지 다양하게 구성되고 있다. 권역별 추진사업의 특징으로 모든 정주자립권에서 지역의료분야를 공통적으로 추진정책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산업진흥, 지역 공공교통 분야도 전 권역에서 추진 중에 있다.



[그림 2-7] 시정촌의 역할

(3) 미국 : MA와 CBSA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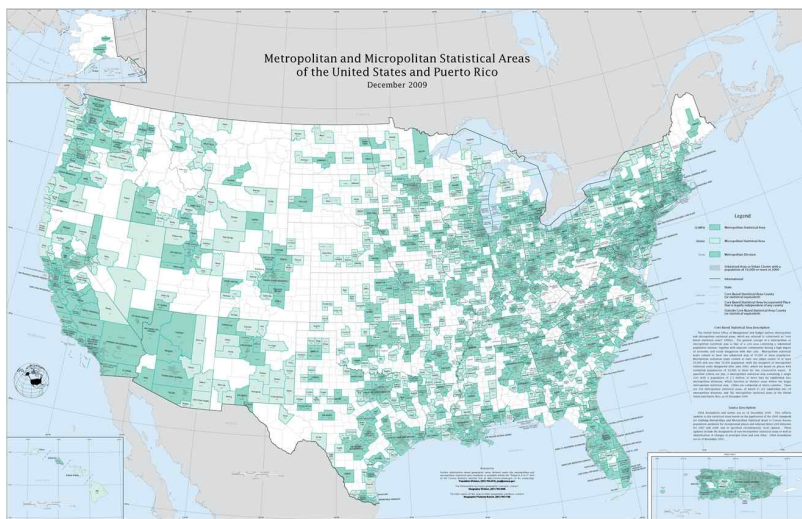
■ MA 추진과정

미국 도시권 정책의 변화로서 MA(Metropolitan Area)는 미국의 국가변영을 위한 생산적·포괄적·지속적 성장 달성을 목적으로 1990년 설정된 도시권 단위이다. MA는 미국 뿐 만 아니라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 프랑스, 일본 등에서도 사회·경제·정치적으로 지역을 구분하는 단위로 사용되고 있다.

MA의 주요 특징으로 도심 스프롤 현상에 대응하여 광역적 성장관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등장하였으며, 인구 및 고용증가와 압축적인 광역발전을 목표로 한다. 광역협의회(Regional Council)을 설립하여 추진하고, 다수의 지자체, 주정부, 항만청, 기업 등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광역 협의회는 지자체간 협약(Interlocal Agreement)을 통하여 광역권 계획 수립 및 추진권한을 부여하고, 행정구역 밖에서의 개발 공동관리 관련 사항을 관리하게 된다. 각 도시권의 정책 추진기구 구성 및 권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지방세·국가보조금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 CBSA의 도입

미국의 관리예산국 OMB(U.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는 공식적으로 사용하던 MA를 대신하여, 2000년 12월에 CBSA(Core Based Statistical Area)를 도입하였다. CBSA는 2000년 OMB에 의해 도입된 후, 2003년에 2000년 센서스 자료를 토대로 최초로 확정되었다. 2013년에 2010년 센서스 자료로 재확정할 예정이며, 2009년 12월 942개의 CBSA가 확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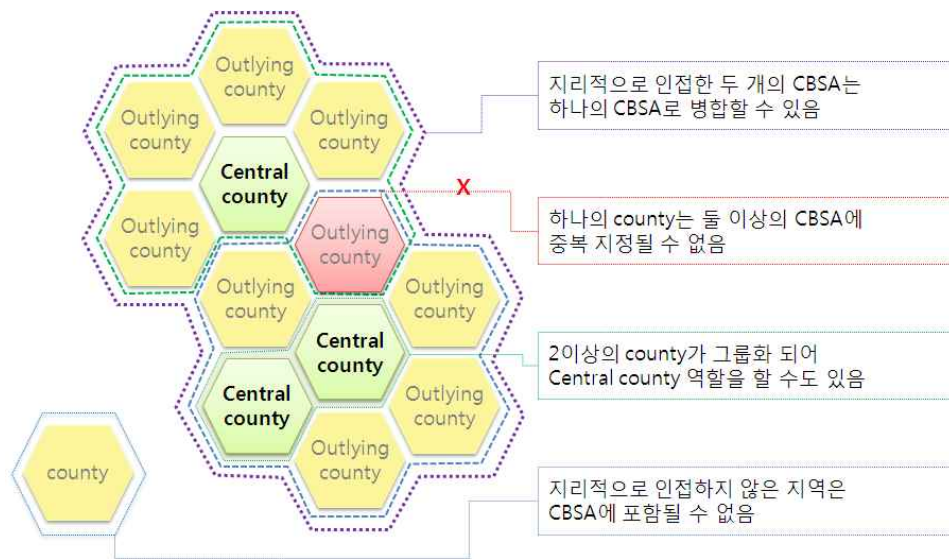
[그림 2-8] 미국 CBSA (942개)

CBSA의 주요특징으로 인구 1만명 이상인 카운티 중에 상주인구가 50% 이상인 지역이 중심 카운티(central county)로 지정되며, 둘 이상의 카운티가 연합하여 이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하나의 중심 카운티로 인정된다. 지리적으로 중심 카운티와 인접한 지역 중에서 총 취업자의 25% 이상이 중심 카운티에 취업한 경우, 또는 중심 카운티 취업자 중 25% 이상이 해당 인접 지역으로 출근한 경우, 그 지역은 주변 카운티(outlying county)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림 2-9] CBSA 구성 및 지정 과정

하나의 카운티는 둘 이상의 CBSA에 중복으로 지정될 수 없고, 통근 기준으로 가장 높은 CBSA에 속하게 되며, 지리적으로 인접한 두 개의 CBSA는 하나의 CBSA로 병합할 수 있다. 이 경우 두 지역 중 하나의 중심 카운티가 나머지 중심 카운티까지 주변 카운티로 포함해야 한다.



* CBSA의 내용을 참고하여 개념을 도식화하였음

[그림 2-10] CBSA 확정 조건

■ 미국 국제개발기구(AID)의 중소도시 육성 지원 방향³⁾

Rondinelli는 중소도시개발을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으로서는 첫째, 일정 규모에 도달한 기존 중간도시의 발전을 강화시키는 방향, 둘째, 소도시들의 성장을 유도 촉진시켜 다양한 형태의 중간도시로 육성하는 방향, 셋째, 국가도시체계 내의 모든 도시들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중소도시간, 대도시와 중소도시간의 경제, 사회, 정치적 연계를 강화시키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기존 중규모 도시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원 서비스 강화, 물리적 인프라 개선, 경제기반 및 고용구조 강화를 위한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회서비스 향상, 지자체 서비스 및 지원시설의 향상, 정주환경 개선, 토지

3) Rondinelli Dennis A.(1983). 「Secondary Cities in Developing Countries」 SAGE.

이용과 개발의 효과적 관리, 교통 서비스와 연계기능 향상, 서비스업 분야 육성 및 서비스경제의 다변화 추구, 시장기능과 연계강화, 지역 중소기업과 주력산업의 확대 및 다변화 등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중소도시 주변 농촌지역에 대한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하여 대도시 기능 및 인구 유입을 위한 신도시 또는 특별기능 도시로 적극 개발하고, 농어촌 서비스 중심에서 벗어나 중소도시 경제의 다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광역교통의 결절지점이나 중간지점에 위치한 중소도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중소도시와 대도시 및 주변 농촌마을과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교통연계를 강화,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 통로기능 담당, 산업간 전·후방 연계 강화, 통신 및 수도·전기·가스시설 연계,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확장, 공공서비스 및 행정적 연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4) 독일 : Metropolitan Regions

독일은 16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서 경쟁력이 있는 도시를 기준으로 대도시권(city-region)이 형성되어 있다. 1997년 7개의 metropolitan regions를 설정하였고, 2005년에 4개 지역을 추가하여 총 11개의 metropolitan regions가 설정되었다. 그림과 같이 독일 전역이 포함되지 않고, 기존에 형성된 도시권만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메트로폴리탄 지역은 둘 이상의 주에 걸쳐 지정되기도 하고, 두 개의 metropolitan areas에 중복 지정된 지역도 있으며, 인접하지 않은 다수의 지역으로 형성된 경우도 있다.



[그림 2-11] 독일 Metropolitan Areas

(5) 프랑스 : 도시공동체(communauté urbaine)와 Metropo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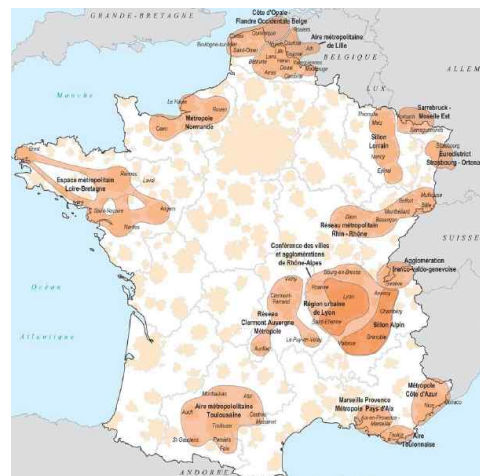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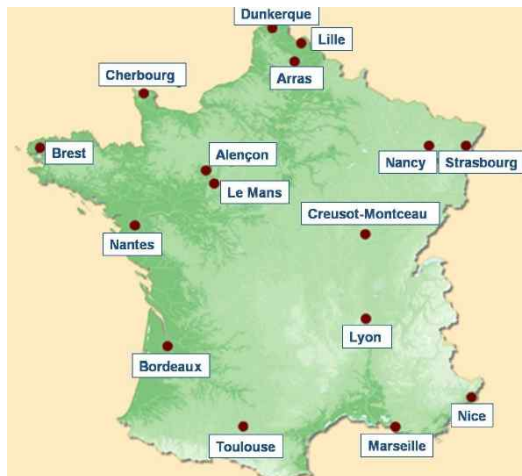
■ 도시공동체(communauté urbaine)

도시공동체(communauté urbaine)는 1966년 프랑스 의회에 의해 보르도, 릴, 리옹, 스트라스부르의 네 개 대도시 지역이 최초의 도시공동체로 만들어졌고, 대도시 지역과 그와 연결된 외곽지역의 협력과 공동관리를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시공동체는 해당 도시의 비례대표로 구성된 공동체 의회(conseil communautaire)에 의해 관리되며, 의회구성원은 각 지역의 의

회에 의해 선출된다. 경제·사회·문화정비사업, 도시계획, 주택정책, 계층간 융화정책, 공공서비스관리, 환경보전, 생활환경사업 등 6개 부문에 대한 공동계획을 수립 관리 기능을 하고 있다. 공동체 형식으로 직접 징수하는 지방세에 기초하여 자율적인 재정권을 가지며, 별도로 경상교부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 메트로 폴(Métropole)

2002년 국토계획·발전부처간위원회(CIADT)에서 ‘유럽에서의 프랑스 메트로폴 제공을 강화하는 국가 전략원칙’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경제·사회·문화 발전이 결합된 메트로폴을 통하여 글로벌 차원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지자체 개혁(안)이 제시되었다. 그 후 2009년 발라뒤(Balladur) 보고서에서 2014년까지 11개 메트로폴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출처 : 국토연구원, 글로벌 도시권 육성 방안 연구(Ⅰ), 2010

[그림 2-12] 프랑스 도시공동체(좌)와 메트로폴 구상(우)

(6) 국외 도시권 정책의 시사점

해외의 도시권 정책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목적과 기준이 명확하고 단순하게 설정되어 있었고, 민간의 참여와 주체별 명확한 역할분담, 공모형식의 예산분담을 통한 효율성 제고, 지역중심의 계획 추진으로 있다.

도시권 정책은 단순하고 명확한 목적과 기준을 통하여 복수의 지역이 권역으로 형성되어 추진되고 있다. 영국의 LEP의 경우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자율적인 권역 설정이 가능하고, 미국의 CBSA는 지역 통근 비중을 기준으로 한 통근권을 중심으로 지역간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 정주생활권의 경우 목적은 인구감소,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며, 권역 형성을 위한 기준도 비교적 단순하고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계획 추진시 민간부분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주체별 명확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 LEP는 민간중심, 지역의 기업이 중심이 되어 지역경제 측면의 지역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정주생활권의 경우에도 권역 내 고용 측면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중심의 사업주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NPO 등 계획에 참여하는 주체별 상호 역할 분담을 통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예산분배 시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영국의 경우 기존 일괄적인 예산배분 시스템에서 사업계획에 따른 경쟁시스템으로 변화하여 지역간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역이 중심이 된 지역개발로 변화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기존의 중앙정부에서 운영위원을 임명하던 방식에서 지역 내 기업인들이 중심이 된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일본의 정주자립권의 경우 시정촌(市町村)이 주체가 되어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주변지역과 합의에 의하여 권역이 형성된다.

권역형성 및 권역 내 위계에 따른 시설 공급으로 예산의 중복을 방지하고 시설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일본의 정주자립권의 경우에는 권역 내 도시 위계에 따라 공급되는 서비스 수준을 차별화하여 공동이용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의 중소도시 육성방안의 경우에도 대도시 혹은 중소도시와 주변 농촌마을간 산업간 연계, 공공서비스의 공동이용 및 연계 방안이 추진되어 시설 및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에도 지역간 권역을 형성하여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설의 공동이용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표 2-3> 국가별 도시권 정책 종합비교표

사 례		추진 연도	규모		주 목적	주도적 추진체 계	재 원	권역설정 특징
			공간	인구 (중심도시 기준)				
한국	광역경제권	2008- 	광역	53만 ~23백만	경제	별도조직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지식경제부 지원 특별회계 조성	행정구역 경계로 일괄 지정
	기초생활권	2008- 	기초	7천 ~107만	생활	지역 (지자체)	포괄보조금제 운영 및 차등 인센티브 지급	개별 기초지자체를 하나의 기초생활권으로 봄
영 국	RDA	1999-  2012	광역	585만 ~864만	경제	별도조직 (개발청)	각 부처 조달·관리 => 포괄예산제로 변경(2002)	일괄 지정 (현재 LEP로 변경)
	LEP	2012- 	지역	50만 ~800만	경제	지역 (파트너십)	지역개발기금 조성 후 경쟁 입찰	지역에서 권역 제안
일본	정주자립권	2009- 	지역	(5만 이상)	생활 (지방경쟁력 강화)	지역 (중심시)	정부 부처 지원	지역에서 권역 제안
미 국	MA	 1990-2000	광역	(5만 이상)	행정편의	중앙	지방세, 국가보조금 등	일괄 지정 (현재 CBSA로 변경)
	CBSA	2000- 	지역	(1만 이상)	행정편의	중앙	-	일괄 지정
독 일	metropolitan regions	 1997-	광역	240만 ~1150만 (50만 이상)	경제	별도조직 (권역계획협의회, 광역권위원회, 경제촉진위원회)	지자체 출연금, 정부 보조금 등	자생적으로 발생
프 랑스	도시공동체	 1966-	광역	50만 이상	경제	지역 (도시권의회, 사무국)	법인세, 국가보조금, 공공서비스제공수입, 공채, 보조금 등	처음에는 법률에 의해, 이후 자율적으로 설정
	Métropole	2010- 	지역	45만 이상	경제 (지역경쟁력 강화)	-	-	대도시와 지리적 연결된 주변 지역을 통합

* RDA : Regional Development Agency, LEP : Local Enterprise Partnership, MA : Metropolitan Area, CBSA : Core Based Statistical Areas

** 공간규모 기준 : 기초(시군단위), 지역(몇개의 기초지자체), 광역(도 정도), 초광역(도보다 넓은 지역)

자료: 지역발전위원회(2012), 중소도시권 육성방안 연구.

제3장 생활권별 특성 분석

1. 중심지 계층구조 분석

중심지 계층구조 분석은 생활권별 읍면동의 지역적 위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분석되며, 분석은 각 생활권별로 이루어진다.

1) 분석방법

중심지 계층구조 분석은 중심기능의 규모(중심성) 차이에 의해 나타나는 중심지 계층을 구분하고 지역적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다. 중심성 지수는 일정 중심지가 주변의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크기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서 제시하는 지역의 위계와 의미가 같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심지의 인구규모, 중심기능 유형의 수, 중심기능의 시설수(기능체수)를 변수로 이용한다(박영환, 1975). 본 연구에서의 분석방법은 데이비스(W. K. D. Davies)의 기능지수법을 사용하여 기능지수를 구하고, 군집분석에 의하여 계층을 구분한다.⁴⁾ 중심기능의 도출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도출된다.

$$C = \frac{t}{T} \times 100 = \frac{1}{T} \times 100 \quad \dots\dots\dots \text{식(1)}$$

C : 기능 t 의 입지계수

t : 기능 t 의 하나의 시설수

T : 중심지체계 내에 있는 기능 t 의 모든 시설수

각 중심지가 보유하는 일정 기능유형의 시설수에 그 기능의 입지계수를 곱하여 그 중심지의 일정 기능유형이 가지는 중심성의 양을 얻은 후 그 중심지의 총체적인 중심성인 기능지수를 구한다.

4) 일정 장소에서 나타나는 어떤 기능의 중심성의 양은 그 장소에 입지한 시설수에 비례하며, 연구지역 전체가 폐쇄시스템(closed system)에 있다는 조건 아래 특정기능의 시설수가 많을수록 그 기능의 중심성이 낮은 것으로 간주하게 됨(김정연, 1999)

$$F_a = \sum A_t \times C_t \quad \dots\dots\dots \text{식(2)}$$

C_t : 기능 t 의 입지계수

A_t : 기능 t 의 시설수

F_a : 중심지 A 의 기능지수

2) 이용자료

분석 자료는 한국전화번호부(주)에서 발행하고 있는 2013년도 전화번호부를 활용하였다. 지역의 중심성을 나타낼 수 있는 업종들을 구분한 후, 시·군별 동부지역 및 읍·면별로 자료를 구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1〉 중심성을 나타낼 수 있는 업종의 구분(2013년 전화번호부)

번호	전화번호부 시설명	번호	전화번호부 시설명	번호	전화번호부 시설명
1	PC방	26	병원(종합)	51	자전거
2	가구	27	병원/의원	52	잡화점
3	가전제품수리(전파사)	28	보일러	53	제과점
4	가전제품판매	29	사료	54	조명기구
5	건강식품제조/판매	30	사무기기	55	주방가구
6	건강원	31	사진	56	주방기구
7	귀금속/시계/장신구/금은방	32	사회복지시설	57	철물점
8	금융업(새마을금고/신협/은행)	33	서점	58	침구류판매
9	꽃집(화원)	34	세탁소	59	카센타
10	내의	35	술집	60	커튼
11	노래방	36	슈퍼마켓	61	커피전문점
12	농기구	37	신발판매	62	컴퓨터/주변기기
13	농약판매	38	아동복/유아복	63	컴퓨터수리
14	다방	39	안경점	64	통신/전화서비스
15	닭집/치킨센터	40	약국	65	통신관련서비스
16	당구장	41	예식장	66	패스트푸드
17	동물병원	42	오토바이/부품-판매/수리	67	편의점
18	등산용품/장비	43	우유/분유	68	피부미용
19	떡/한과/유과	44	우체국/우편취급소	69	학교-초등학교
20	목공소	45	운동기구/경기용품	70	학교-대학교
21	목욕탕/사우나/찜질방	46	유리/거울	71	학교-중.고등학교
22	문구/사무용품	47	음식점(?)	72	화장품판매
23	미용실	48	의류	73	관공서
24	방앗간/정미소	49	이발소	총 73개 시설	
25	병원(일반)	50	자동차부품판매		

자료 : 오명택·김정연, 2014,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워크숍, 충남발전연구원 지역생활권연구회 워크숍, (CDI 세미나 2014-03)

(1) 천안·아산 중추도시생활권

천안·아산의 동·읍·면별 중심지 기능지수를 도출하여, 군집분석을 실행한 후 계층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총 5개의 군집으로 계층을 구분하였다. 제1계층은 천안시 동부지역으로서 중심성 비율이 전체지역의 68.38%에 달해 천안·아산 중추도시생활권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높은 중심지 기능을 나타내고 있다. 제2계층의 경우 아산시 동부지역으로 11.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천안시 동부지역에 비해 격차가 매우 크나 천안시 동부에 이어 부차적으로 높은 중심성 비율을 나타내었다. 제1~2계층 동부지역의 중심지가 전체의 80.23%를 차지하고 있으며, 두 지역 모두 시청소재지로서 천안·아산 중추도시생활권의 가장 중심적인 거점지역임을 알 수 있다. 제3계층의 경우 천안시 성환읍과 아산시의 배방읍으로 중심성 비율은 각각 4.34%, 3.08%를 나타내고 있으며, 천안시와 아산시의 읍·면 중 높은 중심성을 보이고 있다. 제4계층의 경우 천안시 병천면·직산읍, 아산시 둔포면으로 전체 계층 비율은 4.83%로 나타나 생활권의 공간적인 측면에서 거점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이들 지역은 중심지 기능지수는 작으나 도시기본계획 중 생활권의 중심지역이나 공간구조 상 거점지역으로 꼽을 수 있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기능지수가 군집을 형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계층의 경우 0.08%~1.04%로 광역적 차원에서 격차가 미미하여 구분의 의미가 없을 만큼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천안 아산 생활권

계층	서열	행정구역	중심지 기능지수	중심성 비율(%)	계층 비율(%)
1	1	천안시 동부	4,923.69	68.38	68.38
2	2	아산시 동부	852.77	11.84	11.84
3	3	천안시 성환읍	312.57	4.34	7.43
	4	아산시 배방읍	222.11	3.08	
4	5	천안시 병천면	126.00	1.75	4.83
	6	천안시 직산읍	118.38	1.64	
	7	아산시 둔포면	103.03	1.43	
5	8	천안시 성거읍	74.84	1.04	7.52
	9	천안시 풍세면	65.28	0.91	
	10	천안시 입장면	54.98	0.76	
	11	아산시 신창면	49.73	0.69	
	12	아산시 도고면	43.49	0.60	
	13	아산시 인주면	39.99	0.56	
	14	아산시 영인면	34.41	0.48	
	15	아산시 탕정면	29.74	0.41	
	16	아산시 선장면	23.98	0.33	
	17	천안시 목천읍	21.89	0.30	
	18	천안시 수신면	19.37	0.27	
	19	아산시 송악면	19.27	0.27	
	20	천안시 성남면	16.49	0.23	
	21	아산시 음봉면	13.38	0.19	
	22	천안시 광덕면	11.48	0.16	
	23	천안시 동면	10.34	0.14	
	24	천안시 북면	7.19	0.10	
	25	아산시 염치읍	5.59	0.08	

(2) 공주·부여·청양 생활권

공주-부여-청양의 동·읍·면별 중심지 기능지수를 도출하여, 군집분석을 실행한 후 계층구조를 분석한 결과, 총 6개의 군집으로 계층을 나눌 수 있다. 제1계층은 공주시 동부지역으로서 중심성 비율이 전체지역의 44.19%에 달해 공주-부여-청양 지역행복생활권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높은 중심지 기능을 나타내고 있다. 제2계층의 경우 부여군 부여읍으로 20.56%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주시 동부에 이어 높은 중심성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제3계층의 경우 청양군 청양읍으로 10.49%를 나타내고 있으며, 시·군청 소재지로서

〈표 3-3〉 공주·부여·청양 생활권

계층	서열	행정구역	중심지 기능지수	중심성 비율(%)	계층 비율(%)
1	1	공주시 동부	3,225.60	44.19	44.19
2	2	부여군 부여읍	1,500.63	20.56	20.56
3	3	청양군 청양읍	765.57	10.49	10.49
4	4	공주시 유구읍	331.62	4.54	4.54
5	5	부여군 규암면	170.64	2.34	7.37
	6	부여군 홍산면	146.55	2.01	
	7	청양군 정산면	129.06	1.77	
	8	부여군 은산면	91.73	1.26	
6	9	공주시 의당면	77.75	1.07	12.86
	10	부여군 임천면	73.13	1.00	
	11	공주시 탄천면	67.85	0.93	
	12	부여군 외산면	66.19	0.91	
	13	부여군 석성면	59.04	0.81	
	14	공주시 신평면	55.71	0.76	
	15	공주시 정안면	49.88	0.68	
	16	공주시 이인면	39.23	0.54	
	17	공주시 사곡면	37.95	0.52	
	18	공주시 계룡면	35.83	0.49	
	19	청양군 화성면	35.48	0.49	
	20	부여군 장암면	33.94	0.46	
	21	공주시 우성면	33.43	0.46	
	22	부여군 세도면	28.97	0.40	
	23	청양군 장평면	28.71	0.39	
	24	부여군 구룡면	24.78	0.34	
	25	청양군 청남면	24.14	0.33	
	26	청양군 목면	22.10	0.30	
	27	청양군 대치면	20.99	0.29	
	28	부여군 초촌면	19.06	0.26	
	29	공주시 반포면	18.78	0.26	
	30	부여군 양화면	16.07	0.22	
	31	부여군 내산면	13.19	0.18	
	32	청양군 비봉면	12.69	0.17	
	33	청양군 운곡면	11.49	0.16	
	34	부여군 충화면	11.35	0.16	
	35	청양군 남양면	10.94	0.15	
	36	부여군 옥산면	5.49	0.08	
	37	부여군 남면	4.47	0.06	

높은 비율을 보이거나 공주시 동부지역이나 부여읍에 비해 중심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1~3계층의 총 3개 중심지가 전체의 75.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 모두 시·군청 소재지이며, 이들 지역의 가장 중심적인 거점지역이다. 제4계층의 경우 공주시 유구읍으로 4.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군청 소재지 다음으로 부차적인 중심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제5계층의 경우 1.26%~2.34%로 부여군 규암면·홍산면·은산면, 청양군 정산면 등 총 4개 면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중심지 기능지수는 작으나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중 생활권의 중심지역이나 공간구조상 거점지역으로 꼽을 수 있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기능지수가 군집을 형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6계층은 광역적 차원에서 격차가 미미하여 구분의 의미가 없을 만큼 작게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지역 전체에서 차지하는 기능지수 비율이 0.06%~1.07%로 기능지수가 매우 낮고, 중심지로서의 특성이 미약한 지역으로서 총 29개의 지역이다.

(3) 보령·서천 생활권

보령·서천의 동·읍·면별 중심지 기능지수를 도출하여, 군집분석을 실행한 후 계층구조를 분석한 결과, 총 4개의 군집으로 계층으로 구분되었다. 제1계층은 보령시 동부지역으로서 중심성 비율이 전체지역의 60.34%에 달해 보령·서천 생활권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높은 중심지 기능을 나타내고 있다. 제2계층의 경우 서천군 서천읍으로 15.28%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령시 동부지역에 비해 격차가 매우 크나 서천군의 군청소재지로서 서천군에서 가장 높은 중심성 비율을 보이고 있다. 제1~2계층의 중심지가 전체의 75.67%를 차지하고 있으며, 두 지역 모두 시·군청소재지로서 보령·서천 생활권의 가장 중심적인 거점지역이다. 제3계층의 경우 서천군 장항읍과 보령시 웅천읍으로서 중심성 비율은 각각 8.00%, 4.28%를 나타내고 있으며, 3계층은 전체의 12.28%로 중심성은 작으나 보령시 동부지역과 서천군 서천읍 다음의 중심지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4계층의 경우 0.12%~2.07%로 광역적 차원에서 격차가 미미하여 구분의 의미가 없을 만큼 작게 나타났다.

〈표 3-4〉 보령·서천 생활권

계층	서열	행정구역	중심지 기능지수	중심성 비율(%)	계층 비율(%)
1	1	보령시 동부	4408.58	60.39	60.39
2	2	서천군 서천읍	1115.77	15.28	15.28
3	3	서천군 장항읍	584.21	8.00	12.28
	4	보령시 웅천읍	312.35	4.28	
4	5	서천군 한산면	151.46	2.07	12.04
	6	서천군 비인면	95.39	1.31	
	7	보령시 주산면	78.30	1.07	
	8	보령시 청소면	71.53	0.98	
	9	보령시 천북면	68.30	0.94	
	10	서천군 판교면	65.68	0.90	
	11	보령시 청라면	45.23	0.62	
	12	보령시 성주면	39.48	0.54	
	13	보령시 주교면	34.11	0.47	
	14	서천군 마산면	32.90	0.45	
	15	서천군 서면	31.79	0.44	
	16	보령시 주포면	30.75	0.42	
	17	보령시 오천면	28.12	0.39	
	18	보령시 남포면	22.03	0.30	
	19	서천군 문산면	20.44	0.28	
	20	서천군 마서면	12.04	0.16	
	21	서천군 화양면	11.41	0.16	
	22	서천군 기산면	10.92	0.15	
	23	서천군 시초면	10.38	0.14	
	24	서천군 종천면	10.25	0.14	
	25	보령시 미산면	8.57	0.12	

(4) 서산·당진·태안 생활권

서산·당진·태안의 동·읍·면별 중심지 기능지수를 도출하여, 군집분석을 실행한 후 계층구조를 분석한 결과, 총 5개의 군집으로 계층을 구분되었다. 제1계층은 서산시 동부지역과 당진시 동부지역으로서 중심성 비율이 각각 36.93%, 24.90%로 나타났다. 제2계층의 경우 태안군 태안읍으로 11.5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1~2계층의 총 3개 중심지가 전체의 73.3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지역 모두 시·군청 소재

지이며, 각 시·군의 가장 중심적인 거점지역이라 할 수 있다. 제3계층의 경우 당진시의 합덕읍이 5.89%를 나타내고 있으며, 시·군청소재지를 제외한 지역 중 가장 높은 중심성 비율을 나타내었다. 제4계층의 경우 2.49~2.82%로 태안군 안면읍, 서산시 대산읍·해미면 순으로 총 3개 읍·면지역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지역은 중심지 기능지수는 작으나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의 중심지역으로 공간구조 상 거점지역이라 할 수 있다.

<표 3-5> 서산·당진·태안 생활권

계층	서열	행정구역	중심지 기능지수	중심성 비율(%)	계층 비율(%)
1	1	서산시 동부	2,695.99	36.93	61.83
	2	당진시 동부	1,817.71	24.90	
2	3	태안군 태안읍	843.32	11.55	11.55
3	4	당진시 합덕읍	430.07	5.89	5.89
4	5	태안군 안면읍	205.51	2.82	7.87
	6	서산시 대산읍	187.36	2.57	
	7	서산시 해미면	181.49	2.49	
5	8	당진시 신평면	109.20	1.50	12.86
	9	서산시 운산면	93.81	1.29	
	10	당진시 송악읍	73.01	1.00	
	11	서산시 부석면	69.13	0.95	
	12	서산시 고북면	65.19	0.89	
	13	서산시 음암면	52.96	0.73	
	14	당진시 고대면	44.68	0.61	
	15	서산시 인지면	43.65	0.60	
	16	당진시 면천면	43.29	0.59	
	17	서산시 지곡면	37.62	0.52	
	18	당진시 순성면	36.76	0.50	
	19	태안군 원북면	34.54	0.47	
	20	당진시 석문면	29.60	0.41	
	21	태안군 소원면	29.16	0.40	
	22	당진시 대호지면	28.03	0.38	
	23	태안군 근흥면	24.90	0.34	
	24	태안군 고남면	23.31	0.32	
	25	태안군 남면	21.69	0.30	
	26	서산시 성연면	18.58	0.25	
	27	당진시 정미면	17.98	0.25	
	28	태안군 이원면	16.79	0.23	
	29	당진시 우강면	12.56	0.17	
	30	당진시 송산면	12.13	0.17	

(5) 논산·계룡·금산 생활권

논산·계룡·금산의 동·읍·면별 중심지 기능지수를 도출하여, 군집분석을 실행한 후 계층구조를 분석한 결과, 총 5개의 군집으로 계층을 나눌 수 있다. 제1계층은 논산시 동부지역으로서 중심성 비율이 전체지역의 39.33%에 달해 논산·계룡·금산 생활권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높은 중심지 기능을 나타내고 있다. 제2계층의 경우 금산군 금산읍으로 19.72%를 차지하고 있으며, 논산시 동부에 이어 높은 중심성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제1~2계층의 총 2개 시·군청 소재지가 전체의 59.05%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룡시의 시청 소재지는 이들 지역에 비해 중심성 비율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3계층의 경우 6.65~7.17%의 중심성으로 논산시 연무읍·강경읍, 계룡시 엄사면으로 나타나 논산시 연무읍과 강경읍은 논산시에서 부차적인 중심성을 나타내고 있다. 계룡시는 엄사면이 계룡시에서 가장 높은 중심성을 보이며, 제3계층이 전체 지역에서 차지하는 계층 비율은 20.53%로 나타났다. 제4계층의 경우 2.13~3.61%로 계룡시 금암동·신도안면, 금산군 추부면, 논산시 연산면으로 나타나며, 제4계층이 전체 지역에서 차지하는 계층 비율은 11.27%이다. 마지막으로 제5계층의 경우 광역적 차원에서 격차가 미미하여 구분의 의미가 없을 만큼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 전체에서 차지하는 기능지수 비율이 0.06%~1.21%로 기능지수가 매우 낮고, 중심지로서의 특성이 미약한 지역으로서 총 19개의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표 3-6〉 논산·계룡·금산 생활권

계층	서열	행정구역	중심지 기능지수	중심성 비율(%)	계층 비율(%)
1	1	논산시 동부	2,870.77	39.33	39.33
2	2	금산군 금산읍	1,439.91	19.72	19.72
3	3	논산시 연무읍	523.09	7.17	20.53
	4	계룡시 엄사면	490.28	6.72	
	5	논산시 강경읍	485.10	6.65	
4	6	계룡시 금암동	263.18	3.61	11.27
	7	금산군 추부면	228.02	3.12	
	8	논산시 연산면	176.00	2.41	
	9	계룡시 신도안면	155.81	2.13	
5	10	논산시 양촌면	88.05	1.21	9.15
	11	금산군 복수면	67.20	0.92	
	12	논산시 부적면	64.85	0.89	
	13	논산시 가야곡면	58.99	0.81	
	14	논산시 광석면	50.15	0.69	
	15	금산군 진산면	45.55	0.62	
	16	논산시 은진면	40.84	0.56	
	17	논산시 노성면	33.09	0.45	
	18	계룡시 두마면	32.50	0.45	
	19	금산군 제원면	30.32	0.42	
	20	금산군 부리면	28.70	0.39	
	21	논산시 상월면	28.69	0.39	
	22	논산시 채운면	21.18	0.29	
	23	논산시 성동면	20.42	0.28	
	24	논산시 벌곡면	19.47	0.27	
	25	금산군 남일면	13.60	0.19	
	26	금산군 남이면	10.71	0.15	
	27	금산군 군북면	9.52	0.13	
	28	금산군 금성면	4.02	0.06	

(6) 홍성·예산 중추도시생활권

홍성·예산의 읍·면별 중심지 기능지수를 도출하여, 군집분석을 실행한 후 계층구조를 분석한 결과, 총 4개의 군집으로 계층을 나눌 수 있다. 제1계층은 홍성군 홍성읍과 예산군 예산읍으로 각각 중심성 비율이 전체지역의 38.06%, 32.96%에 달해 홍성·예산 중추도시생활권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높은 중심지 기능을 나타내고 있다. 제2계층의 경우 홍성군 광천읍으로 9.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1계층 지역에 이어 부차적으로 높은 중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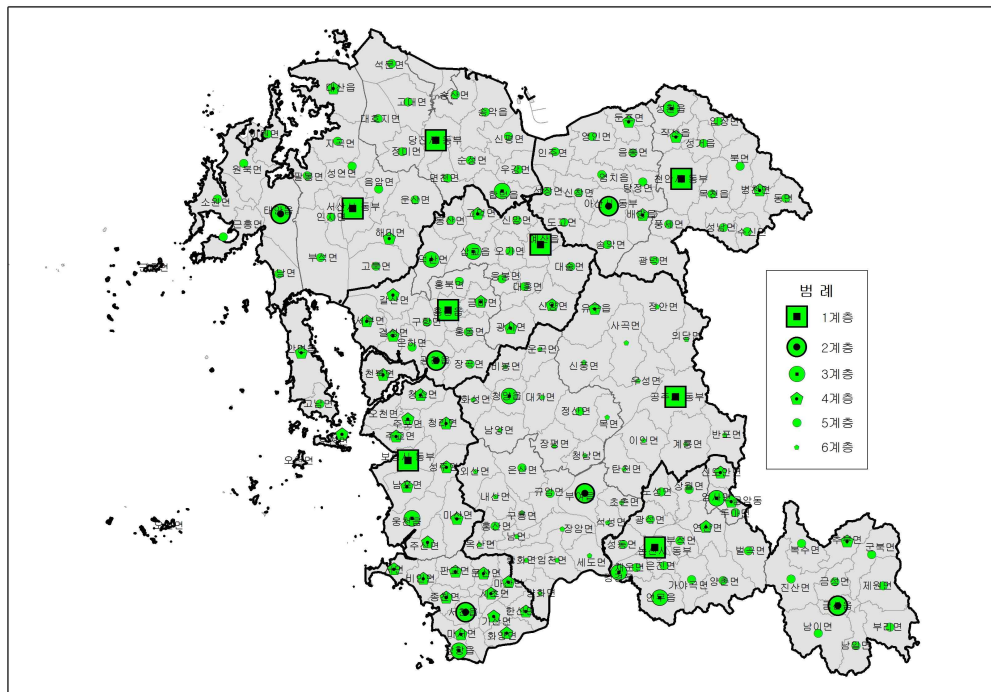
비율을 보이고 있다. 1~2계층의 총 3개 중심지가 전체의 80.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은 군청소재지이거나 중심적인 거점지역으로 볼 수 있다. 제3계층의 경우 예산군 덕산면과 삼교읍으로서 각각 중심성 비율은 3.15%, 3.01%를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4계층은 광역적 차원에서 격차가 미미하여 구분의 의미가 없을 만큼 작은 중심성을 보이고 있다. 지역 전체에서 차지하는 기능지수의 비율이 0.06%~2.09%로 기능지수가 매우 낮고, 중심지로서의 특성이 미미한 지역으로서 총 18개의 지역으로 나타났다.

〈표 3-7〉 홍성·예산 중추도시생활권

계층	서열	행정구역	중심지 기능지수	중심성 비율(%)	계층비율(%)
1	1	홍성군 홍성읍	2740.40	38.06	71.02
	2	예산군 예산읍	2373.04	32.96	
2	3	홍성군 광천읍	658.53	9.15	9.15
3	4	예산군 덕산면	226.81	3.15	6.16
	5	예산군 삼교읍	217.01	3.01	
4	6	예산군 고덕면	150.24	2.09	13.67
	7	홍성군 갈산면	119.55	1.66	
	8	홍성군 금마면	86.39	1.20	
	9	예산군 신양면	78.67	1.09	
	10	홍성군 서부면	77.44	1.08	
	11	예산군 광시면	73.87	1.03	
	12	홍성군 결성면	70.00	0.97	
	13	예산군 오가면	59.33	0.82	
	14	홍성군 홍동면	46.80	0.65	
	15	예산군 응봉면	43.85	0.61	
	16	홍성군 구항면	40.82	0.57	
	17	예산군 신암면	34.18	0.47	
	18	예산군 대술면	24.15	0.34	
	19	홍성군 은하면	19.11	0.27	
	20	홍성군 장곡면	18.75	0.26	
	21	예산군 대흥면	18.73	0.26	
	22	홍성군 홍북면	18.16	0.25	
	23	예산군 봉산면	4.16	0.06	

3) 중심지 계층구조 분석의 종합

중심지 계층구조 분석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계룡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시·군청 소재지들이 생활권의 1~3계층으로 중심적 거점을 나타냈다. 생활권 내에서는 같은 시·군청 소재지 지역들이라도 시·군의 인구 규모에 따라 1~3계층으로 구분되었다. 생활권내에서 중심적 거점지역을 나타내고 있는 시·군청 소재지인 1~3계층 사이를 3~4계층 지역들이 공간적으로 중위의 중심성을 나타내고 있다. 개별 시·군 차원의 레벨에서는 군청 소재지를 중심으로 중심기능을 갖고 있는 지역과 이를 보조하고 있는 2차 거점기능의 지역이 존재하며, 3~4계층이 이들 지역이라 볼 수 있다.



주 : 범례의 제1~6계층은 생활권내에서 적용가능하며, 다른 생활권의 지역과의 비교의 의의는 없음

[그림 3-1] 충청남도 생활권별 중심지 기능지수에 따른 계층구조 분석

2. 지역발전수준(Region Development Index, RDI) 분석

1) 분석방법 및 이용자료

생활권별 낙후지표 분석을 위하여 지역발전지수(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의 지표체계를 활용하여 시·군별 지역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지역발전지수는 16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의 발전수준을 지표화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발전지수의 각 지표를 활용하고 군집분석을 통하여 지역별 지표별 등급을 설정하였다. 지역발전지수는 생활서비스 지수, 지역경제력 지수, 삶의 여유공간 지수, 주민활력 지수 등을 복합적으로 도출하여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되었다. 또한 변수의 값은 표준화 과정을 거쳐 전문가 조사⁵⁾에 의한 지수의 가중치를 반영하여 종합지수가 도출된다.

전국순위는 광역시·도와 자치구를 제외한 전국 161개 시·군에서의 순위이며, 충남순위는 충남 내 15개 시·군의 순위를 나타낸 것이다. 등급의 구분은 군집분석을 이용하여 A~E 총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A등급이 상위등급이며, E등급이 하위등급으로 구분하였다.

5)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교수 및 연구원 등 전문가 50명과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무원 28명이 참여한 AHP분석을 통해 변수별 가중치를 구함

〈표 3-8〉 지역발전지수(RDI)의 도출 체계

지표	부문	영역별 지수 (가중치)	총괄
연평균 인구 증가율	인구변화	주민 활력 (0.217)	지역발전지수 (RDI)
고령화율	인구구조		
출생률	인구활력		
총사업체 수	산업기반	지역 경제력 (0.246)	
15세 이상 인구 대비 사업체 종사자 수			
1인당 소득세할 주민세 (백만원)			
재정자립도	지자체 재정		
노후주택비율	기초생활여건	생활서비스 (0.359)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보급률			
1km²당 학교 수	교육 여건		
인구 1천 명당 사설학원 수			
인구 1천 명당 의료인 수			
인구 1천 명당 병상 수	보건복지 여건		
영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			
고령인구 1천 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인구 천 명당 공원 면적	녹색 휴양 기반	삶의 여유 공간 (0.179)	
녹지율	녹지기반		
인구 천 명당 문화시설 수	문화체육기반		
인구 천명당 마을체육시설 수			

2) 생활권별 분석결과

(1) 천안-아산 생활권

① 주민활력분석

인구변화를 나타내는 인구 증가율을 살펴보면 천안시는 전국 및 충남등급 모두 Ⅲ등급이고, 아산시의 전국등급은 Ⅱ등급, 충남등급은 Ⅰ등급으로 분류되어 인구증가에 있어 아산시가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천안시의 경우 전국순위가 28위로서 상위권에 속하나 Ⅲ등급인 이유는 전국적으로 하향평준화 된 반면 최상위 계층과 중간 및 하위권의 계층 간 차이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구조를 나타내는 비고령인구비율은 천안시와 아산시 모두 비고령인구율에 따른 인구구조에서 전국 및 충남등급 모두 I 등급으로 나타나 고령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활력을 나타내는 출생률을 살펴보면 천안시는 전국 및 충남등급 모두 II 등급이고, 아산시의 경우 I 등급으로 나타나 인구활력 측면에서 두 지역 모두 양호한 편으로 분석되었다.

〈표 3-9〉 주민활력부문 분석

부문	지표	세부내용	전국			현황	천안시		현황	아산시	
			평균	최대값	최소값		전국 순위 (등급)	충남 순위 (등급)		전국 순위 (등급)	충남 순위 (등급)
인구 변화	인구 증가율	연평균 인구 증가율	3.11	8.12	1.14	3.92	28 (III)	4 (III)	5.70	4 (II)	1 (I)
인구 구조	비고령 인구율	총인구 중 65세 미만 인구 비율	3.11	4.61	1.13	4.43	11 (I)	2 (I)	4.20	29 (I)	3 (I)
인구 활력	조출생률	해당연도 중앙인구 1천명 대비 출생자 비율(續出生率)	3.11	6.39	1.38	4.40	17 (II)	2 (II)	5.64	5 (I)	1 (I)

② 지역경제력분석

산업기반을 나타내는 사업체기반의 경우 천안시는 전국에서 III등급, 충남에서 I 등급으로 분류되며, 아산시는 전국에서 IV등급, 충남에서 II등급으로 나타났다. 고용기회는 천안시가 전국 및 충남 모두 IV등급이고, 아산시가 전국 및 충남 모두 III등급으로 나타나 고용기회에서는 아산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두 지역 모두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수도권과 접한 지역으로서 장기적으로 고용기회부문의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소득수준은 천안시의 경우 전국등급이 IV등급이고 충남등급이 II등급으로 나타났으며, 아산시의 경우 전국등급이 III등급, 충남등급이 I 등급을 나타나 두 지역 모두 충남에서 소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재정기반은 천안시와 아산시 모두 전국에서 II등급, 충남에서 I

등급으로 분류되어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10> 지역경제력 분석

부문	지표	세부내용	전국			천안시			아산시		
			평균	최대 값	최소 값	현황	전국 순위 (등급)	충남 순위 (등급)	현황	전국 순위 (등급)	충남 순위 (등급)
산업 기반	사업체 기반	총사업체 수	3.11	7.94	2.33	5.05	10 (Ⅲ)	1 (Ⅰ)	3.36	39 (Ⅳ)	2 (Ⅱ)
	고용 기회	15세 이상 인구 대비 사업체 종사자 수와 농가인구의 합계 비중	3.11	5.37	0.63	2.51	116 (Ⅳ)	14 (Ⅳ)	2.99	92 (Ⅲ)	9 (Ⅲ)
소득 수준	소득 수준	1인당 소득세할 주민세	3.11	8.71	2.00	4.04	22 (Ⅳ)	4 (Ⅱ)	4.61	12 (Ⅲ)	1 (Ⅰ)
지자체 재정	재정 기반	재정자립도	3.11	5.75	1.99	4.92	12 (Ⅱ)	1 (Ⅰ)	4.78	17 (Ⅱ)	2 (Ⅰ)

③ 생활서비스분석

기초생활여건의 주택신규화는 천안시가 전국에서 I 등급이고 충남에서 II 등급이며, 아산시는 전국 및 충남에서 II 등급을 보여 두 지역 모두 노후주택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수보급 현대화는 천안시와 아산시 모두 전국 및 충남등급이 II 등급으로 분류되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수처리 현대화는 천안시가 전국 및 충남등급 모두 I 등급이며, 아산시의 경우 전국은 III 등급, 충남은 II 등급으로 분류되었다. 천안시의 경우 전국과 비교하여 양호한 편인 반면 아산시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아산시의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보완방안이 필요하며, 생활권 차원에서 사업모색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교육여건의 세부지표인 공교육기반의 경우 천안시는 전국에서 V 등급, 충남에서 I 등급이며, 아산시는 전국에서 V 등급인 반면 충남에서는 III 등급으로 분류되었다. 천안시와 아산시가 전국에서도 상위 순위이나 등급이 낮은 이유는 전국적으로 하위평준화 되어 있으며, 최상위 계층의 지역들과 격차가 크게 나기 때문이다. 사교육기반의 경우 천안시는 전국 및 충남등급 모두 II 등급으로 나타나며, 아산시는 전국 및 충남등급 모두 IV 등급으로 나타

나 천안시의 사교육기반은 양호한 반면 아산시는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건복지여건의 세부지표인 의료서비스질은 천안시가 전국 및 충남등급 모두 Ⅱ등급으로서 양호하였으나, 아산시는 전국 및 충남등급 모두 Ⅳ등급으로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료시설기반은 천안시가 전국 및 충남등급 모두 Ⅳ등급이며, 아산시의 경우 전국등급은 Ⅴ등급이며 충남 등급이 Ⅳ등급으로서 두 지역 모두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의료서비스질을 높이고 의료시설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아동복지기반은 천안시가 전국 및 충남등급 모두 Ⅲ등급이며, 아산시가 전국 및 충남등급 모두 Ⅱ등급으로 분류되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기반의 경우 천안시는 전국등급이 Ⅳ등급으로 나타났으나 충남등급이 Ⅰ등급으로 상당히 양호하게 나타났다. 아산시 역시 전국등급이 Ⅳ등급이나 충남등급이 Ⅱ등급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 모두 지표 수준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나 최상위 계층과 격차가 크게 발생하여 등급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11〉 생활서비스 분석

부문	지표	세부내용	전국			천안시			아산시		
			평균	최대 값	최소 값	현황	전국 순위 (등급)	충남 순위 (등급)	현황	전국 순위 (등급)	충남 순위 (등급)
기초 생활 여건	주택 신규화	20년 미만 주택 비율	3.11	4.71	0.69	4.25	26 (Ⅰ)	2 (Ⅱ)	4.04	36 (Ⅱ)	3 (Ⅱ)
	식수보급 현대화	상수도 보급률	3.11	4.34	0.28	3.59	64 (Ⅱ)	3 (Ⅱ)	3.65	60 (Ⅱ)	2 (Ⅱ)
	하수처리 현대화	하수도 보급률	3.11	4.56	0.27	4.17	27 (Ⅰ)	2 (Ⅰ)	2.53	115 (Ⅲ)	9 (Ⅱ)
교육 여건	공교육 기반	1km ² 당 학교 수(초·중·고)	3.11	9.87	2.60	3.16	28 (Ⅴ)	1 (Ⅰ)	2.95	43 (Ⅴ)	3 (Ⅲ)
	사교육 기반	인구 1천 명당 사설학원 수	3.11	5.61	0.70	3.88	42 (Ⅱ)	2 (Ⅱ)	2.59	104 (Ⅳ)	10 (Ⅳ)
보건 복지 여건	의료 서비스질	인구 1천 명당 의료인 수	3.11	9.02	1.19	4.28	19 (Ⅱ)	3 (Ⅱ)	2.57	112 (Ⅳ)	12 (Ⅳ)
	의료시설 기반	인구 1천 명당 병상 수	3.11	7.29	1.52	2.85	84 (Ⅳ)	8 (Ⅳ)	2.56	110 (Ⅴ)	11 (Ⅳ)
	아동복지 기반	아동인구(6세미만) 1천 명당 보육시설 수	3.11	6.13	0.50	3.13	68 (Ⅲ)	6 (Ⅲ)	3.79	38 (Ⅱ)	4 (Ⅱ)
	노인복지 기반	고령인구 1천 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3.11	9.90	2.20	3.35	27 (Ⅳ)	1 (Ⅰ)	3.21	35 (Ⅳ)	2 (Ⅱ)

④ 삶의 여유 공간 분석

녹색 휴양 기반 지표로 인구 천 명당 공원면적을 기준으로 분석한 녹색 휴양 기반의 경우 천안시가 전국 및 충남등급 모두 V등급으로 나타나 공원 면적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산시는 전국 및 충남등급 모두 IV등급 으로 분석되었으나 지표 수준은 전국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천안시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녹지기반 지표인 녹지율은 천안시의 경우 전국등급이 III등급, 충남등급이 IV등급이며, 아산시의 경우 전국 등급이 III등급, 충남등급이 V 등급으로 분석되었다. 녹지율의 지표수준은 전국평균과 비교하여 낮게 나타나 녹지율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화체육기반 지표인 문화시설은 천안시의 경우 전국등급이 II등급, 충남등급이 I 등급, 아산시가 전국 및 충남등급 모두 III등급으로 두 지역 모두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체육시설의 경우 천안시와 아산시 모두 전국등급이 V등급으로 분석되어 체육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12> 삶의 여유공간 분석

부문	지표	세부내용	전국			천안시		아산시			
			평균	최대 값	최소 값	현황	전국 순위 (등급)	충남 순위 (등급)	현황	전국 순위 (등급)	충남 순위 (등급)
녹색 휴양 기반	녹색휴양 기반	인구 천 명당 공원 면적	3.11	12.10	2.18	2.52	138 (Ⅴ)	14 (Ⅴ)	3.15	50 (Ⅳ)	7 (Ⅳ)
	녹지기반	녹지율	3.11	4.84	0.00	2.36	122 (Ⅲ)	8 (Ⅳ)	1.99	140 (Ⅲ)	14 (Ⅴ)
문화 체육 기반	문화시설	인구 천 명당 문화시설 수	3.11	8.57	1.92	4.94	8 (Ⅱ)	1 (Ⅰ)	3.58	30 (Ⅲ)	3 (Ⅲ)
	체육시설	인구 천명당 마을체육시설 수	3.11	7.56	2.00	2.27	136 (Ⅴ)	13 (Ⅴ)	2.54	107 (Ⅴ)	9 (Ⅲ)

⑤ 지역발전지수(RDI)분석⁶⁾

천안시는 주민활력, 지역경제력, 생활서비스 부문에서 양호하고, 삶의 여유 공간의 지표는 전국 평균에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

6) 지역발전지수는 각 부문을 나타내는 지표를 활용하여 표준화(Z-Score)에 의한 지수이며, 0값이 평균임

합 지역발전지수는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삶의 여유 공간 부문에 있어 천안시의 공원면적, 녹지율, 체육시설 수 등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3-13> 천안시 발전수준 실태 분석

부문	부문별 지역발전지수	전국 순위	충남 순위	종합 지역발전지수	전국 순위	충남 순위
주민활력	4.249	15(Ⅱ)	3(Ⅱ)	3.779	13(Ⅱ)	1(Ⅰ)
지역경제력	4.130	10(Ⅲ)	1(Ⅰ)			
생활서비스	3.630	32(Ⅲ)	1(Ⅰ)			
삶의 여유 공간	3.025	93(Ⅳ)	4(Ⅲ)			

아산시의 부문별 지역발전지수를 살펴보면 주민활력, 지역경제력, 등의 부문에서 전국평균과 비교하여 볼 때 양호한 수준이며, 생활서비스와 삶의 여유 공간 부문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활서비스부문에서는 하수도현대화, 사교육기반시설, 의료서비스질 및 시설이 전국 평균에 미달하고 있으며, 삶의 여유 공간 부문은 녹지율과 체육시설수에서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종합 지역발전지수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 아산시 발전수준 실태 분석

부문	부문별 지역발전지수	전국 순위	충남 순위	종합 지역발전지수	전국 순위	충남 순위
주민활력	5.183	3(Ⅱ)	1(Ⅰ)	3.705	19(Ⅱ)	2(Ⅰ)
지역경제력	3.936	17(Ⅲ)	2(Ⅰ)			
생활서비스	3.099	76(Ⅳ)	5(Ⅲ)			
삶의 여유 공간	2.816	118(Ⅳ)	10(Ⅳ)			

두 지역을 생활권차원에서 살펴보면 고용기회를 늘리고, 아산시의 부족한 생활서비스 부문을 천안시와 연계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두 지역 모두 의료시설, 녹지율, 체육시설 수를 확보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2) 공주-부여-청양 생활권

① 주민활력분석

인구변화 지표인 인구증가율은 공주시·부여군·청양군 모두 V등급으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구구조 지표인 비고령인구율의 경우 공주시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여 양호한 편이며, 부여군과 청양군은 고령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구활력 지표인 조출생률의 경우 세 지역 모두 전국 평균을 못 미치며 전국 및 충남등급 모두 공주시는 IV등급, 부여군과 청양군은 V등급으로 분석되었다.

〈표 3-15〉 주민활력분석

부문	지표	세부내용	전국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평균	최대값	최소값	현황	전국 순위 (등급)	충남 순위 (등급)	현황	전국 순위 (등급)	충남 순위 (등급)	현황	전국 순위 (등급)	충남 순위 (등급)
인구 변화	인구 증가율	연평균 인구 증가율	3.11	8.12	1.14	2.69	96 (V)	9 (V)	2.32	130 (V)	14 (V)	2.60	105 (V)	11 (V)
인구 구조	비고령 인구율	총인구 중 65세 미만 인구 비율	3.11	4.61	1.13	3.24	76 (III)	6 (III)	2.18	121 (IV)	13 (V)	1.84	137 (V)	15 (V)
인구 활력	조출생률	해당연도 중앙인구 1천명 대비 출생자 비율(繰出生率)	3.11	6.39	1.38	2.50	108 (IV)	9 (IV)	1.92	142 (V)	15 (V)	2.13	132 (V)	13 (V)

② 지역경제력분석

산업기반 지표인 사업체기반은 수도권지역의 편중된 사업체수에 따라 공주시와 부여군의 경우 전국 순위에 비해 등급이 V등급으로 낮았으며, 청양군의 경우 전국적으로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주시의 고용 기회는 전국 평균에는 못 미치나 등급은 III등급으로 분류된 반면 부여군은 전국등급과 충남등급이 II등급, 청양군은 I등급으로 이들 지역의 고용기회는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시장 측면에서 규모가 작은 지역일수록 노동시장이 독립적이고 지역규모가 커 질수록 독립적이지 않다는 기존 연구에 기인하는 것이다.

소득수준 공주시가 양호한 반면 부여군과 청양군은 전국 및 충남등급 V 등급으로 하위권으로 분석되었다. 지자체 재정 지표인 재정기반은 세 지역 모두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전국 및 충남등급은 공주시가 IV등급, 부여군과 청양군이 V등급으로 나타났다.

〈표 3-16〉 지역경제력 분석

부문	지표	세부내용	전국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평균	최대 값	최소 값	현황	전국 순위 (등급)	충남 순위 (등급)	현황	전국 순위 (등급)	충남 순위 (등급)	현황	전국 순위 (등급)	충남 순위 (등급)
산업 기반	사업체 기반	총사업체 수	3.11	7.94	2.33	2.87	63 (V)	6 (III)	2.61	92 (V)	12 (IV)	2.40	146 (V)	14 (V)
	고용 기회	15세 이상 인구 대비 사업체 종사자 수와 농가인구의 합계 비중	3.11	5.37	0.63	2.80	103 (III)	12 (III)	3.48	67 (II)	5 (II)	4.23	18 (I)	1 (I)
소득 수준	소득 수준	1인당 소득세할 주민세	3.11	8.71	2.00	3.28	47 (IV)	6 (III)	2.48	120 (V)	14 (V)	2.39	133 (V)	15 (V)
지자체 재정	재정 기반	재정자립도	3.11	5.75	1.99	2.66	88 (IV)	10 (IV)	2.39	109 (V)	13 (V)	2.22	131 (V)	14 (V)

③ 생활서비스분석

기초생활여건 지표인 주택 신규화의 경우 공주시가 전국에 비하여 양호한 반면, 부여군과 청양군 모두 평균에 미치지 못해 노후주택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수도 하수도 보급률은 세 지역 모두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특히 부여군과 청양군은 전국 대비 하위권으로 분석되었다.

교육여건 지표인 공교육과 사교육기반은 세 지역 모두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특히 전국 및 충남의 공교육기반 등급이 세 지역 모두 V등급으로 분석되었다.

보건복지여건 지표는 공주시의 경우 의료서비스질과 의료시설기반 모두 양호하고, 부여군의 경우 의료서비스질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의료시설기반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청양군은 의료서비스질 및 의료서비스 시설 모두 전국 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동복지기반은 청양군이 매우 양호하며, 공주시와 부여군은 전국 및 충남등급이 III

등급으로 분류되나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인 복지기반의 경우 세 지역 모두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 하며 특히 공주시의 경우 전국에서 하위권으로 분석되었다.

〈표 3-17〉 생활서비스분석

부문	지표	세부내용	전국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평균	최대 값	최소 값	현황	전국 순위 (등급)	충남 순위 (등급)	현황	전국 순위 (등급)	충남 순위 (등급)	현황	전국 순위 (등급)	충남 순위 (등급)
기초 생활 여건	주택 신규화	20년 미만 주택 비율	3.11	4.71	0.69	3.18	75 (III)	6 (IV)	2.63	106 (III)	11 (V)	2.24	128 (IV)	15 (V)
	식수 보급 현대화	상수도 보급률	3.11	4.34	0.28	2.71	103 (III)	6 (III)	2.61	111 (III)	7 (III)	0.56	160 (V)	15 (V)
	하수 처리 현대화	하수도 보급률	3.11	4.56	0.27	2.93	87 (III)	3 (II)	1.84	146 (IV)	14 (IV)	2.18	133 (IV)	12 (III)
교육 여건	공교육 기반	1km ² 당 학교 수(초·중·고)	3.11	9.87	2.60	2.75	95 (V)	13 (V)	2.77	84 (V)	11 (V)	2.70	116 (V)	15 (V)
	사교육 기반	인구 1천 명당 사설학원 수	3.11	5.61	0.70	2.78	93 (III)	8 (IV)	2.46	112 (IV)	11 (IV)	1.74	152 (V)	14 (V)
보건 복지 여건	의료 서비스 질	인구 1천 명당 의료인 수	3.11	9.02	1.19	4.61	7 (II)	1 (I)	2.79	91 (IV)	11 (IV)	2.12	137 (V)	15 (V)
	의료 시설 기반	인구 1천 명당 병상 수	3.11	7.29	1.52	5.11	8 (II)	1 (I)	3.91	29 (III)	3 (III)	2.60	105 (V)	10 (IV)
	아동 복지 기반	아동인구(6세미만) 1천 명당 보육시설 수	3.11	6.13	0.50	2.90	87 (III)	8 (III)	2.80	94 (III)	9 (III)	4.54	16 (II)	1 (I)
	노인 복지 기반	고령인구 1천 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3.11	9.90	2.20	2.68	115 (V)	14 (V)	3.00	59 (V)	6 (III)	2.86	77 (V)	9 (IV)

④ 삶의 여유 공간 분석

녹색 휴양 기반 지표인 공원면적과 녹지율은 공주시의 경우 양호한 반면 부여군은 녹지율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치고, 청양군은 공원 면적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화체육기반의 경우 공주시는 문화시설이 양호한 반면 체육시설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치고, 부여군은 문화체육 및 체육시설 모두 전국 평균에 못 미

치며, 청양군은 체육시설은 양호하나 문화시설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18〉 삶의 여유 공간 분석

부문	지표	세부내용	전국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평균	최대 값	최소 값	현황	전국 순위 (등급)	충남 순위 (등급)	현황	전국 순위 (등급)	충남 순위 (등급)	현황	전국 순위 (등급)	충남 순위 (등급)
녹색 휴양 기반	녹색 휴양 기반	인구 1천 명당 공원 면적	3.11	12.10	2.18	3.18	49 (IV)	6 (IV)	3.37	36 (IV)	5 (III)	2.73	106 (V)	12 (V)
	녹지 기반	녹지율	3.11	4.84	0.00	3.66	53 (II)	2 (I)	2.74	110 (III)	6 (III)	3.45	74 (II)	3 (II)
문화 체육 기반	문화 시설	인구 1천 명당 문화시설 수	3.11	8.57	1.92	4.34	15 (III)	2 (II)	2.83	65 (IV)	8 (IV)	2.22	153 (V)	14 (V)
	체육 시설	인구 1천명당 마을체육시설 수	3.11	7.56	2.00	2.78	88 (IV)	4 (II)	2.62	100 (V)	8 (III)	3.63	34 (IV)	1 (I)

⑤ 지역발전지수(RDI)분석

공주시의 지역발전지수를 종합하면 주민활력 부문과 지역경제력 부문에서 전국 평균에 못 미치며, 생활서비스와 삶의 여유 공간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종합 지역발전지수는 전국에서 중간적 위치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주시의 경우 인구증가율과 출생률이 저조하며, 지역경제력에서는 사업체수, 종사자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활서비스에서는 전국평균에 못 미치는 지표들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전국에서 61위(III등급)로 중간적인 위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의료부문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며 복지부문의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삶의 여유 공간은 전체적으로 양호하나 체육시설수의 향상이 필요하다.

〈표 3-19〉 공주시 발전수준 실태 분석

부문	부문별 지역발전지수	전국 순위	충남 순위	종합 지역발전지수	전국 순위	충남 순위
주민활력	2.808	92(IV)	9(IV)	3.128	71(IV)	5(III)
지역경제력	2.901	82(V)	9(IV)			
생활서비스	3.295	61(III)	3(II)			
삶의 여유 공간	3.489	28(III)	2(II)			

부여군의 지역발전지수를 종합하면 전 부문에서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종합 지역발전지수 역시 전국 및 충남등급이 V등급으로 분류되어 전 부문에서 종합적인 지역발전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0> 부여군 발전수준 실태 분석

부문	부문별 지역발전지수	전국 순위	충남 순위	종합 지역발전지수	전국 순위	충남 순위
주민활력	2.142	141(V)	15(V)	2.642	135(V)	13(V)
지역경제력	2.739	119(V)	13(IV)			
생활서비스	2.756	108(IV)	11(IV)			
삶의 여유 공간	2.889	110(IV)	8(IV)			

청양군의 지역발전지수를 종합하면 전 부문에서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종합 지역발전지수 역시 전국 및 충남등급이 V등급으로 분류되어 전 부문에서 종합적인 지역발전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21> 청양군 발전수준 실태 분석

부문	부문별 지역발전지수	전국 순위	충남 순위	종합 지역발전지수	전국 순위	충남 순위
주민활력	2.188	134(V)	13(V)	2.561	145(V)	14(V)
지역경제력	2.809	101(V)	11(IV)			
생활서비스	2.393	145(V)	14(V)			
삶의 여유 공간	3.008	94(IV)	5(III)			

세 지역을 생활권차원에서 살펴보면 의료부문과 문화시설이 양호한 공주시를 중심으로 부여군과 청양군이 연계협력사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밖의 생활서비스 분야에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지표에 대한 수준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3) 보령-서천 생활권

① 주민활력분석

인구변화 지표인 인구증가율의 경우 보령시는 전국 및 충남등급이 IV등급으로 전국 평균적인 성향을 보이며, 서천군은 V등급으로 분류되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구구조 지표인 비고령 인구율은 보령시가 전국 및 충남등급이 III등급으로 평균적인 성향을 보이며, 서천군은 전국등급이 IV등급, 충남등급이 V등급으로 분류되어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활력 지표인 조출생률은 보령시가 전국 및 충남등급이 IV등급이고 서천군이 V등급으로 분류되어 출생인구 비율이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22〉 주민활력 분석

부문	지표	세부내용	전국			보령시			서천군		
			평균	최대값	최소값	현황	전국 순위 (등급)	충남 순위 (등급)	현황	전국 순위 (등급)	충남 순위 (등급)
인구 변화	인구 증가율	연평균 인구 증가율	3.11	8.12	1.14	3.12	64 (IV)	6 (IV)	2.46	122 (V)	13 (V)
인구 구조	비고령 인구율	총인구 중 65세 미만 인구 비율	3.11	4.61	1.13	3.14	81 (III)	7 (III)	2.03	128 (IV)	14 (V)
인구 활력	조출생률	해당연도 중앙인구 1천명 대비 출생자 비율(繰出生率)	3.11	6.39	1.38	2.71	98 (IV)	7 (IV)	1.96	140 (V)	14 (V)

② 지역경제력분석

산업기반 지표인 사업체기반의 경우 보령시는 전국등급이 V등급, 충남등급이 III등급이고, 서천군은 전국등급이 V등급, 충남등급이 IV등급으로 전국적으로 비교하였을 때 두 지역 모두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기회는 보령시가 전국 및 충남등급이 모두 III등급이고, 서천군의 전국등급이 III등급, 충남등급이 II등급으로 분류되어 서천군이 보령시에 비해 고용기회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수준의 경우 보령시가 전국등급이 V등급, 충남등급이 IV등급이고, 서천군은 전국 및 충남등급이 V등급으로 분류되며, 두 지역 모두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자체 재정 지표인 재정기반은 보령시가 전국 및 충남등급이

Ⅳ등급, 서천군이 Ⅴ등급으로 분류되어 두 지역 모두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3〉 지역경제력 분석

부문	지표	세부내용	전국			보령시			서천군		
			평균	최대 값	최소 값	현황	전국 순위 (등급)	충남 순위 (등급)	현황	전국 순위 (등급)	충남 순위 (등급)
산업 기반	사업체 기반	총사업체 수	3.11	7.94	2.33	2.83	67 (Ⅴ)	7 (Ⅲ)	2.58	97 (Ⅴ)	13 (Ⅳ)
	고용기회	15세 이상 인구 대비 사업체 종사자 수와 농가인구의 합계 비중	3.11	5.37	0.63	2.75	106 (Ⅲ)	13 (Ⅲ)	3.33	75 (Ⅲ)	8 (Ⅱ)
소득 수준	소득수준	1인당 소득세할 주민세	3.11	8.71	2.00	2.84	73 (Ⅴ)	8 (Ⅳ)	2.59	106 (Ⅴ)	12 (Ⅴ)
지자체 재정	재정기반	재정자립도	3.11	5.75	1.99	2.88	77 (Ⅳ)	7 (Ⅳ)	2.20	137 (Ⅴ)	15 (Ⅴ)

③ 생활서비스분석

기초생활여건 지표인 주택신규화의 경우 보령시가 전국등급 Ⅲ등급, 충남등급 Ⅳ등급이고 서천군은 전국등급이 Ⅲ등급, 충남등급이 Ⅴ등급으로서 서천군이 보령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20년 이상 주택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수보급현대화는 보령시와 서천군 모두 전국 및 충남등급이 Ⅲ등급으로서 등급 상에는 중간적인 위치이나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수처리현대화의 경우 보령시는 전국등급이 Ⅲ등급, 충남등급이 Ⅱ등급이고, 서천군의 전국등급은 Ⅳ등급, 충남등급은 Ⅴ등급으로서 서천군의 경우 하수도 보급률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여건 지표인 공교육기반의 경우 보령시와 서천군 모두 전국등급이 Ⅴ등급, 충남등급이 Ⅳ등급으로 분류되어 공교육기반이 평균에 미달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교육기반은 보령시가 전국 및 충남등급이 Ⅲ등급, 서천군이 전국등급은 Ⅲ등급, 충남등급은 Ⅳ등급으로 분류되며, 두 지역 모두 전국 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건복지여건 지표인 의료서비스질의 경우 보령시와 서천군 모두 전국 및

충남등급이 Ⅲ등급으로서 전국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료시설기반은 보령시가 전국 및 충남등급이 Ⅳ등급이나 전국 평균보다는 양호하며, 서천군은 전국등급이 Ⅲ등급, 충남등급이 Ⅱ등급으로 분석되었다. 아동복지기반은 보령시가 전국 및 충남등급 모두 Ⅲ등급이나 전국평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서천군은 전국등급 및 충남등급 모두 Ⅱ등급으로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인복지기반은 보령시가 전국등급이 Ⅴ등급, 충남등급이 Ⅳ등급으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서천군은 전국등급이 Ⅳ등급, 충남등급이 Ⅱ등급으로 전국평균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3-24〉 생활서비스분석

부문	지표	세부내용	전국			보령시		서천군			
			평균	최대 값	최소 값	현황	전국 순위 (등급)	충남 순위 (등급)	현황	전국 순위 (등급)	충남 순위 (등급)
기초 생활 여건	주택 신규화	20년 미만 주택 비율	3.11	4.71	0.69	3.03	81 (Ⅲ)	7 (Ⅳ)	2.62	107 (Ⅲ)	12 (Ⅴ)
	식수보급 현대화	상수도 보급률	3.11	4.34	0.28	2.75	101 (Ⅲ)	5 (Ⅲ)	2.36	120 (Ⅲ)	9 (Ⅲ)
	하수처리 현대화	하수도 보급률	3.11	4.56	0.27	2.93	88 (Ⅲ)	4 (Ⅱ)	1.22	156 (Ⅳ)	15 (Ⅴ)
교육 여건	공교육 기반	1km^2당 학교 수(초·중·고)	3.11	9.87	2.60	2.83	64 (Ⅴ)	7 (Ⅳ)	2.86	60 (Ⅴ)	6 (Ⅳ)
	사교육 기반	인구 1천 명당 사설학원 수	3.11	5.61	0.70	2.99	78 (Ⅲ)	5 (Ⅲ)	2.68	100 (Ⅲ)	9 (Ⅳ)
보건 복지 여건	의료 서비스질	인구 1천 명당 의료인 수	3.11	9.02	1.19	3.50	53 (Ⅲ)	6 (Ⅲ)	3.35	59 (Ⅲ)	7 (Ⅲ)
	의료시설 기반	인구 1천 명당 병상 수	3.11	7.29	1.52	3.20	61 (Ⅳ)	6 (Ⅳ)	4.31	20 (Ⅲ)	2 (Ⅱ)
	아동복지 기반	아동인구(6세미만) 1천 명당 보육시설 수	3.11	6.13	0.50	2.73	99 (Ⅲ)	10 (Ⅲ)	3.88	32 (Ⅱ)	3 (Ⅱ)
	노인복지 기반	고령인구 1천 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3.11	9.90	2.20	2.89	72 (Ⅴ)	8 (Ⅳ)	3.12	43 (Ⅳ)	4 (Ⅱ)

④ 삶의 여유 공간 분석

녹색휴양기반 경우 보령시는 전국등급이 Ⅴ등급, 충남등급이 Ⅳ등급으로 전국 평균에 못 미치며, 서천군은 전국등급이 Ⅳ등급, 충남등급이 Ⅲ등급으로

로 전국등급은 낮으나 전국평균을 상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지기반은 보령시가 전국 및 충남등급 모두 Ⅲ등급, 서천군이 전국등급이 Ⅲ등급 충남등급이 Ⅴ등급으로 분류되어 두 지역 모두 전국 평균에 못 미치며, 상대적으로 서천군의 녹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기반 지표인 문화시설은 보령시가 전국 및 충남 모두 Ⅳ등급, 서천군이 Ⅴ등급으로 분류되어 두 지역 모두 전국평균에 못 미치며 특히 서천군의 문화시설 기반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체육시설은 보령시가 전국등급이 Ⅴ등급, 충남등급이 Ⅳ등급으로 전국평균을 하회하며, 서천군은 전국등급이 Ⅳ등급, 충남등급이 Ⅰ등급으로 분석되었다.

<표 3-25> 삶의 여유 공간 분석

부문	지표	세부내용	전국			보령시			서천군		
			평균	최대 값	최소 값	현황	전국 순위 (등급)	충남 순위 (등급)	현황	전국 순위 (등급)	충남 순위 (등급)
녹색 휴양 기반	녹색휴양 기반	인구 천 명당 공원 면적	3.11	12.10	2.18	2.88	81 (Ⅴ)	10 (Ⅳ)	3.69	20 (Ⅳ)	3 (Ⅲ)
	녹지기반	녹지율	3.11	4.84	0.00	2.98	97 (Ⅲ)	5 (Ⅲ)	2.04	137 (Ⅲ)	13 (Ⅴ)
문화 체육 기반	문화시설	인구 천 명당 문화시설 수	3.11	8.57	1.92	2.98	55 (Ⅳ)	5 (Ⅳ)	2.38	135 (Ⅴ)	13 (Ⅴ)
	체육시설	인구 천명당 마을체육시설 수	3.11	7.56	2.00	2.47	113 (Ⅴ)	10 (Ⅳ)	3.58	37 (Ⅳ)	2 (Ⅰ)

⑤ 지역발전지수(RDI)분석

보령시의 지역발전지수를 종합해보면 전부문에서 전국 평균에는 못 미치나 전국 순위를 살펴보면 중간적인 위치에 있으며, 특히 인구부문이나 보건부문에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6〉 보령시 발전수준 실태 분석

부문	부문별 지역발전지수	전국 순위	충남 순위	종합 지역발전지수	전국 순위	충남 순위
주민활력	2.991	83(Ⅳ)	6(Ⅳ)	2.917	96(Ⅳ)	8(Ⅳ)
지역경제력	2.826	95(Ⅴ)	10(Ⅳ)			
생활서비스	2.981	87(Ⅳ)	7(Ⅲ)			
삶의 여유 공간	2.826	116(Ⅳ)	9(Ⅳ)			

서천군의 지역발전지수를 종합해보면, 전 부문에서 전국 평균에 못 미쳤으며, 특히 주민활력과 지역경제력 부문의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보건 복지 여건에 있어서는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27〉 서천군 발전수준 실태 분석

부문	부문별 지역발전지수	전국 순위	충남 순위	종합 지역발전지수	전국 순위	충남 순위
주민활력	2.151	140(Ⅴ)	14(Ⅴ)	2.698	125(Ⅴ)	11(Ⅴ)
지역경제력	2.676	131(Ⅴ)	14(Ⅳ)			
생활서비스	2.933	93(Ⅳ)	8(Ⅲ)			
삶의 여유 공간	2.922	106(Ⅳ)	7(Ⅳ)			

생활권 차원에서 보령시와 서천군의 지역발전지수를 분석해 보면, 생활서비스에서 기초생활여건과 교육여건이 두 지역 모두 전국 평균에 못 미쳐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생활권내의 생활서비스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4) 서산-당진-태안 생활권

① 주민활력분석

인구변화 지표인 인구증가율의 경우 전국 및 충남등급이 서산시는 Ⅲ등급, 당진시는 Ⅱ등급, 태안군은 Ⅴ등급으로 분류되어 서산시와 당진시의 인구증가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양호하나 태안군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충남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구구조 지표인 비고령인구율의 경우 서산시와 당진시 모두 전국등급 및 충남등급이 Ⅱ등급

으로 전국평균에 비해 양호하나, 태안군의 경우 전국등급이 Ⅲ등급, 충남등급이 Ⅳ등급으로 전국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구활력 지표인 조출생률은 서산시가 전국 및 충남등급이 Ⅱ등급, 당진시가 Ⅲ등급, 태안군이 Ⅴ등급으로 전국평균에 비해 서산시와 당진시가 양호하나 태안군은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28〉 주민활력분석

부문	지표	세부내용	전국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평균	최대값	최소값	현황	전국 순위 (등급)	충남 순위 (등급)	현황	전국 순위 (등급)	충남 순위 (등급)	현황	전국 순위 (등급)	충남 순위 (등급)
인구 변화	인구 증가율	연평균 인구 증가율	3.11	8.12	1.14	3.82	31 (Ⅲ)	5 (Ⅲ)	4.84	12 (Ⅱ)	3 (Ⅱ)	2.32	131 (Ⅴ)	15 (Ⅴ)
인구 구조	비고령 인구율	총인구 중 65세 미만 인구 비율	3.11	4.61	1.13	3.70	59 (Ⅱ)	4 (Ⅱ)	3.51	68 (Ⅱ)	5 (Ⅱ)	2.74	103 (Ⅲ)	10 (Ⅳ)
인구 활력	조출생률	해당연도 중앙인구 1천명 대비 출생자 비율(繰出生率)	3.11	6.39	1.38	4.03	28 (Ⅱ)	3 (Ⅱ)	3.45	60 (Ⅲ)	5 (Ⅲ)	2.21	127 (Ⅴ)	11 (Ⅴ)

② 지역경제력분석

산업기반 지표인 사업체기반은 전국등급이 서산시·당진시·태안군 모두 전국순위는 높은 편이나 수도권과의 격차에 의해 Ⅴ등급으로 분류되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충남등급은 서산시와 당진시가 Ⅲ등급, 태안군이 Ⅳ등급으로 분석되었다. 고용기회는 서산시가 전국 및 충남등급이 Ⅲ등급, 당진시가 전국등급이 Ⅲ등급, 충남등급이 Ⅱ등급, 태안군이 전국 및 충남등급이 Ⅱ등급으로 당진시와 태안군이 전국평균에 비해 양호하며, 서산시가 전국평균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의 경우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모두 전국평균과 충남내 순위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재정기반은 서산시가 전국 및 충남등급 모두 Ⅲ등급이고, 당진시가 전국등급이 Ⅲ등급, 충남등급이 Ⅱ등급으로 분류되어 두 지역 모두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태안군은 전국등급과 충남등급이 모두 Ⅳ등급으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29〉 지역경제력분석

부문	지표	세부내용	전국			현황	서산시		현황	당진시		현황	태안군	
			평균	최대값	최소값		전국 순위 (등급)	충남 순위 (등급)		전국 순위 (등급)	충남 순위 (등급)		전국 순위 (등급)	충남 순위 (등급)
산업기반	사업체기반	총사업체 수	3.11	7.94	2.33	3.01	52 (V)	3 (III)	2.94	57 (V)	5 (III)	2.63	87 (V)	10 (IV)
	고용기회	15세 이상 인구 대비 사업체 종사자 수와 농가인구의 합계 비중	3.11	5.37	0.63	2.93	98 (III)	11 (III)	3.34	74 (III)	7 (II)	3.56	59 (II)	3 (II)
소득수준	소득수준	1인당 소득세할 주민세	3.11	8.71	2.00	4.11	19 (IV)	3 (II)	4.45	15 (III)	2 (I)	3.35	45 (IV)	5 (III)
지자체재정	재정기반	재정자립도	3.11	5.75	1.99	3.49	47 (III)	4 (III)	3.93	36 (III)	3 (II)	2.79	80 (IV)	9 (IV)

③ 생활서비스분석

기초생활여건 지표인 주택신규화 부문에서 서산시와 당진시는 전국등급이 II등급, 충남등급이 III등급이며, 태안군은 전국등급이 IV등급 충남등급이 V등급으로 분류되어 서산시와 당진시가 양호한 반면 태안군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식수보급현대화의 경우 전국 및 충남등급이 서산시는 II등급, 당진시는 IV등급, 태안군은 III등급으로 분류되어 서산시가 전국평균에 비해 양호하며, 당진시와 태안군은 전국 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처리현대화의 경우 서산시와 당진시가 전국등급이 III등급, 충남등급이 II등급으로 나타나고, 태안군은 전국등급이 IV등급, 충남등급이 III등급으로 세 시·군 모두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육여건 지표인 공교육기반의 경우 서산시와 당진시의 전국등급이 V등급, 충남등급이 IV등급이며, 태안군은 전국 및 충남등급 모두 V등급으로 분류되어 공교육기반은 전국 평균에 하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교육기반은 전국 및 충남등급이 서산시는 III등급, 당진시는 IV등급, 태안군은 V등급으로 분류되어, 서산시는 양호한 반면 당진시와 태안군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여건 지표인 의료서비스질의 경우 전국 및 충남등급이 서산시와 태안군이 IV등급이고, 당진시는 전국등급이 IV등급, 충남등급이 V등급으로 분류되어 세 지역 모두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료시설기반의 경우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모두 전국 및 충남등급이 V등급으로 분류되어 전국 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동복지기반의 경우 전국 및 충남등급이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모두 IV등급으로 분류되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인복지기반의 경우 서산시가 전국등급 V등급, 충남등급 IV등급이고, 당진시와 태안군이 모두 V등급으로 분류되어 세 지역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30〉 생활서비스분석

부문	지표	세부내용	전국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평균	최대 값	최소 값	현황	전국 순위 (등급)	충남 순위 (등급)	현황	전국 순위 (등급)	충남 순위 (등급)	현황	전국 순위 (등급)	충남 순위 (등급)
기초 생활 여건	주택 신규화	20년 미만 주택 비율	3.11	4.71	0.69	3.63	58 (Ⅱ)	4 (Ⅲ)	3.49	68 (Ⅱ)	5 (Ⅲ)	2.50	115 (Ⅳ)	14 (Ⅴ)
	식수보급 현대화	상수도 보급률	3.11	4.34	0.28	3.34	83 (Ⅱ)	4 (Ⅱ)	2.00	134 (Ⅳ)	13 (Ⅳ)	2.41	119 (Ⅲ)	8 (Ⅲ)
	하수처리 현대화	하수도 보급률	3.11	4.56	0.27	2.87	93 (Ⅲ)	5 (Ⅱ)	2.80	97 (Ⅲ)	6 (Ⅱ)	2.16	135 (Ⅳ)	13 (Ⅲ)
교육 여건	공교육 기반	1km^2당 학교 수(초·중·고)	3.11	9.87	2.60	2.78	78 (Ⅴ)	10 (Ⅳ)	2.81	70 (Ⅴ)	8 (Ⅳ)	2.76	89 (Ⅴ)	12 (Ⅴ)
	사교육 기반	인구 1천 명당 사설학원 수	3.11	5.61	0.70	3.35	65 (Ⅲ)	3 (Ⅲ)	2.37	119 (Ⅳ)	12 (Ⅳ)	1.54	155 (Ⅴ)	15 (Ⅴ)
보건 복지 여건	의료 서비스질	인구 1천 명당 의료인 수	3.11	9.02	1.19	3.03	78 (Ⅳ)	8 (Ⅳ)	2.34	128 (Ⅳ)	14 (Ⅴ)	2.80	90 (Ⅳ)	10 (Ⅳ)
	의료시설 기반	인구 1천 명당 병상 수	3.11	7.29	1.52	2.34	128 (Ⅴ)	12 (Ⅴ)	2.11	141 (Ⅴ)	13 (Ⅴ)	2.10	145 (Ⅴ)	14 (Ⅴ)
	아동복지 기반	아동인구(6세미만) 1천 명당 보육시설 수	3.11	6.13	0.50	2.19	134 (Ⅳ)	13 (Ⅳ)	2.23	127 (Ⅳ)	12 (Ⅳ)	2.05	143 (Ⅳ)	14 (Ⅳ)
	노인복지 기반	고령인구 1천 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3.11	9.90	2.20	2.77	90 (Ⅴ)	11 (Ⅳ)	2.70	110 (Ⅴ)	13 (Ⅴ)	2.64	121 (Ⅴ)	15 (Ⅴ)

④ 삶의 여유 공간 분석

녹색휴양기반 서산시가 전국등급이 Ⅲ등급, 충남등급이 Ⅱ등급이고, 당진시가 전국등급 V등급, 충남등급 IV등급이며, 태안군은 전국 및 충남등급 모두 V등급으로 분류되어 서산시가 녹색휴양기반에서 양호한 반면 당진시와 태안군은 전국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녹지기반은 서산시와 태안군이 전국등급 Ⅲ등급, 충남등급 IV등급이고, 당진시가 전국등급이 IV등급 충남등급이 V등급으로 세 지역 모두 전국 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화체육기반 지표인 문화시설은 서산시와 당진시가 전국 및 충남등급 모두 IV등급이고, 태안군은 전국등급 V등급, 충남등급 IV등급으로 분류되어 세 지역 모두 전국 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체육시설의 경우 세 지역 모두 전국등급이 V등급이고 충남등급은 서산시가 Ⅲ등급, 당진시가 IV등급, 태안군이 V등급으로 분류되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31〉 삶의 여유공간 분석

부문	지표	세부내용	전국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평균	최대 값	최소 값	현황	전국 순위 (등급)	충남 순위 (등급)	현황	전국 순위 (등급)	충남 순위 (등급)	현황	전국 순위 (등급)	충남 순위 (등급)
녹색 휴양 기반	녹색 휴양 기반	인구 1천 명당 공원 면적	3.11	12.10	2.18	4.35	10 (Ⅲ)	2 (Ⅱ)	3.05	56 (Ⅴ)	8 (Ⅳ)	2.35	156 (Ⅴ)	15 (Ⅴ)
	녹지 기반	녹지율	3.11	4.84	0.00	2.12	132 (Ⅲ)	12 (Ⅳ)	1.82	143 (Ⅳ)	15 (Ⅴ)	2.42	120 (Ⅲ)	7 (Ⅳ)
문화 체육 기반	문화 시설	인구 1천 명당 문화시설 수	3.11	8.57	1.92	2.68	85 (Ⅳ)	10 (Ⅳ)	2.98	55 (Ⅳ)	5 (Ⅳ)	2.53	108 (Ⅴ)	12 (Ⅳ)
	체육 기반	인구 1천 명당 마을체육시설 수	3.11	7.56	2.00	2.63	98 (Ⅴ)	7 (Ⅲ)	2.43	120 (Ⅴ)	12 (Ⅳ)	2.21	146 (Ⅴ)	15 (Ⅴ)

⑤ 지역발전지수(RDI)분석

서산시의 지역발전지수를 종합해보면 주민활력과 지역경제력 부문에서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서비스와 삶의 여유 공간부문은 전국 평균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보육시설수와 녹지율에 있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2〉 서산시 발전수준 실태 분석

부문	부문별 지역발전지수	전국 순위	충남 순위	종합 지역발전지수	전국 순위	충남 순위
주민활력	3.850	38(III)	5(III)	3.240	61(III)	4(III)
지역경제력	3.385	36(IV)	4(III)			
생활서비스	2.921	94(IV)	9(III)			
삶의 여유 공간	2.943	103(IV)	6(IV)			

당진시의 지역발전지수를 종합하면 주민활력과 지역경제력부문이 양호한 반면 생활서비스와 삶의 여유 공간부문이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수도 보급률이 매우 낮으며, 보건 복지 여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33〉 당진시 발전수준 실태 분석

부문	부문별 지역발전지수	전국 순위	충남 순위	종합 지역발전지수	전국 순위	충남 순위
주민활력	3.935	31(III)	4(III)	3.124	72(IV)	6(III)
지역경제력	3.667	27(III)	3(II)			
생활서비스	2.540	130(V)	13(V)			
삶의 여유 공간	2.570	140(V)	14(V)			

태안군의 지역발전지수를 종합하면 지역경제력부문이 양호한 반면 주민 활력, 생활서비스, 삶의 여유 공간부문이 전국 평균보다 낮게 분석되었다. 특히 사교육기반이 부족하며, 지역경제력부문을 제외한 전부문에서 수준의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34〉 태안군 발전수준 실태 분석

부문	부문별 지역발전지수	전국 순위	충남 순위	종합 지역발전지수	전국 순위	충남 순위
주민활력	2.425	115(V)	12(V)	2.542	148(V)	15(V)
지역경제력	3.081	57(IV)	5(IV)			
생활서비스	2.328	149(V)	15(V)			
삶의 여유 공간	2.378	154(V)	15(V)			

생활권 차원에서 세 지역을 살펴보면, 서산시를 중심으로 상수도보급률과 사교육기반 부문을 연계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생활권 차원에서 보건복지여건과 삶의 여유 공간 부문에 있어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 논산-계룡-금산 생활권

① 주민활력분석

인구변화 지표인 인구증가율은 전국 및 충남등급 모두 논산시는 V등급, 금산군은 IV등급으로 평균에 못 미치는 반면 계룡시는 전국등급이 II등급, 충남등급이 I등급으로 분석되었다. 인구구조는 전국 및 충남등급 모두 논산시는 III등급, 계룡시는 I등급, 금산군은 IV등급으로 분류되어 계룡시는 양호한 반면 논산시와 금산군은 전국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구활력의 경우 전국 및 충남등급 모두 논산시가 IV등급, 계룡시와 금산군이 III등급으로서 논산시의 경우 전국 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5〉 주민활력 분석

부문	지표	세부내용	전국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평균	최대 값	최소 값	현황	전국 순위 (등급)	충남 순위 (등급)	현황	전국 순위 (등급)	충남 순위 (등급)	현황	전국 순위 (등급)	충남 순위 (등급)
인구 변화	인구 증가율	연평균 인구 증가율	3.11	8.12	1.14	2.58	108 (Ⅴ)	12 (Ⅴ)	5.64	5 (Ⅱ)	2 (Ⅰ)	2.97	78 (Ⅳ)	8 (Ⅳ)
인구 구조	비고령 인구율	총인구 중 65세 미만 인구 비율	3.11	4.61	1.13	3.01	91 (Ⅲ)	8 (Ⅲ)	4.52	5 (Ⅰ)	1 (Ⅰ)	2.58	109 (Ⅳ)	12 (Ⅳ)
인구 활력	조출생 률	해당연도 중앙인구 1천명 대비 출생자 비율(繰出生率)	3.11	6.39	1.38	2.58	104 (Ⅳ)	8 (Ⅳ)	3.74	42 (Ⅲ)	4 (Ⅲ)	3.37	63 (Ⅲ)	6 (Ⅲ)

② 지역경제력분석

산업기반 지표인 사업체기반의 경우 논산시는 전국등급 V등급, 충남등급 III등급, 계룡시는 전국 및 충남등급 모두 V등급, 금산군은 전국등급 V등급 충남등급 IV등급으로 나타났다. 고용기회의 경우 전국 및 충남등급 모두 논산시는 III등급, 계룡시는 V등급이며, 금산군은 전국등급이 II등급, 충남

등급이 I 등급으로 논산시와 계룡시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나 금산군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수준 경우 논산시가 전국 및 충남등급 모두 V 등급, 계룡시와 금산군이 전국등급 V 등급, 충남등급 IV 등급으로 분류되어 세 지역 모두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재정기반은 세 지역 모두 전국 및 충남등급이 IV 등급으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36> 지역경제력 분석

부문	지표	세부내용	전국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평균	최대 값	최소 값	현황	전국 순위 (등급)	충남 순위 (등급)	현황	전국 순위 (등급)	충남 순위 (등급)	현황	전국 순위 (등급)	충남 순위 (등급)
산업 기반	사업체 기반	총사업체 수	3.11	7.94	2.33	2.96	55 (Ⅴ)	4 (Ⅲ)	2.38	151 (Ⅴ)	15 (Ⅴ)	2.61	90 (Ⅴ)	11 (Ⅳ)
	고용 기회	15세 이상 인구 대비 사업체 종사자 수와 농가인구의 합계 비중	3.11	5.37	0.63	2.98	93 (Ⅲ)	10 (Ⅲ)	0.63	161 (Ⅴ)	15 (Ⅴ)	3.96	32 (Ⅱ)	2 (Ⅰ)
소득 수준	소득 수준	1인당 소득세할 주민세	3.11	8.71	2.00	2.49	119 (Ⅴ)	13 (Ⅴ)	2.98	63 (Ⅴ)	7 (Ⅳ)	2.72	85 (Ⅴ)	10 (Ⅳ)
지자체 재정	재정 기반	재정자립도	3.11	5.75	1.99	2.65	90 (Ⅳ)	11 (Ⅳ)	2.88	78 (Ⅳ)	8 (Ⅳ)	2.89	76 (Ⅳ)	6 (Ⅳ)

③ 생활서비스분석

기초생활여건 지표인 주택신규화의 경우 논산시는 전국등급 III 등급, 충남등급 IV 등급이고, 계룡시는 전국 및 충남등급 모두 I 등급이며, 금산군은 전국등급이 IV 등급, 충남등급이 V 등급으로 분석되었다. 식수보급 현대화 및 하수처리 현대화는 계룡시가 전국 및 충남등급이 모두 I 등급으로 매우 양호하며, 논산시와 금산군은 III 등급으로 분류되나 전국 평균에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여건 지표인 공교육기반은 계룡시가 전국 평균에 가까우며, 논산시와 금산군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교육기반은 계룡시가 매우 양호하고, 논산시와 금산군은 전국 평균에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여건의 경우 논산시와 금산군은 의료서비스질과 의료시설기반

모두 양호하며, 계룡시의 경우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기반은 세 지역모두 양호하며, 노인복지기반은 논산시가 양호한 반면 계룡시와 금산군은 전국 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7〉 생활서비스분석

부문	지표	세부내용	전국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평균	최대 값	최소 값	현황	전국 순위 (등급)	충남 순위 (등급)	현황	전국 순위 (등급)	충남 순위 (등급)	현황	전국 순위 (등급)	충남 순위 (등급)
기초 생활 여건	주택신 규화	20년 미만 주택 비율	3.11	4.71	0.69	2.95	88 (Ⅲ)	9 (Ⅳ)	4.50	13 (Ⅰ)	1 (Ⅰ)	2.50	113 (Ⅳ)	13 (Ⅴ)
	식수 보급 현대화	상수도 보급률	3.11	4.34	0.28	2.33	122 (Ⅲ)	10 (Ⅲ)	4.15	32 (Ⅰ)	1 (Ⅰ)	2.22	127 (Ⅲ)	12 (Ⅳ)
	하수 처리 현대화	하수도 보급률	3.11	4.56	0.27	2.36	125 (Ⅲ)	10 (Ⅲ)	4.35	18 (Ⅰ)	1 (Ⅰ)	2.35	126 (Ⅲ)	11 (Ⅲ)
교육 여건	공교육 기반	1km ² 당 학교 수(초·중·고)	3.11	9.87	2.60	2.92	46 (Ⅴ)	4 (Ⅲ)	3.08	32 (Ⅴ)	2 (Ⅱ)	2.71	111 (Ⅴ)	14 (Ⅴ)
	사교육 기반	인구 1천 명당 사설학원 수	3.11	5.61	0.70	2.80	91 (Ⅲ)	7 (Ⅳ)	5.16	4 (Ⅰ)	1 (Ⅰ)	1.91	147 (Ⅳ)	13 (Ⅴ)
보건 복지 여건	의료 서비스 질	인구 1천 명당 의료인 수	3.11	9.02	1.19	4.16	24 (Ⅱ)	4 (Ⅱ)	2.38	125 (Ⅳ)	13 (Ⅴ)	3.76	41 (Ⅲ)	5 (Ⅲ)
	의료 시설 기반	인구 1천 명당 병상 수	3.11	7.29	1.52	3.87	31 (Ⅲ)	4 (Ⅲ)	2.03	150 (Ⅴ)	15 (Ⅴ)	3.85	32 (Ⅲ)	5 (Ⅲ)
	아동 복지 기반	아동인구(6세미만) 1천 명당 보육시설 수	3.11	6.13	0.50	4.38	20 (Ⅱ)	2 (Ⅰ)	3.59	49 (Ⅱ)	5 (Ⅱ)	3.06	74 (Ⅲ)	7 (Ⅲ)
	노인 복지 기반	고령인구 1천 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3.11	9.90	2.20	3.16	41 (Ⅳ)	3 (Ⅱ)	2.80	87 (Ⅴ)	10 (Ⅳ)	2.76	94 (Ⅴ)	12 (Ⅳ)

④ 삶의 여유 공간 분석

녹색휴양기반의 경우 공원면적은 계룡시가 전국등급 II등급(전국순위 2위), 충남등급 I 등급으로 매우 양호하며, 논산시와 금산군은 전국등급 V 등급, 충남등급 IV등급으로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녹지율은 계룡시와 금산군이 전국등급 II등급으로 매우 양호하며, 논산시의 경우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기반 지표중 문화시설의 경우 논산시는 전국 및 충남등급 모두 IV등급이고, 계룡시는 전국 및 충남등급 모두 V등급으로 전국 평균에 못 미치나 금산군은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체육시설은 세 지역 모두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38〉 삶의 여유 공간 분석

부문	지표	세부내용	전국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평균	최대 값	최소 값	현황	전국 순위 (등급)	충남 순위 (등급)	현황	전국 순위 (등급)	충남 순위 (등급)	현황	전국 순위 (등급)	충남 순위 (등급)
녹색 휴양 기반	녹색 휴양 기반	인구 1천 명당 공원 면적	3.11	12.10	2.18	2.86	83 (Ⅴ)	11 (Ⅳ)	8.11	2 (Ⅱ)	1 (Ⅰ)	2.97	68 (Ⅴ)	9 (Ⅳ)
	녹지 기반	녹지율	3.11	4.84	0.00	2.14	129 (Ⅲ)	11 (Ⅳ)	3.28	83 (Ⅱ)	4 (Ⅱ)	3.67	52 (Ⅱ)	1 (Ⅰ)
문화 체육 기반	문화 시설	인구 1천 명당 문화시설 수	3.11	8.57	1.92	2.83	65 (Ⅳ)	8 (Ⅳ)	2.07	158 (Ⅴ)	15 (Ⅴ)	3.28	41 (Ⅳ)	4 (Ⅲ)
	체육 시설	인구 1천 명당 마을체육시설 수	3.11	7.56	2.00	2.47	114 (Ⅴ)	11 (Ⅳ)	2.84	80 (Ⅳ)	3 (Ⅱ)	2.63	97 (Ⅴ)	6 (Ⅲ)

⑤ 지역발전지수(RDI)분석⁷⁾

논산시의 지역발전지수를 종합하면 생활서비스부문은 양호하나 주민활력, 지역경제력, 삶의 여유 공간 부문에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녹지율과 체육시설부문에서 낮은 것으로 분석되며, 상수도 및 하수도보급률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9〉 논산시 발전수준 실태 분석

부문	부문별 지역발전지수	전국 순위	충남 순위	종합 지역발전지수	전국 순위	충남 순위
주민활력	2.726	95(IV)	10(IV)	2.884	101(IV)	10(IV)
지역경제력	2.768	112(V)	12(IV)			
생활서비스	3.214	71(III)	4(II)			
삶의 여유 공간	2.576	139(V)	13(V)			

7) 지역발전지수는 각 부문을 나타내는 지표를 활용하여 표준화(Z-Score)에 의한 지수이며, 0값이 평균임

계룡시의 지역발전지수를 종합하면 지역경제력을 제외한 전 부문에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0〉 계룡시 발전수준 실태 분석

부문	부문별 지역발전지수	전국 순위	충남 순위	종합 지역발전지수	전국 순위	충남 순위
주민활력	4.633	6(Ⅱ)	2(Ⅱ)	3.555	32(Ⅲ)	3(Ⅱ)
지역경제력	2.218	161(Ⅴ)	15(Ⅴ)			
생활서비스	3.560	37(Ⅲ)	2(Ⅰ)			
삶의 여유 공간	4.073	6(Ⅱ)	1(Ⅰ)			

금산군의 지역발전지수를 종합하면 지역경제력과 삶의 여유 공간부문에서 양호한 반면 주민활력은 전국 평균에는 약간 미치지 못하지만 전국순위는 중간적 위치에 있고, 생활서비스가 낮은 편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상·하수도 보급과 사교육기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1〉 금산군 발전수준 실태 분석

부문	부문별 지역발전지수	전국 순위	충남 순위	종합 지역발전지수	전국 순위	충남 순위
주민활력	2.975	87(Ⅳ)	7(Ⅳ)	2.956	92(Ⅳ)	7(Ⅳ)
지역경제력	3.045	63(Ⅳ)	6(Ⅳ)			
생활서비스	2.792	102(Ⅳ)	10(Ⅳ)			
삶의 여유 공간	3.139	75(Ⅲ)	3(Ⅲ)			

생활권 차원에서 종합하면, 계룡시를 중심으로 기초생활여건을 모색할 필요하고, 보건부문은 논산시와 금산군을 중심으로 계룡시의 연계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에 있어 논산시를 중심으로 계룡시와 금산군의 연계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6) 홍성-예산 생활권

① 주민활력분석

인구변화 지표인 인구증가율의 경우 홍성군은 IV등급, 예산군은 V등급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충남 등급의 경우 홍성군 IV등급, 예산군 V등급으로 분석되었다. 인구구조의 경우 홍성군은 전국등급이 III등급, 충남등급은 III등급으로 나타났다. 예산군은 전국등급이 III등급, 충남등급은 IV등급으로 분석되었다. 인구활력 지표로 조출생률의 경우 홍성은 전국 및 충남등급 모두 IV등급이며, 예산군은 V등급으로 분석되었다.

<표 3-42> 주민활력 분석

부문	지표	세부내용	전국			홍성군		예산군			
			평균	최대값	최소값	현황	전국 순위 (등급)	충남 순위 (등급)	현황	전국 순위 (등급)	충남 순위 (등급)
인구 변화	인구 증가율	연평균 인구 증가율	3.11	8.12	1.14	3.04	72 (Ⅳ)	7 (Ⅳ)	2.61	104 (Ⅴ)	10 (Ⅴ)
인구 구조	비고령 인구율	총인구 중 65세 미만 인구 비율	3.11	4.61	1.13	2.94	92 (Ⅲ)	9 (Ⅲ)	2.65	106 (Ⅲ)	11 (Ⅳ)
인구 활력	조출생률	해당연도 중앙인구 1천명 대비 출생자 비율(繰出生率)	3.11	6.39	1.38	2.46	112 (Ⅳ)	10 (Ⅳ)	2.17	130 (Ⅴ)	12 (Ⅴ)

② 지역경제력분석

산업기반 지표인 사업체수는 홍성군과 예산군 모두 경우 전국등급이 V등급, 충남등급이 IV등급으로 분석되었다. 고용기회는 홍성군의 전국등급이 III등급, 충남등급이 II등급으로 나타났다. 예산군은 전국 및 충남등급 모두 II등급으로 분석되었다. 소득수준의 경우 홍성군과 예산군 모두 전국등급 V등급, 충남등급 IV등급으로 분석되었다. 지자체 재정 지표인 재정자립도에서는 홍성군이 전국등급은 IV등급, 충남등급은 III등급으로 분석되었고, 예산군은 전국 및 충남등급 모두 IV등급으로 분석되었다.

〈표 3-43〉 지역경제력 분석

부문	지표	세부내용	전국			홍성군			예산군		
			평균	최대 값	최소 값	현황	전국 순위 (등급)	충남 순위 (등급)	현황	전국 순위 (등급)	충남 순위 (등급)
산업 기반	사업체 기반	총사업체 수	3.11	7.94	2.33	2.75	73 (V)	8 (IV)	2.70	79 (V)	9 (IV)
	고용기회	15세 이상 인구 대비 사업체 종사자 수와 농가인구의 합계 비중	3.11	5.37	0.63	3.36	72 (III)	6 (II)	3.52	62 (II)	4 (II)
소득 수준	소득수준	1인당 소득세할 주민세	3.11	8.71	2.00	2.70	88 (V)	11 (IV)	2.78	77 (V)	9 (IV)
지자 체재정	재정기반	재정자립도	3.11	5.75	1.99	3.22	54 (IV)	5 (III)	2.62	92 (IV)	12 (IV)

③ 생활서비스분석

기초생활여건의 경우 홍성군과 예산군 모두 20년 미만 주택 비율이 전국 등급 III등급, 충남등급이 IV등급으로 분석되었다. 상수도 보급률은 홍성군이 전국 및 충남등급 모두 III등급이고, 예산군은 IV등급으로 분석되었으며, 두 지역 모두 전국 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도 보급률은 전국등급은 III등급, 충남등급은 II등급으로 상수도 보급률보다는 높으나 역시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여건 지표의 경우 공교육기반은 홍성군과 예산군 모두 전국 평균을 하회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V등급, 충남 내에서 IV등급으로 분석되었다. 사교육 기반은 전국 및 충남 내에서 모두 III등급으로 공교육기반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으로 분석되었으나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여건 지표인 의료서비스질은 홍성군의 경우 전국 및 충남등급 모두 II등급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예산군은 전국 및 충남등급 모두 IV등급으로 분석되었다. 의료시설기반의 경우 홍성군과 예산군 모두 전국 및 충남등급이 IV등급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기반의 경우 홍성군은 전국 등급 IV, 충남 등급 III으로 분석되었고, 예산군은 전국 및 충남등급 모두 V등급으로 분석되었다. 두 지역 모두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노인복지기반은 홍성군의 경우 전국등급이 IV등급, 충남등급이 III등급으로 분석되었으

며, 예산군은 전국등급이 V등급, 충남등급이 IV등급으로 분석되었다.

<표 3-44> 생활서비스분석

부문	지표	세부내용	전국			홍성군			예산군		
			평균	최대 값	최소 값	현황	전국 순위 (등급)	충남 순위 (등급)	현황	전국 순위 (등급)	충남 순위 (등급)
기초 생활 여건	주택 신규화	20년 미만 주택 비율	3.11	4.71	0.69	2.97	85 (III)	8 (IV)	2.90	91 (III)	10 (IV)
	식수보급 현대화	상수도 보급률	3.11	4.34	0.28	2.28	12 3(III)	11 (III)	1.72	143 (IV)	14 (IV)
	하수처리 현대화	하수도 보급률	3.11	4.56	0.27	2.70	101 (III)	7 (II)	2.55	114 (III)	8 (II)
교육 여건	공교육 기반	1km ² 당 학교 수(초·중·고)	3.11	9.87	2.60	2.87	55 (V)	5 (IV)	2.80	71 (V)	9 (IV)
	사교육 기반	인구 1천 명당 사설학원 수	3.11	5.61	0.70	3.05	75 (III)	4 (III)	2.88	88 (III)	6 (III)
보건 복지 여건	의료 서비스질	인구 1천 명당 의료인 수	3.11	9.02	1.19	4.33	17 (II)	2 (II)	2.99	80 (IV)	9 (IV)
	의료시설 기반	인구 1천 명당 병상 수	3.11	7.29	1.52	3.03	72 (IV)	7 (IV)	2.78	86 (IV)	9 (IV)
	아동복지 기반	아동인구(6세미만) 1천 명당 보육시설 수	3.11	6.13	0.50	2.64	106 (IV)	11 (III)	1.71	155 (V)	15 (V)
	노인복지 기반	고령인구 1천 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3.11	9.90	2.20	3.07	51 (IV)	5 (III)	2.90	68 (V)	7 (IV)

④ 삶의 여유 공간 분석

녹색휴양기반의 경우 홍성군의 전국등급이 IV등급, 충남등급이 III등급이고, 예산군은 전국 및 충남등급 모두 V등급으로 분류되었다. 홍성군의 경우 전국 평균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전국등급이 IV등급인 이유는 상위도시와의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예산군은 전국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녹지기반은 홍성군과 예산군 모두 전국등급이 III등급, 충남등급이 IV등급으로 나타났으며, 홍성군 및 예산군 모두 전국 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문화체육기반 중 문화시설은 홍성군과 예산군 모두 전국 및 충남등급이 IV등급으로 분석되었다. 체육시설은 홍성군의 전국 및 충남등급 모두 V등급, 예산군의 전국등급은 V등급, 충남등급은 III등급으로 분석되었다.

〈표 3-45〉 삶의 여유 공간 분석

부문	지표	세부내용	전국			현황	홍성군		예산군	
			평균	최대 값	최소 값		전국 순위 (등급)	충남 순위 (등급)	전국 순위 (등급)	충남 순위 (등급)
녹색 휴양 기반	녹색휴양 기반	인구 천 명당 공원 면적	3.11	12.10	2.18	3.39	35 (IV)	4 (III)	120 (V)	13 (V)
	녹지기반	녹지율	3.11	4.84	0.00	2.21	127 (III)	10 (IV)	123 (III)	9 (IV)
문화체육 기반	문화시설	인구 천 명당 문화시설 수	3.11	8.57	1.92	2.68	85 (IV)	10 (IV)	55 (IV)	5 (IV)
	체육시설	인구 천명당 마을체육시설 수	3.11	7.56	2.00	2.22	145 (V)	14 (V)	94 (V)	5 (III)

⑤ 지역발전지수(RDI)분석

홍성군의 지역발전지수를 종합하면 전 부문에서 전국 평균에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삶의 여유 공간 부문이 매우 낮게 분석되었다. 낮은 분야로는 상수도보급률, 녹지율, 체육시설 등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6〉 홍성군 발전수준 실태 분석

부문	부문별 지역발전지수	전국 순위	충남 순위	종합 지역발전지수	전국 순위	충남 순위
주민활력	2.811	91(IV)	8(IV)	2.892	99(IV)	9(IV)
지역경제력	3.009	68(IV)	7(IV)			
생활서비스	2.995	85(IV)	6(III)			
삶의 여유 공간	2.622	134(V)	12(V)			

예산군의 지역발전지수를 종합하면 전 부문에서 전국평균에 못 미치며, 특히 주민활력, 생활서비스, 삶의 여유 공간부문에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낮은 분야로는 상수도 보급률, 보육시설, 녹지율 등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7〉 예산군 발전수준 실태 분석

부문	부문별 지역발전지수	전국 순위	충남 순위	종합 지역발전지수	전국 순위	충남 순위
주민활력	2.476	110(V)	11(V)	2.653	132(V)	12(V)
지역경제력	2.905	80(V)	8(IV)			
생활서비스	2.582	125(IV)	12(IV)			
삶의 여유 공간	2.665	129(V)	11(V)			

생활권 차원의 사업은 생활인프라 측면에서 공통의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특히 내포 신도시를 중심으로 주민의 편익을 높이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생활권별 지역발전지수 종합

생활권 시군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지수의 지표들을 활용하여 전국의 시군과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생활권별로 지표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순위를 파악하고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충남내 생활권의 분야별 수준을 파악해 보았다. 시군들의 사업 방향을 도출하였다. 생활권내 시군들의 사업방향 설정을 위하여 시군별 하위 30%이하의 지표들과 군집분석 결과 IV, V등급 지표들을 중심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의 표는 충남의 시군들의 각 지표를 종합한 표로서 순위와 등급을 나타낸 표이다. 음영처리된 지표는 하위 30%이하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등급은 낮으나 하위 30%이하가 아닌 지표들의 경우 전국 대부분의 시군들이 전반적으로 시설수준이 낮아 향상이 필요한 지표라 이해할 수 있다.

〈표 3-48〉 시군별 지역발전지수 순위와 등급 종합

종합 부문	부문	지표	천 안 시	아 산 시	공 주 시	부 여 군	청 양 군	보 령 시	서 천 군	서 산 시	당 진 군	태 안 군	논 산 시	계 룡 시	금 산 군	홍 성 군	예산 군
주민 활력	인구 변화	인구 증가율	28 (Ⅲ)	4 (Ⅱ)	96 (Ⅴ)	130 (Ⅴ)	105 (Ⅴ)	64 (Ⅳ)	122 (Ⅴ)	31 (Ⅲ)	12 (Ⅱ)	131 (Ⅴ)	108 (Ⅴ)	5 (Ⅱ)	78 (Ⅳ)	72 (Ⅳ)	104 (Ⅴ)
	인구 구조	비고령 인구율	11 (Ⅰ)	29 (Ⅰ)	76 (Ⅲ)	121 (Ⅳ)	137 (Ⅴ)	81 (Ⅲ)	128 (Ⅳ)	59 (Ⅱ)	68 (Ⅱ)	103 (Ⅲ)	91 (Ⅲ)	5 (Ⅰ)	109 (Ⅳ)	92 (Ⅲ)	106 (Ⅲ)
	인구 활력	조출생률	17 (Ⅱ)	5 (Ⅰ)	108 (Ⅳ)	142 (Ⅴ)	132 (Ⅴ)	98 (Ⅳ)	140 (Ⅴ)	28 (Ⅱ)	60 (Ⅲ)	127 (Ⅴ)	104 (Ⅳ)	42 (Ⅲ)	63 (Ⅲ)	112 (Ⅳ)	130 (Ⅴ)
지역 경제력	산업 기반	사업체 기반	10 (Ⅲ)	39 (Ⅳ)	63 (Ⅴ)	92 (Ⅴ)	146 (Ⅴ)	67 (Ⅴ)	97 (Ⅴ)	52 (Ⅴ)	57 (Ⅴ)	87 (Ⅴ)	55 (Ⅴ)	151 (Ⅴ)	90 (Ⅴ)	73 (Ⅴ)	79 (Ⅴ)
		고용기회	116 (Ⅳ)	92 (Ⅲ)	103 (Ⅲ)	67 (Ⅱ)	18 (Ⅰ)	106 (Ⅲ)	75 (Ⅲ)	98 (Ⅲ)	74 (Ⅲ)	59 (Ⅱ)	93 (Ⅲ)	161 (Ⅴ)	32 (Ⅱ)	72 (Ⅲ)	62 (Ⅱ)
	소득 수준	소득수준	22 (Ⅳ)	12 (Ⅲ)	47 (Ⅳ)	120 (Ⅴ)	133 (Ⅴ)	73 (Ⅴ)	106 (Ⅴ)	19 (Ⅳ)	15 (Ⅲ)	45 (Ⅳ)	119 (Ⅴ)	63 (Ⅴ)	85 (Ⅴ)	88 (Ⅴ)	77 (Ⅴ)
	지자체 재정	재정기반	12 (Ⅱ)	17 (Ⅱ)	88 (Ⅳ)	109 (Ⅴ)	131 (Ⅴ)	77 (Ⅳ)	137 (Ⅴ)	47 (Ⅲ)	36 (Ⅲ)	80 (Ⅳ)	90 (Ⅳ)	78 (Ⅳ)	76 (Ⅳ)	54 (Ⅳ)	92 (Ⅳ)
생활 서비스	기초 생활 여건	주택 신규화	26 (Ⅰ)	36 (Ⅱ)	75 (Ⅲ)	106 (Ⅲ)	128 (Ⅳ)	81 (Ⅲ)	107 (Ⅲ)	58 (Ⅱ)	68 (Ⅱ)	115 (Ⅳ)	88 (Ⅲ)	13 (Ⅰ)	113 (Ⅳ)	85 (Ⅲ)	91 (Ⅲ)
		식수보급현 대화	64 (Ⅱ)	60 (Ⅱ)	103 (Ⅲ)	111 (Ⅲ)	160 (Ⅴ)	101 (Ⅲ)	120 (Ⅲ)	83 (Ⅱ)	134 (Ⅳ)	119 (Ⅲ)	122 (Ⅲ)	32 (Ⅰ)	127 (Ⅲ)	123 (Ⅲ)	143 (Ⅳ)
		하수처리현 대화	27 (Ⅰ)	115 (Ⅲ)	87 (Ⅲ)	146 (Ⅳ)	133 (Ⅳ)	88 (Ⅲ)	156 (Ⅳ)	93 (Ⅲ)	97 (Ⅲ)	135 (Ⅳ)	125 (Ⅲ)	18 (Ⅰ)	126 (Ⅲ)	101 (Ⅲ)	114 (Ⅲ)
	교육 여건	공교육 기반	28 (Ⅴ)	43 (Ⅴ)	95 (Ⅴ)	84 (Ⅴ)	116 (Ⅴ)	64 (Ⅴ)	60 (Ⅴ)	78 (Ⅴ)	70 (Ⅴ)	89 (Ⅴ)	46 (Ⅴ)	32 (Ⅴ)	111 (Ⅴ)	55 (Ⅴ)	71 (Ⅴ)
		사교육 기반	42 (Ⅱ)	104 (Ⅳ)	93 (Ⅲ)	112 (Ⅳ)	152 (Ⅴ)	78 (Ⅲ)	100 (Ⅲ)	65 (Ⅲ)	119 (Ⅳ)	155 (Ⅴ)	91 (Ⅲ)	4 (Ⅰ)	147 (Ⅳ)	75 (Ⅲ)	88 (Ⅲ)
	보건 복지 여건	의료 서비스질	19 (Ⅱ)	112 (Ⅳ)	7 (Ⅱ)	91 (Ⅳ)	137 (Ⅴ)	53 (Ⅲ)	59 (Ⅲ)	78 (Ⅳ)	128 (Ⅳ)	90 (Ⅳ)	24 (Ⅱ)	125 (Ⅳ)	41 (Ⅲ)	17 (Ⅱ)	80 (Ⅳ)
		의료 시설기반	84 (Ⅳ)	110 (Ⅴ)	8 (Ⅱ)	29 (Ⅲ)	105 (Ⅴ)	61 (Ⅳ)	20 (Ⅲ)	128 (Ⅴ)	141 (Ⅴ)	145 (Ⅴ)	31 (Ⅲ)	150 (Ⅴ)	32 (Ⅲ)	72 (Ⅳ)	86 (Ⅳ)
		아동복지기 반	68 (Ⅲ)	38 (Ⅱ)	87 (Ⅲ)	94 (Ⅲ)	16 (Ⅱ)	99 (Ⅲ)	32 (Ⅱ)	134 (Ⅳ)	127 (Ⅳ)	143 (Ⅳ)	20 (Ⅱ)	49 (Ⅱ)	74 (Ⅲ)	106 (Ⅳ)	155 (Ⅴ)
		노인복지기 반	27 (Ⅳ)	35 (Ⅳ)	115 (Ⅴ)	59 (Ⅴ)	77 (Ⅴ)	72 (Ⅴ)	43 (Ⅳ)	90 (Ⅴ)	110 (Ⅴ)	121 (Ⅴ)	41 (Ⅳ)	87 (Ⅴ)	94 (Ⅴ)	51 (Ⅳ)	68 (Ⅴ)
삶의 여유 공간	녹색 휴양 기반	녹색휴양기 반	138 (Ⅴ)	50 (Ⅳ)	49 (Ⅳ)	36 (Ⅳ)	106 (Ⅴ)	81 (Ⅴ)	20 (Ⅳ)	10 (Ⅲ)	56 (Ⅴ)	156 (Ⅴ)	83 (Ⅴ)	2 (Ⅱ)	68 (Ⅴ)	35 (Ⅳ)	120 (Ⅴ)
	녹지 기반	녹지가반	122 (Ⅲ)	140 (Ⅲ)	53 (Ⅱ)	110 (Ⅲ)	74 (Ⅱ)	97 (Ⅲ)	137 (Ⅲ)	132 (Ⅲ)	143 (Ⅳ)	120 (Ⅲ)	129 (Ⅲ)	83 (Ⅱ)	52 (Ⅱ)	127 (Ⅲ)	123 (Ⅲ)
	문화 체육 기반	문화시설	8 (Ⅱ)	30 (Ⅲ)	15 (Ⅲ)	65 (Ⅳ)	153 (Ⅴ)	55 (Ⅳ)	135 (Ⅴ)	85 (Ⅳ)	55 (Ⅳ)	108 (Ⅴ)	65 (Ⅳ)	158 (Ⅴ)	41 (Ⅳ)	85 (Ⅳ)	55 (Ⅳ)
		체육시설	136 (Ⅴ)	107 (Ⅴ)	88 (Ⅳ)	100 (Ⅴ)	34 (Ⅳ)	113 (Ⅴ)	37 (Ⅳ)	98 (Ⅴ)	120 (Ⅴ)	146 (Ⅴ)	114 (Ⅴ)	80 (Ⅳ)	97 (Ⅴ)	145 (Ⅴ)	94 (Ⅴ)

주 : 순위는 전국 순위이고, 등급은 군집분석에 의한 I~V등급 분류이며, 음영표시는 전국 161개 지역 중 하위 30%에 속하는 지역 및 지표임

3. 지역간 통행구조 분석⁸⁾⁹⁾

1) 천안시

천안시의 충남 내 지역간 통행별 비중은 총 목적 통행을 기준으로 아산시의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논산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통행 중 쇼핑에서 공주시의 유출·입이 아산시에 이어 높게 나타났으며, 여가·친교·오락은 논산시와 태안군이 유출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3-49〉 천안시 통행구조 분석

지역	총목적통행		출근		등교		업무		쇼핑		귀가		여가·친교·오락		기타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천안시	-	-	-	-	-	-	-	-	-	-	-	-	-	-	-	-
공주시	4.46	4.26	4.83	2.63	4.57	9.67	3.69	4.24	20.47	23.69	2.72	3.67	9.35	4.81	7.33	6.40
보령시	2.15	2.32	0.12	0.06	0.24	0.19	0.71	1.16	0.23	0.90	3.18	1.45	6.69	11.17	1.55	3.87
아산시	65.38	66.29	70.77	78.69	87.99	82.13	53.06	62.29	69.39	63.40	65.58	75.59	51.14	12.95	66.02	49.79
서산시	2.15	1.74	0.97	0.85	2.34	0.04	2.65	4.71	0.24	0.66	1.74	1.68	6.76	0.55	2.53	10.95
논산시	8.77	8.47	8.11	3.36	1.41	1.99	27.60	9.83	0.42	1.77	6.37	5.20	4.97	32.35	1.27	3.43
계룡시	0.30	0.32	0.51	0.07	0.15	0.13	0.85	1.47	0.08	0.26	0.10	0.31	0.39	0.16	0.17	0.39
당진시	4.04	4.14	2.26	6.90	1.77	3.45	2.84	4.55	7.48	4.40	4.96	3.24	2.53	1.13	6.77	2.92
금산군	0.90	1.02	0.32	0.12	0.18	1.35	1.05	1.24	0.42	0.65	0.88	0.23	3.70	4.74	0.48	0.56
부여군	1.24	1.14	0.19	0.13	0.08	0.07	1.80	2.91	0.19	0.71	1.31	0.16	4.28	3.84	0.85	7.15
서천군	0.30	0.33	0.08	0.04	0.06	0.05	0.94	1.66	0.08	0.31	0.11	0.12	0.74	0.27	0.54	2.40
청양군	0.35	0.35	1.14	0.08	0.06	0.05	0.58	0.52	0.21	0.79	0.04	0.60	0.39	0.15	0.46	0.91
홍성군	2.53	2.09	3.62	2.24	0.39	0.31	0.70	1.92	0.06	0.12	2.13	2.48	2.86	0.92	8.00	6.45
예산군	3.57	3.68	6.72	4.80	0.72	0.55	3.23	3.09	0.71	2.22	3.51	4.91	0.89	0.36	3.72	4.08
태안군	3.84	3.84	0.35	0.02	0.04	0.03	0.31	0.43	0.02	0.10	7.38	0.37	5.30	26.59	0.29	0.70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8) 사용된 자료는 국가교통 D/B(한국교통연구원, 2014) 자료이며 단위는 사람통행/일을 사용함, 한국교통연구원(KOTI), 2014. 03, “교통수요 분석 기초자료 배포 설명자료”

9) 지역 내 통행은 비중에서 제외함

2) 공주시

공주시의 충남 내 지역간 통행별 비중은 유입통행에서 논산시가 가장 높고, 유출통행에서 천안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특징을 살펴보면 출근유형은 계룡시로부터 유입통행, 등교유형은 논산시로의 유출통행, 쇼핑은 천안와 청양군으로부터의 유입통행, 귀가는 논산시로의 유출·입통행 등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3-50〉 공주시 통행구조 분석

지역	총목적통행		출근		등교		업무		쇼핑		귀가		여가·친교·오락		기타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천안시	19.69	23.68	21.03	25.82	88.16	28.17	11.15	17.29	49.95	92.76	16.67	19.51	24.30	23.47	7.97	26.89
공주시	-	-	-	-	-	-	-	-	-	-	-	-	-	-	-	-
보령시	3.35	4.26	0.40	0.77	0.17	0.34	3.64	10.16	0.13	2.07	5.09	2.04	4.88	10.26	1.68	2.62
아산시	3.56	4.81	1.95	9.90	4.79	2.97	4.37	6.49	7.04	4.00	4.33	2.87	3.03	2.58	2.27	4.94
서산시	3.61	4.22	0.15	0.17	0.13	0.12	12.36	12.04	0.72	0.44	0.52	3.59	3.45	2.34	7.25	5.28
논산시	24.94	15.77	18.66	14.80	0.34	63.05	10.54	0.80	0.00	0.00	41.03	22.49	8.61	4.26	31.73	9.93
계룡시	10.94	7.30	35.05	6.83	0.15	0.03	10.46	2.67	0.00	0.00	3.81	17.10	7.91	0.06	7.81	0.08
당진시	3.94	4.75	0.29	0.36	0.09	0.08	5.92	6.21	0.12	0.09	2.91	1.73	4.47	12.16	10.19	11.86
금산군	3.39	3.37	0.00	21.41	0.13	0.03	0.00	0.00	0.00	0.00	9.22	0.08	0.06	0.01	0.03	0.01
부여군	8.78	9.78	11.22	5.85	1.54	1.04	12.08	3.57	0.38	0.18	6.25	10.47	10.74	20.97	9.71	15.28
서천군	1.32	1.79	0.16	0.17	1.45	1.19	2.08	3.12	0.14	0.08	0.19	0.25	3.49	4.59	3.03	3.86
청양군	6.82	8.83	9.53	11.48	1.67	1.77	5.57	7.33	40.81	0.01	4.60	13.24	12.34	2.61	4.93	7.27
홍성군	3.69	4.32	0.51	0.69	0.25	0.17	6.05	10.42	0.12	0.04	3.28	2.04	3.73	9.94	7.42	3.65
예산군	4.94	5.91	0.94	1.62	0.61	0.60	13.51	17.18	0.23	0.12	1.52	3.87	12.15	5.80	3.72	5.56
태안군	1.01	1.21	0.10	0.13	0.53	0.43	2.27	2.71	0.36	0.19	0.55	0.73	0.84	0.95	2.25	2.78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3) 보령시

보령시의 충남 내 통행별 비중은 총목적의 유출·입통행 모두 홍성군이 많고 그 다음으로 천안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등교는 예산군으로의 유출통행, 쇼핑은 청양군으로부터의 유입통행, 여가·친교·오락은 천안시로부터의 유입통행이 높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표 3-51〉 보령시 통행구조 분석

지역	총목적통행		출근		등교		업무		쇼핑		귀가		여가·친교·오락		기타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천안시	17.17	16.11	0.89	1.13	18.21	6.83	3.23	3.68	3.15	1.85	15.90	31.23	42.75	18.08	11.45	9.56
공주시	5.65	5.70	1.08	0.90	4.49	0.62	9.08	4.76	6.37	0.13	3.78	9.07	6.91	5.91	4.97	3.52
보령시	-	-	-	-	-	-	-	-	-	-	-	-	-	-	-	-
아산시	3.06	3.10	0.53	0.62	6.56	2.28	2.56	3.28	0.62	0.37	2.49	1.74	3.88	5.83	7.96	6.34
서산시	5.48	5.31	1.96	2.53	1.51	0.64	5.89	6.73	0.77	0.46	2.21	1.92	6.62	8.27	16.93	13.84
논산시	2.22	2.46	4.48	0.66	1.47	0.29	1.55	1.36	0.21	23.57	1.82	3.84	2.10	1.05	2.07	1.62
계룡시	0.06	0.07	0.06	0.02	0.10	0.03	0.07	0.11	0.10	0.01	0.05	0.07	0.05	0.07	0.12	0.08
당진시	5.03	5.18	1.07	3.53	0.53	0.20	9.13	9.43	0.04	0.02	1.41	2.25	5.57	8.95	9.49	3.64
금산군	0.23	0.24	0.17	0.19	0.37	0.14	0.33	0.42	1.00	0.60	0.09	0.08	0.16	0.27	0.51	0.43
부여군	8.19	8.66	13.56	9.20	2.81	25.29	3.25	6.31	0.04	0.02	17.59	7.30	3.80	8.91	1.48	15.35
서천군	7.59	9.20	9.06	10.18	0.62	0.20	14.47	20.70	0.03	4.91	1.43	2.26	5.76	9.44	9.61	9.71
청양군	5.73	6.17	10.46	17.79	0.19	0.07	3.88	4.82	80.51	0.01	9.06	7.39	0.64	1.18	1.45	1.39
홍성군	31.01	29.57	55.25	51.72	60.98	19.21	32.49	27.67	6.84	67.87	34.72	31.41	16.50	14.03	19.79	22.48
예산군	5.25	4.64	0.55	0.64	1.75	44.05	9.25	4.79	0.24	0.13	8.77	0.61	1.39	12.00	4.56	3.59
태안군	3.32	3.59	0.87	0.90	0.41	0.13	4.81	5.95	0.08	0.04	0.68	0.83	3.86	6.03	9.59	8.45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4) 아산시

아산시의 충남 내 지역간 통행별 비중은 모든 유형의 유출·입통행 기준으로 천안시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예산으로 나타났다.

〈표 3-52〉 아산시 통행구조 분석

지역	총목적통행		출근		등교		업무		쇼핑		귀가		여가·친교·오락		기타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천안시	87.85	86.93	90.97	88.62	94.75	95.36	75.62	83.18	89.73	97.56	92.82	88.40	65.62	75.93	51.55	78.53
공주시	1.15	1.08	1.11	0.59	0.46	0.68	2.52	1.74	4.99	1.18	0.59	1.06	2.30	2.02	3.28	0.92
보령시	0.52	0.58	0.04	0.09	0.08	0.09	1.16	0.96	0.25	0.06	0.26	0.25	4.83	3.41	2.51	1.36
아산시	-	-	-	-	-	-	-	-	-	-	-	-	-	-	-	-
서산시	0.32	0.32	0.05	0.09	0.02	0.02	0.99	0.79	0.21	0.05	0.06	0.11	3.31	2.03	1.42	0.44
논산시	1.60	1.72	0.09	0.24	0.39	0.35	1.28	2.35	0.36	0.14	0.24	0.46	2.60	3.45	27.71	10.16
계룡시	0.04	0.05	0.01	0.02	0.02	0.03	0.13	0.13	0.07	0.01	0.03	0.03	0.18	0.11	0.13	0.08
당진시	1.74	1.81	1.03	2.78	0.06	0.07	7.32	4.24	0.41	0.11	0.99	1.12	5.02	3.50	1.85	1.16
금산군	0.11	0.11	0.04	0.07	0.02	0.02	0.35	0.37	1.03	0.22	0.03	0.02	0.86	0.53	0.23	0.08
부여군	0.21	0.22	0.04	0.09	0.02	0.02	1.06	0.37	0.18	0.04	0.04	0.05	1.58	0.99	0.38	0.87
서천군	0.17	0.19	0.02	0.03	0.03	0.03	0.44	0.39	0.32	0.08	0.09	0.09	1.28	0.89	0.83	0.43
청양군	0.13	0.15	0.02	0.31	0.02	0.02	0.46	0.27	0.17	0.04	0.09	0.03	0.49	0.43	0.61	0.21
홍성군	1.06	1.11	0.34	0.78	0.60	0.86	1.08	0.86	0.35	0.02	1.14	1.04	4.64	2.58	3.90	1.92
예산군	4.93	5.58	6.20	6.19	3.52	2.44	7.13	3.99	1.89	0.48	3.56	7.30	5.49	3.18	5.27	3.68
태안군	0.16	0.16	0.04	0.09	0.00	0.01	0.47	0.37	0.04	0.01	0.04	0.05	1.82	0.95	0.33	0.17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5) 서산시

서산시의 충남 내 지역간 통행별 비중은 당진시, 태안군의 순으로 유출·입 통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3〉 서산시 통행구조 분석

지역	총목적통행		출근		등교		업무		쇼핑		귀가		여가·친교·오락		기타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천안시	4.70	5.30	4.49	1.30	1.06	16.61	5.86	4.97	0.32	1.02	3.68	7.08	2.63	11.06	10.32	4.78
공주시	2.04	2.02	0.09	0.05	0.40	0.12	4.79	5.88	0.19	0.37	1.33	0.39	1.96	2.53	3.19	4.67
보령시	1.82	1.92	0.74	0.35	0.48	0.13	2.43	2.64	0.11	0.24	0.52	0.68	6.43	6.41	4.99	4.59
아산시	0.62	0.63	0.20	0.11	0.40	0.13	0.94	1.02	0.07	0.16	0.21	0.17	2.87	2.42	0.82	1.10
서산시	-	-	-	-	-	-	-	-	-	-	-	-	-	-	-	-
논산시	0.23	0.23	0.12	0.06	0.21	0.07	0.39	0.39	0.05	0.09	0.07	0.11	0.40	0.52	0.66	0.52
계룡시	0.58	0.66	0.01	0.01	0.22	0.08	2.75	0.90	0.04	0.08	0.01	0.02	0.17	4.98	0.04	0.04
당진시	33.65	33.71	34.23	47.50	67.59	61.56	35.98	38.08	12.18	84.57	40.42	21.63	20.34	9.41	10.15	29.94
금산군	0.69	0.41	0.03	0.01	0.36	0.12	0.14	0.15	0.07	0.16	0.02	1.18	8.00	0.24	0.22	0.20
부여군	0.95	1.27	0.12	0.06	0.23	0.06	0.46	2.29	0.09	0.26	0.62	0.28	0.91	1.89	5.04	5.04
서천군	0.34	0.42	0.15	0.06	0.07	0.02	0.64	0.82	0.00	0.01	0.02	0.02	2.14	2.28	0.19	0.16
청양군	0.84	0.92	1.53	0.05	0.08	0.03	1.42	0.35	0.05	0.17	0.55	1.40	0.49	4.23	0.45	0.48
홍성군	3.94	3.64	6.04	2.04	2.41	6.87	3.88	4.10	0.40	11.84	3.37	3.00	4.50	6.53	4.04	4.67
예산군	9.58	10.34	18.98	9.47	0.05	0.02	10.29	6.72	0.01	0.03	9.75	12.87	0.78	21.33	3.49	6.51
태안군	40.01	38.51	33.26	38.95	26.44	14.16	30.02	31.70	86.43	1.01	39.43	51.19	48.38	26.17	56.41	37.30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6) 논산시

논산시의 충남 내 지역간 통행별 비중을 살펴보면 총목적통행이 계룡시가 유출·입통행 모두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며, 그 다음으로 천안시로 나타났다. 그 밖에 통행 유형별 특징은 등교 통행이 공주시로부터의 유입통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4〉 논산시 통행구조 분석

지역	총목적통행		출근		등교		업무		쇼핑		귀가		여가·친교·오락		기타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천안시	26.78	26.73	10.48	22.64	10.25	24.12	36.71	74.33	1.51	13.18	20.05	17.20	78.85	33.06	4.16	3.17
공주시	8.96	17.26	4.48	12.57	44.00	0.76	0.96	7.20	0.00	0.00	14.63	20.10	1.83	25.67	7.74	27.09
보령시	0.99	0.96	0.11	1.66	0.04	0.31	1.47	0.99	9.80	0.46	1.83	0.37	0.42	8.27	0.75	0.74
아산시	3.91	3.85	0.31	0.40	1.37	7.00	8.38	1.89	0.34	1.97	1.58	0.44	2.50	7.72	24.40	28.45
서산시	0.28	0.27	0.07	0.12	0.04	0.17	1.16	0.57	0.07	0.78	0.13	0.08	0.34	1.27	0.79	0.74
논산시	-	-	-	-	-	-	-	-	-	-	-	-	-	-	-	-
계룡시	36.46	29.20	64.63	38.48	26.61	62.85	19.85	0.41	1.24	74.62	43.83	38.21	0.23	1.18	18.44	17.92
당진시	0.64	0.56	0.22	0.78	0.04	0.17	4.22	1.40	0.02	0.25	0.32	0.10	0.39	2.20	0.86	0.71
금산군	5.45	4.41	9.17	9.61	0.00	0.00	4.44	0.00	0.00	0.00	8.18	5.07	0.01	0.00	0.03	1.41
부여군	14.56	14.97	10.26	13.02	14.53	3.28	17.59	10.82	86.81	5.74	8.57	17.73	12.91	16.42	35.92	12.34
서천군	0.42	0.33	0.04	0.46	0.10	0.40	0.40	0.20	0.07	0.99	0.14	0.31	1.71	0.92	0.30	0.27
청양군	0.26	0.24	0.05	0.08	2.90	0.44	0.51	0.21	0.02	0.32	0.04	0.26	0.10	0.67	0.34	0.32
홍성군	0.25	0.24	0.03	0.05	0.04	0.20	0.65	0.26	0.06	0.52	0.09	0.06	0.16	0.78	1.48	1.32
예산군	0.64	0.64	0.09	0.06	0.04	0.16	1.61	0.42	0.01	0.70	0.20	0.03	0.34	0.88	4.16	4.99
태안군	0.40	0.34	0.05	0.08	0.04	0.14	2.05	1.30	0.04	0.48	0.41	0.05	0.22	0.98	0.61	0.51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7) 계룡시

계룡시의 충남 내 지역간 유출·입 통행별 비율은 논산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공주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유형별 특징은 공주시로 업무의 유출·입 통행과 여가·친교·오락의 유출통행이 높게 나타났다.

〈표 3-55〉 계룡시 통행구조 분석

지역	총목적통행		출근		등교		업무		쇼핑		귀가		여가·친교·오락		기타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천안시	2.59	1.82	0.82	0.92	3.86	2.33	35.45	8.84	2.59	14.84	1.35	0.97	8.82	8.25	2.16	1.51
공주시	10.73	15.04	8.34	15.22	0.13	0.30	20.62	27.62	0.03	0.00	12.41	6.78	0.55	75.28	0.30	24.02
보령시	0.07	0.05	0.02	0.02	0.03	0.02	0.75	0.18	0.07	1.32	0.04	0.03	0.58	0.60	0.17	0.16
아산시	0.28	0.20	0.13	0.04	0.65	0.38	3.01	0.77	0.42	2.19	0.10	0.16	1.85	1.68	0.84	0.47
서산시	2.10	1.38	0.03	0.01	0.28	0.17	17.44	15.36	0.72	3.35	0.03	0.05	73.01	1.73	0.29	0.17
논산시	74.78	73.24	90.08	71.90	94.79	96.65	5.54	36.93	95.06	66.63	73.78	91.79	4.25	4.48	93.39	58.19
계룡시	-	-	-	-	-	-	-	-	-	-	-	-	-	-	-	-
당진시	0.47	0.36	0.18	0.02	0.02	0.01	9.29	3.59	0.04	1.09	0.08	0.06	2.70	1.18	0.60	0.12
금산군	4.63	3.66	0.00	6.17	0.00	0.00	0.00	4.75	0.00	0.00	6.75	0.00	0.00	0.00	0.25	0.00
부여군	3.40	3.31	0.21	4.44	0.08	0.04	2.81	0.63	0.60	4.88	4.60	0.05	4.59	3.88	0.61	14.57
서천군	0.04	0.03	0.01	0.01	0.01	0.01	0.47	0.11	0.05	0.50	0.00	0.01	0.37	0.32	0.17	0.09
청양군	0.64	0.69	0.08	1.22	0.03	0.02	1.11	0.28	0.03	0.62	0.82	0.02	0.48	0.56	0.29	0.13
홍성군	0.08	0.06	0.03	0.02	0.02	0.01	1.07	0.25	0.15	1.33	0.02	0.03	0.71	0.56	0.30	0.19
예산군	0.15	0.12	0.07	0.04	0.04	0.02	2.01	0.58	0.02	2.28	0.02	0.04	1.55	1.08	0.57	0.33
태안군	0.04	0.03	0.02	0.00	0.07	0.04	0.45	0.11	0.22	0.98	0.01	0.01	0.55	0.39	0.07	0.05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8) 당진시

당진시의 충남 내 지역간 유출·입 총통행 비율은 서산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예로의 유출·입 통행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예산군, 천안시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유형별 특징은 천안시가 등교 유출·입 통행, 쇼핑 유출통행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3-56〉 당진시 통행구조 분석

지역	총목적통행		출근		등교		업무		쇼핑		귀가		여가·친교·오락		기타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천안시	13.38	12.33	17.33	5.58	26.02	23.25	6.60	5.72	4.70	53.25	16.60	16.29	8.23	8.09	3.79	24.14
공주시	2.76	2.73	0.09	0.17	0.09	0.16	2.88	3.02	0.09	0.10	1.50	1.74	15.52	6.41	9.89	12.41
보령시	2.13	2.18	0.49	0.35	0.04	0.08	3.97	4.39	0.01	0.02	1.43	0.35	10.61	10.52	1.81	4.86
아산시	4.20	4.21	2.89	4.25	0.39	0.76	5.88	8.10	0.34	0.52	5.18	2.19	7.55	7.17	2.99	2.70
서산시	42.11	40.02	46.24	30.68	54.50	42.66	44.15	38.83	83.62	45.07	33.00	50.04	18.42	30.96	48.54	16.31
논산시	0.56	0.65	0.36	0.34	0.06	0.12	1.13	1.52	0.03	0.05	0.23	0.23	1.06	1.15	0.87	1.07
계룡시	0.18	0.18	0.01	0.07	0.01	0.01	0.75	0.52	0.03	0.01	0.04	0.05	0.18	0.36	0.04	0.16
당진시	-	-	-	-	-	-	-	-	-	-	-	-	-	-	-	-
금산군	0.44	0.58	0.08	0.12	0.09	0.11	0.88	0.69	0.20	0.17	0.16	0.08	0.63	5.24	1.70	0.64
부여군	1.19	1.26	0.04	0.14	0.02	0.04	1.84	0.66	10.45	0.03	1.96	1.64	2.17	5.70	0.94	0.58
서천군	0.37	0.34	0.08	0.13	0.01	0.01	0.37	0.51	0.03	0.04	0.21	0.10	2.96	2.03	0.46	0.53
청양군	0.15	0.14	0.04	0.08	0.01	0.02	0.26	0.24	0.00	0.01	0.05	0.03	0.41	0.40	0.50	0.51
홍성군	4.29	4.24	5.26	3.39	0.06	0.13	4.94	14.12	0.13	0.05	0.25	0.26	19.61	3.79	0.60	1.21
예산군	24.87	28.00	23.17	51.07	14.96	32.06	21.46	17.38	0.30	0.58	37.97	24.46	9.71	14.80	24.67	32.61
태안군	3.37	3.13	3.91	3.65	3.74	0.56	4.87	4.30	0.06	0.10	1.43	2.55	2.93	3.37	3.19	2.27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9) 금산군

금산군의 충남 내 지역간 유출·입 총통행 비율은 논산시의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천안시, 공주시로 나타났다. 그 밖에 유형별 특징은 천안시가 등교, 업무, 쇼핑, 여가·친교·오락 등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계룡시로부터의 출근 유입통행과 귀가 유출통행이 높게 나타났다.

〈표 3-57〉 금산시 통행구조 분석

지역	총목적통행		출근		등교		업무		쇼핑		귀가		여가·친교·오락		기타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천안시	22.04	16.92	2.03	4.12	95.43	61.05	20.34	26.29	22.94	39.76	7.04	15.23	78.64	37.84	14.28	18.30
공주시	13.11	14.38	33.76	0.00	0.30	5.71	0.00	0.00	0.01	0.00	0.42	28.88	0.02	0.26	0.13	0.36
보령시	0.67	0.60	0.17	0.29	0.29	1.58	1.98	1.96	10.29	6.76	0.28	0.12	0.74	0.96	4.19	2.80
아산시	1.68	1.61	0.44	0.79	0.98	7.86	5.72	4.79	21.42	17.14	0.57	0.40	2.61	3.94	3.90	3.64
서산시	3.42	5.02	0.08	0.14	1.02	5.89	1.94	1.85	5.28	3.62	10.69	0.15	1.05	38.98	6.25	3.70
논산시	29.85	33.85	29.00	72.69	0.00	0.00	0.00	19.84	0.00	0.00	69.11	30.19	0.00	0.13	33.82	0.36
계룡시	12.49	11.11	28.87	0.00	0.00	0.00	11.20	0.00	0.00	0.00	0.00	22.34	0.00	0.00	0.00	0.73
당진시	3.90	2.66	0.41	0.79	0.49	5.04	8.36	10.11	3.27	4.44	0.93	0.45	12.00	2.01	10.78	21.13
금산군	-	-	-	-	-	-	-	-	-	-	-	-	-	-	-	-
부여군	3.39	3.42	0.43	5.81	0.68	5.18	3.37	3.47	14.28	10.88	9.27	0.31	1.30	1.61	5.10	31.59
서천군	0.38	0.36	0.13	0.22	0.20	1.26	1.09	1.23	3.74	2.54	0.10	0.05	0.42	0.55	2.69	1.79
청양군	3.86	4.27	0.55	14.49	0.09	3.16	28.22	2.87	12.52	10.57	0.10	0.20	0.27	3.05	2.06	2.98
홍성군	0.79	0.81	0.08	0.20	0.05	0.40	3.74	4.67	3.13	1.93	0.20	0.10	0.67	0.75	4.00	2.54
예산군	4.10	4.72	4.03	0.37	0.07	0.63	13.14	22.05	1.06	0.99	1.14	1.51	1.86	9.47	10.31	8.65
태안군	0.32	0.27	0.02	0.07	0.40	2.23	0.90	0.88	2.06	1.37	0.14	0.07	0.41	0.44	2.48	1.42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 부여군

부여군의 충남 내 지역간 유출·입 총통행 비율은 논산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공주시, 천안시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유형별 특징으로는 등교의 유입통행이 보령시와 청양군이 높고, 쇼핑과 여가·친교·오락의 유입통행에 대해 천안시가 높으며, 업무의 유출통행과 여가·친교·오락의 유입통행은 공주시가 높게 나타났다.

〈표 3-58〉 부여군 통행구조 분석

지역	총목적통행		출근		등교		업무		쇼핑		귀가		여가·친교·오락		기타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천안시	9.30	9.82	2.07	1.24	3.49	1.81	16.86	14.98	25.48	0.60	1.14	15.93	27.94	14.96	13.56	3.61
공주시	14.28	15.74	8.87	17.42	7.37	4.46	6.61	25.51	5.82	0.14	12.71	13.82	26.85	16.82	18.60	14.07
보령시	8.97	9.18	7.94	11.58	39.33	0.76	10.60	6.46	0.42	0.01	6.49	16.07	10.60	7.85	11.14	0.90
아산시	1.30	1.34	0.56	0.44	0.95	0.38	2.07	4.88	4.53	0.10	0.29	0.36	2.15	2.47	3.26	0.66
서산시	4.00	2.93	0.34	0.29	0.40	0.24	10.57	2.05	8.69	0.15	0.59	2.85	3.70	1.51	11.93	9.65
논산시	38.07	38.14	37.82	40.82	8.39	74.28	34.87	26.18	26.30	81.15	57.28	22.31	7.93	41.91	22.04	53.34
계룡시	4.23	3.44	19.98	0.21	0.12	0.07	0.52	0.65	3.80	0.05	0.04	10.73	0.59	0.67	7.22	0.20
당진시	3.19	3.06	0.45	0.22	0.14	0.07	2.85	7.06	0.62	7.80	4.36	3.83	5.73	2.37	0.72	1.31
금산군	1.42	1.30	3.67	0.33	0.66	0.25	1.20	1.14	16.54	0.32	0.16	3.07	0.51	0.62	3.71	0.36
부여군	-	-	-	-	-	-	-	-	-	-	-	-	-	-	-	-
서천군	4.48	5.30	8.77	8.93	0.76	15.63	2.16	4.77	0.32	9.56	4.35	2.86	6.69	6.78	0.54	1.59
청양군	7.10	6.67	4.60	17.85	36.05	1.09	7.14	1.94	0.22	0.00	10.34	5.08	0.72	0.83	4.81	8.32
홍성군	2.51	1.94	4.46	0.32	0.08	0.05	2.09	1.78	1.69	0.01	1.68	2.40	5.16	1.44	0.61	4.56
예산군	0.56	0.64	0.25	0.21	0.40	0.19	1.58	1.82	0.35	0.01	0.21	0.30	0.77	1.14	0.70	0.59
태안군	0.59	0.50	0.21	0.13	1.86	0.72	0.87	0.79	5.21	0.09	0.36	0.40	0.65	0.64	1.17	0.85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1) 서천군

서천군의 충남 내 지역간 유출·입 총통행 비율은 보령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부여군, 홍성군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출근 유출·입통행 통행은 보령시, 등교 유입통행, 쇼핑 유입통행, 귀가 유출·입통행에서 부여군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3-59〉 서천군 통행구조 분석

지역	총목적통행		출근		등교		업무		쇼핑		귀가		여가·친교·오락		기타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천안시	9.17	8.66	2.46	2.67	5.09	13.78	11.78	12.78	2.02	23.00	10.33	10.70	4.38	4.65	18.75	11.83
공주시	8.86	8.64	1.00	1.29	17.37	43.57	7.11	7.14	0.46	4.69	3.70	3.32	12.94	9.84	19.32	22.69
보령시	32.25	31.01	34.18	39.51	0.66	1.75	42.75	46.76	15.48	0.71	24.38	10.15	24.72	21.41	29.00	30.28
아산시	3.69	3.95	0.73	1.05	2.79	7.34	2.67	3.24	1.42	16.11	6.71	6.00	4.23	3.58	6.60	7.47
서산시	4.44	3.83	1.45	1.76	0.29	0.81	4.64	4.62	0.04	0.56	0.51	0.55	9.86	6.40	1.58	1.88
논산시	2.86	4.03	5.19	0.89	2.10	5.31	0.78	0.96	0.81	5.73	12.10	2.91	0.97	9.97	2.01	2.27
계룡시	0.12	0.14	0.10	0.06	0.06	0.13	0.11	0.18	0.07	0.36	0.13	0.09	0.11	0.10	0.18	0.28
당진시	2.95	3.48	1.63	1.90	0.10	0.29	2.70	2.32	0.16	2.00	3.33	3.16	4.49	5.81	2.75	3.27
금산군	0.51	0.53	0.55	0.50	0.33	0.78	0.53	0.60	0.70	7.72	0.28	0.26	0.38	0.36	0.86	0.98
부여군	17.60	16.63	43.84	35.52	63.90	3.99	6.11	3.38	77.46	0.65	24.84	47.28	13.71	13.09	6.89	2.63
서천군	-	-	-	-	-	-	-	-	-	-	-	-	-	-	-	-
청양군	1.39	1.55	1.65	1.44	0.57	1.90	1.88	2.09	0.00	3.68	0.22	0.34	0.97	1.35	1.90	2.14
홍성군	11.11	12.19	5.91	11.32	2.48	10.81	15.50	11.64	1.29	29.53	6.30	11.15	13.43	14.48	6.58	9.98
예산군	2.60	2.88	0.82	1.52	4.23	9.48	1.83	2.43	0.09	5.13	6.51	3.45	2.66	3.14	3.17	3.87
태안군	2.45	2.49	0.47	0.57	0.04	0.08	1.62	1.85	0.01	0.13	0.65	0.64	7.16	5.84	0.41	0.45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2) 청양군

청양군의 충남 내 지역간 유출·입 총통행 비율은 예산군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공주시, 홍성군, 부여군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유형별로는 등교의 유출통행에서 논산시와 부여군이 높고, 쇼핑의 유출통행은 보령시가 높게 나타났으며, 여가·친교·오락의 유입통행은 서산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0〉 청양군 통행구조 분석

지역	총목적통행		출근		등교		업무		쇼핑		귀가		여가·친교·오락		기타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천안시	4.69	4.90	1.02	15.51	6.77	2.81	3.21	6.34	8.23	1.86	10.70	0.58	4.01	3.31	3.45	7.60
공주시	21.36	21.43	13.65	31.30	33.44	10.44	14.38	15.48	0.10	43.74	39.80	12.25	12.04	46.81	17.66	27.89
보령시	10.60	11.25	12.02	18.90	0.31	0.11	8.59	10.14	0.04	52.02	16.25	9.98	5.05	3.22	2.02	3.46
아산시	1.42	1.45	1.58	0.38	2.58	0.96	1.58	2.76	1.20	0.27	0.51	0.85	3.32	1.86	1.59	4.18
서산시	4.82	4.51	0.21	7.56	0.46	0.18	1.72	8.36	1.59	0.22	7.40	3.03	29.87	1.96	2.25	3.37
논산시	1.00	1.20	0.18	0.39	3.00	32.02	0.71	1.01	0.42	0.05	2.05	0.11	1.16	0.76	1.13	1.96
계룡시	1.47	1.13	4.32	0.16	0.12	0.05	0.25	0.34	0.14	0.01	0.04	2.31	0.30	0.17	0.13	0.36
당진시	0.59	0.67	0.20	0.43	0.19	0.07	1.11	1.33	0.04	0.01	0.17	0.11	1.45	1.08	1.27	2.72
금산군	2.93	2.59	7.18	0.88	1.07	0.07	1.06	12.59	4.66	0.81	0.25	0.04	3.46	0.32	0.70	0.57
부여군	10.85	12.69	17.62	7.73	5.79	39.20	2.14	9.01	0.06	0.01	9.01	17.38	2.76	1.90	17.47	17.85
서천군	0.69	0.73	0.28	0.71	0.97	0.30	1.42	1.93	0.53	0.00	0.08	0.03	2.49	1.17	0.87	1.71
청양군	-	-	-	-	-	-	-	-	-	-	-	-	-	-	-	-
홍성군	11.71	12.05	10.39	0.25	20.63	3.20	1.54	1.87	3.41	0.97	1.81	17.18	27.01	31.77	45.44	12.30
예산군	27.54	25.05	31.30	15.72	24.30	10.45	61.82	28.23	79.48	0.02	11.78	36.04	5.75	4.65	5.44	14.95
태안군	0.32	0.36	0.05	0.08	0.37	0.15	0.48	0.61	0.09	0.02	0.15	0.10	1.34	1.02	0.60	1.07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3) 홍성군

홍성군의 충남 내 지역간 유출·입 총통행 비율은 예산군의 통행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보령시, 천안시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유형별 특징은 보령시가 출근의 유출통행, 업무의 유출통행, 쇼핑의 유출·입통행, 귀가의 유입통행, 여가·친교·오락의 유출통행 등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61〉 홍성군 통행구조 분석

지역	총목적통행		출근		등교		업무		쇼핑		귀가		여가·친교·오락		기타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천안시	9.74	10.36	14.72	13.05	1.20	3.36	4.55	2.21	0.12	4.03	15.17	9.63	5.61	8.56	8.97	28.99
공주시	3.62	3.43	0.44	0.44	0.09	0.28	7.91	4.86	0.04	0.97	2.11	2.69	10.66	5.00	3.25	9.18
보령시	17.56	18.03	18.72	26.45	2.23	6.47	19.06	24.54	35.05	32.89	23.75	11.78	13.97	29.21	11.95	10.30
아산시	3.71	3.44	2.13	2.07	2.58	5.38	1.95	1.88	0.05	4.21	5.72	3.45	4.68	6.21	5.27	5.80
서산시	6.57	6.28	5.19	7.91	3.16	1.00	7.77	6.59	11.61	13.91	5.45	5.74	10.72	6.42	8.10	6.60
논산시	0.35	0.34	0.06	0.06	0.04	0.07	0.34	0.37	0.07	1.24	0.15	0.09	0.31	0.45	1.73	1.88
계룡시	0.04	0.04	0.03	0.02	0.00	0.01	0.09	0.09	0.03	0.25	0.02	0.01	0.07	0.09	0.07	0.08
당진시	6.16	5.70	4.68	14.57	0.03	0.09	24.95	7.18	0.03	2.05	0.60	0.18	3.19	18.32	1.11	0.71
금산군	0.19	0.16	0.05	0.03	0.00	0.01	0.66	0.48	0.09	1.50	0.04	0.02	0.20	0.28	0.22	0.24
부여군	1.09	1.33	0.17	1.99	0.01	0.02	0.76	0.76	0.02	0.79	1.46	0.87	1.11	4.81	3.52	0.50
서천군	1.88	1.73	1.17	0.68	0.15	0.24	3.06	4.60	0.43	3.36	0.87	0.27	6.20	5.69	1.49	1.30
청양군	3.87	3.73	0.06	5.90	0.22	1.52	0.61	0.53	0.45	5.53	8.69	0.38	10.10	6.99	2.43	18.48
홍성군	-	-	-	-	-	-	-	-	-	-	-	-	-	-	-	-
예산군	40.39	41.20	51.30	21.52	90.28	81.55	22.22	43.55	51.99	22.25	30.76	59.63	24.47	3.08	42.16	13.43
태안군	4.82	4.24	1.28	5.32	0.01	0.01	6.07	2.35	0.00	7.02	5.20	5.25	8.73	4.89	9.73	2.51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4) 예산군

예산군의 충남 내 유출·입 총통행 비율은 홍성군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당진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유형별 특징은 천안시와 아산시가 쇼핑의 유입통행에서 높고, 여가·친교·오락에 대해 유입통행은 서산시, 유출통행은 공주시가 높게 나타났다.

〈표 3-62〉 예산군 통행구조 분석

지역	총목적통행		출근		등교		업무		쇼핑		귀가		여가·친교·오락		기타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천안시	10.78	10.77	18.61	10.71	3.95	2.07	5.21	7.56	38.94	4.62	11.10	16.25	2.57	3.69	6.40	11.17
공주시	3.11	3.39	0.61	0.36	0.58	0.23	9.27	8.03	1.88	0.18	1.47	1.28	7.27	22.67	5.58	3.82
보령시	1.73	2.25	0.14	0.12	9.34	0.06	2.34	5.17	1.15	0.11	0.17	3.05	13.95	3.42	2.15	1.97
아산시	11.69	11.78	9.94	16.47	13.43	10.52	6.43	9.19	23.77	2.17	14.84	11.09	6.73	10.21	11.40	6.50
서산시	11.70	11.25	14.22	11.00	0.02	0.01	9.06	12.94	0.51	0.04	8.65	17.02	40.92	1.54	12.71	4.73
논산시	0.58	0.64	0.04	0.09	0.05	0.02	0.39	0.67	1.57	0.03	0.03	0.20	0.41	1.32	7.35	4.38
계룡시	0.06	0.06	0.04	0.02	0.01	0.00	0.14	0.13	0.87	0.00	0.01	0.02	0.16	0.27	0.14	0.13
당진시	25.56	24.39	41.61	28.35	14.56	6.83	21.83	23.14	5.73	0.46	20.40	28.29	14.54	12.61	33.70	24.23
금산군	0.70	0.60	0.06	0.76	0.01	0.00	2.23	1.25	0.74	0.05	0.24	0.14	2.91	1.06	0.84	0.52
부여군	0.23	0.22	0.07	0.05	0.05	0.03	0.55	0.43	0.15	0.02	0.07	0.11	1.03	0.99	0.51	0.47
서천군	0.28	0.30	0.09	0.04	0.25	0.14	0.45	0.40	1.25	0.02	0.10	0.29	1.57	1.56	0.65	0.52
청양군	5.05	6.47	2.32	7.86	1.31	0.60	6.51	15.77	0.16	12.44	6.73	2.53	1.73	2.07	3.32	1.84
홍성군	28.05	27.44	11.99	24.04	56.42	79.49	34.78	14.65	23.24	79.85	36.13	19.21	3.24	37.87	13.65	38.72
예산군	-	-	-	-	-	-	-	-	-	-	-	-	-	-	-	-
태안군	0.49	0.44	0.26	0.14	0.00	0.00	0.79	0.67	0.04	0.00	0.07	0.52	2.97	0.73	1.61	1.01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5) 태안군

태안군의 충남 내 유출·입 총통행 비율은 서산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천안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63〉 태안군 통행구조 분석

지역	총목적통행		출근		등교		업무		쇼핑		귀가		여가·친교·오락		기타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천안시	17.52	16.72	0.10	2.16	1.82	1.78	1.23	1.34	5.16	0.06	1.99	31.35	71.90	13.75	1.21	0.88
공주시	1.00	1.00	0.07	0.14	3.17	3.41	2.50	2.46	8.48	0.09	0.67	0.43	0.45	0.98	3.09	2.32
보령시	2.09	2.06	0.30	0.71	0.21	0.25	4.98	4.92	0.94	0.01	0.56	0.22	2.66	5.93	5.60	4.16
아산시	0.51	0.55	0.23	0.45	0.23	0.22	1.03	1.10	1.44	0.02	0.25	0.12	0.76	2.11	0.57	0.41
서산시	67.95	67.90	89.68	74.42	90.12	62.08	73.05	68.88	46.83	99.63	82.58	63.19	19.08	59.78	80.57	76.89
논산시	0.49	0.57	0.09	0.20	0.38	0.45	2.09	1.57	3.08	0.03	0.13	0.37	0.18	0.54	0.83	0.65
계룡시	0.02	0.02	0.01	0.02	0.11	0.13	0.05	0.05	1.07	0.01	0.01	0.00	0.02	0.06	0.02	0.02
당진시	4.46	4.77	4.55	18.47	1.95	28.98	9.24	9.58	2.78	0.03	5.11	0.98	1.26	2.38	2.60	3.15
금산군	0.06	0.07	0.02	0.02	0.29	0.33	0.15	0.16	2.92	0.03	0.03	0.02	0.05	0.14	0.15	0.13
부여군	0.28	0.33	0.06	0.16	1.48	2.08	0.41	0.43	5.68	0.08	0.21	0.18	0.22	0.53	0.82	0.80
서천군	0.38	0.41	0.05	0.09	0.01	0.02	0.59	0.65	0.09	0.00	0.04	0.03	1.11	2.63	0.08	0.07
청양군	0.11	0.11	0.02	0.04	0.14	0.15	0.24	0.22	0.46	0.00	0.04	0.03	0.14	0.30	0.26	0.20
홍성군	4.50	4.73	4.54	2.31	0.06	0.09	3.21	7.30	20.96	0.00	7.63	2.98	1.95	8.42	2.82	8.99
예산군	0.64	0.76	0.28	0.79	0.03	0.03	1.24	1.34	0.12	0.00	0.74	0.11	0.21	2.46	1.37	1.32
태안군	-	-	-	-	-	-	-	-	-	-	-	-	-	-	-	-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4. 시·군간 산업연계구조¹⁰⁾

생활권내 시군들의 산업간 연계구조를 파악하여 생활권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산업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1) 분석의 방법 및 이용자료

2005년 기준 16개 시·도단위 지역산업연관표¹¹⁾에 대해서 생산물혼합기법(Product Mix Method)¹²⁾을 이용하여 시·군 단위로 세분화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시·군단위에서 지역 간, 산업 간 재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분석은 충남 시·군에 대해 특정산업을 중심으로 중간재화의 흐름을 제시하도록 하며, 분석지역은 충남 16개 지역(과거 연기군 포함)을 대상으로 하였다.

2) 분석결과

(1) 충청남도 중간재화 분석결과

분석결과 16개 시·군 모두 자기 시·군의 중간재 소비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산업의 경우 충남 북부권 지역의 시·군이 서로 상호관계에서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으며, 공주, 아산, 논산, 계룡, 금산, 세종 등은 천안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령, 당진, 홍성, 예산, 태안 등은 서산시로부터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10) 충남발전연구원 2013년 전략과제 「내포광역도시권 형성을 위한 기초연구」 중 “내포지역의 산업입지와 시·군간 산업 연계구조”와 2012년 전략과제 「충청남도 지역경제 선순환 방안 연구」를 인용함

11) 지역산업연관표는 직접조사가 아닌 간접적인 방법으로 작성됨에 따라 실제 경제상황과 차이가 발생하며, 세분화된 지역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실제 지역의 경제상황과 비교, 검토될 필요가 있다.

12) 생산물혼합기법은 지역의 세부 산업구성을 이용하여 상위 산업의 기술계수를 구하는 방법으로 지역이 세분화되어도 산업간 기술구조는 다르지 않을 것임을 가정하고 있다.

정밀기계 산업, 전기전자 산업, 수송산업은 충남의 대부분 시군이 천안시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보이며, 천안시와 아산시가 중간재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산업연계 구조를 보이고 있다. 1차 금속 산업은 천안, 아산, 당진지역이 타 지역으로 중간재화의 전달 비중이 높으며, 당진의 경우 현대제철소의 영향임을 알 수 있다. 비금속광물 산업은 충남 동남부 지역의 경우 천안시가 타 지역으로의 중간재화 전달 비중이 높은 반면, 서북부 지역은 보령시와 서산시가 타 지역으로 중간재화의 조달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품은 서산시가 충남 서북부 지역에 있는 시·군들에게 조달비율이 높고, 논산시가 공주시·계룡시·금산군으로 중간재 조달 비율이 높으며, 부여군 역시 서천군과 청양군으로 조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료품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뚜렷한 특징을 보이지 않고, 분산적으로 조달비율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

(2) 충청남도 생활권별 분석결과

6개 생활권 중 천안 아산 생활권이 모든 산업에서 상호간 가장 높은 중간재화의 조달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대부분 시군의 여러 산업에서 천안시와 아산시로의 중간재화 조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주 부여 청양 생활권도 천안시와 아산시의 영향이 큰 편이며, 청양군의 경우 부여군에 중간재화 조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보령 서천 생활권의 보령시의 경우 농림수산물·음식료품이 서천으로 조달 비율이 높았으며, 서천의 경우 전산업에서 그리고 수송, 비금속광물, 농림수산물, 음식료품 등의 중간재화 조달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산 당진 태안 생활권의 경우 천안 아산 생활권 다음으로 상호간 중간재화 조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산 계룡 금산 생활권은 특히 계룡에서 논산으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금산에서 논산으로 향하는 중간재화 조달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홍성-예산 생활권은 앞서 살펴보았던 통근연계구조에

비해 중간재화 조달 비율이 낮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예산시의 비금속광물·음식료품이 홍성군으로의 조달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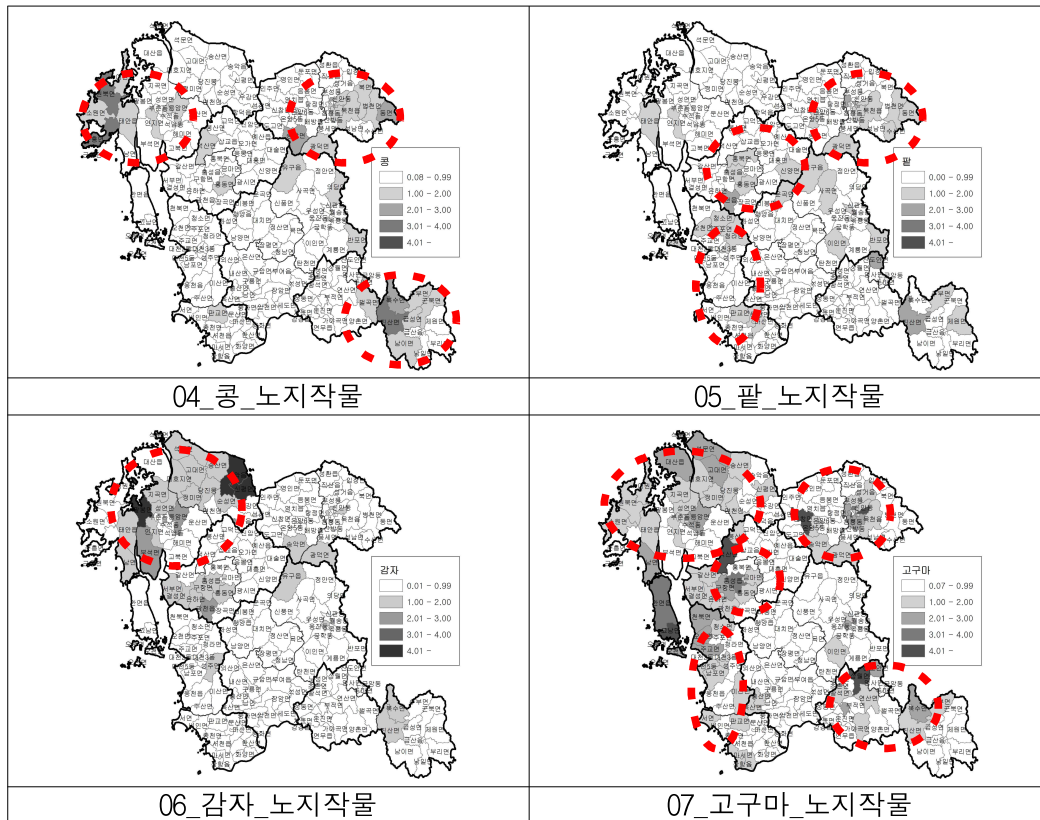
〈표 3-64〉 충남 16개 시군의 지역별 중간재화 조달 비율 상위 1~3위

지역	지역별 순위(%)							
	전산업	정밀기계	1차 금속	전기전자	수송	비금속광물	농림수산물	음식료품
천안	아산(11.6)	아산(11.1)	아산(10.0)	아산(15.9)	아산(23.3)	아산(14.7)	아산(11.0)	아산(8.0)
	세종(2.9) 당진(2.7)	세종(2.8) 당진(2.3)	당진(9.3) 공주(4.2)	세종(3.8) 당진(2.5)	서산(3.9) 당진(3.8)	세종(4.9) 공주(4.1)	공주(6.2) 논산(4.3)	공주(6.8) 논산(5.2)
아산	천안(24.5)	천안(29.0)	천안(20.0)	천안(35.2)	천안(24.7)	천안(15.0)	천안(24.4)	천안(16.8)
	당진(7.6) 서산(6.8)	당진(6.2) 서산(3.9)	당진(19.9) 서산(5.1)	당진(5.5) 세종(4.2)	서산(10.7) 당진(7.1)	서산(9.0) 당진(6.4)	서산(7.0) 당진(6.5)	당진(8.7) 예산(7.3)
공주	천안(8.2) 논산(5.1) 아산(4.2)	천안(17.0) 아산(8.7) 세종(3.9)	천안(18.5) 당진(11.8) 아산(8.9)	천안(23.8) 아산(12.3) 세종(4.9)	천안(19.4) 아산(13.8) 세종(4.3)	천안(8.6) 아산(7.5) 세종(6.4)	논산(13.2) 천안(12.5) 부여(6.7)	논산(12.6) 부여(8.4) 천안(8.0)
부여	서천(5.5) 천안(4.5) 보령(4.1)	천안(13.1) 아산(7.4) 논산(3.4)	보령(9.8) 천안(8.2) 서천(7.4)	천안(17.4) 아산(10.1) 논산(4.2)	천안(13.2) 아산(9.8) 보령(5.2)	보령(6.8) 서천(6.3) 논산(4.8)	서천(7.2) 논산(6.1) 천안(6.0)	서천(13.2) 논산(8.4) 보령(8.1)
청양	부여(7.4)	천안(15.9) 아산(11.2) 당진(3.9)	-	천안(23.4) 아산(16.8) 논산(3.8)	천안(15.1) 아산(14.6) 서산(7.2)	보령(8.7) 홍성(7.3) 서산(7.1)	부여(11.2) 보령(10.2) 논산(7.0)	부여(14.3) 보령(11.0) 홍성(7.2)
보령	서산(4.0) 당진(7.6) 부여(2.8)	천안(13.0) 아산(8.9) 서산(4.5)	당진(15.7) 천안(8.3) 아산(5.8)	천안(16.5) 아산(11.6) 당진(6.1)	천안(12.1) 아산(11.6) 서산(8.0)	서산(5.8) 홍성(5.7) 아산(3.2)	부여(9.7) 서천(9.7) 홍성(6.7)	부여(11.8) 서천(10.4) 홍성(7.6)
서천	부여(5.1) 보령(3.5) 논산(3.1)	천안(10.3) 아산(5.2) 논산(2.8)	-	천안(14.9) 아산(7.8) 논산(3.8)	천안(8.9) 아산(6.0) 보령(5.2)	보령(6.9) 부여(6.1) 홍성(4.0)	부여(7.6) 논산(4.9) 보령(4.7)	부여(12.8) 보령(7.1) 논산(6.3)
서산	태안(11.3)	아산(9.9) 천안(9.1) 당진(5.6)	당진(26.6)	아산(13.1) 당진(11.6) 천안(11.5)	아산(16.9) 당진(9.1) 천안(7.8)	아산(8.6) 태안(8.5) 홍성(6.7)	태안(5.3) 홍성(4.7) 당진(4.6)	태안(13.6) 홍성(11.4) 당진(9.7)
당진	서산(14.1)	천안(16.0) 아산(14.9) 서산(7.0)	서산(18.6)	천안(19.6) 아산(17.5) 서산(7.3)	아산(27.1) 서산(19.0) 천안(13.4)	서산(20.3)	서산(23.9)	서산(13.3)
	아산(10.3) 천안(7.7)	아산(14.9) 서산(7.0)	아산(7.4) 천안(7.0)	아산(17.5) 서산(7.3)	아산(27.1) 서산(19.0) 천안(13.4)	아산(12.5) 홍성(7.9)	아산(3.3) 예산(2.4)	예산(9.4) 홍성(9.1)
태안	서산(13.1)	서산(10.5)	당진(21.1)	아산(12.4) 천안(11.4) 서산(10.5)	서산(19.4)	서산(14.6)	서산(20.1)	서산(14.6)
	홍성(3.1) 당진(2.9)	아산(9.7) 천안(9.1)	서산(9.8)	아산(12.4) 천안(11.4) 서산(10.5)	아산(11.8) 당진(8.4)	홍성(6.8) 아산(5.2)	홍성(9.1) 보령(6.5)	홍성(10.7) 보령(7.4)
논산	천안(5.1) 공주(3.4) 부여(3.2)	천안(13.2) 아산(6.5) 세종(3.2)	천안(11.1) 당진(6.9) 부여(5.7)	천안(21.7) 아산(10.5) 세종(4.4)	천안(13.6) 아산(9.0) 세종(3.0)	공주(5.3) 천안(4.8) 서천(3.9)	공주(6.5) 부여(6.3) 서천(5.5)	부여(7.1) 서천(5.9) 공주(5.6)
계룡	천안(3.7) 논산(3.4) 아산(2.3)	천안(11.4) 아산(6.5) 세종(3.9)	-	천안(16.9) 아산(8.5) 세종(5.2)	-	논산(5.1)	논산(9.3)	논산(14.0)
	세종(4.8) 천안(3.6)	천안(7.9) 서산(4.6)				천안(3.6)	천안(7.9) 서산(4.6)	부여(5.6) 금산(5.0)
금산	천안(8.1) 논산(4.9) 아산(3.3)	천안(12.8) 아산(5.0) 세종(4.1)	천안(9.8) 논산(9.7) 당진(5.1)	천안(20.8) 아산(8.0) 세종(6.2)	천안(13.3) 아산(7.0) 논산(5.3)	논산(6.3)	논산(7.7)	논산(13.8)
	세종(4.9) 천안(4.5)	천안(5.3) 세종(2.6)				천안(4.5) 세종(2.6)	천안(5.3) 세종(2.6)	부여(4.2) 서천(3.7)
홍성	서산(7.81) 당진(4.2) 보령(3.8)	천안(8.0) 아산(7.2) 서산(4.8)	당진(20.4) 서산(9.1) 보령(7.4)	천안(11.6) 아산(10.1) 당진(8.1)	아산(12.8) 서산(11.7) 천안(8.7)	서산(14.1) 보령(6.9) 아산(6.1)	서산(15.8) 보령(7.1) 아산(5.1)	보령(11.0) 서산(8.5) 태안(6.5)
예산	서산(10.6) 당진(6.1) 아산(5.5)	천안(13.0) 아산(10.4) 당진(5.8)	-	천안(16.4) 아산(12.7) 당진(10.2)	천안(15.6) 아산(14.7) 당진(12.5)	아산(9.2) 서산(9.1) 홍성(7.2)	서산(21.2) 당진(5.8) 아산(5.8)	서산(9.9) 홍성(9.6) 보령(9.5)
세종	천안(10.8) 아산(5.8) 공주(4.8)	천안(19.0) 아산(9.1) 공주(3.0)	천안(18.9) 당진(11.1) 아산(9.2)	천안(24.9) 아산(11.5) 당진(4.0)	천안(20.9) 아산(15.9) 당진(3.8)	천안(8.4) 아산(7.8) 공주(6.4)	천안(13.7) 공주(7.3) 아산(6.7)	공주(10.1) 천안(9.7) 논산(9.5)

주 : 금액이 아닌 조달 비율을 표로 나타내었기 때문에, 중간재화의 조달 도착기준으로 각 도착 시군별 비교는 무의미 하며, 타 지역에서 개별시군으로의 도착 조달 비중에 대한 개별 셀에서만 의미가 있음

5. 농작물 분석

농업의 동질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의 작물부분 74개 품목을 대상으로 특화도¹³⁾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입지상법을 활용하였다. 다음 그림은 생활권별 특화 농작물을 표시한 것이다.



[그림 3-2] 생활권별 농작물 특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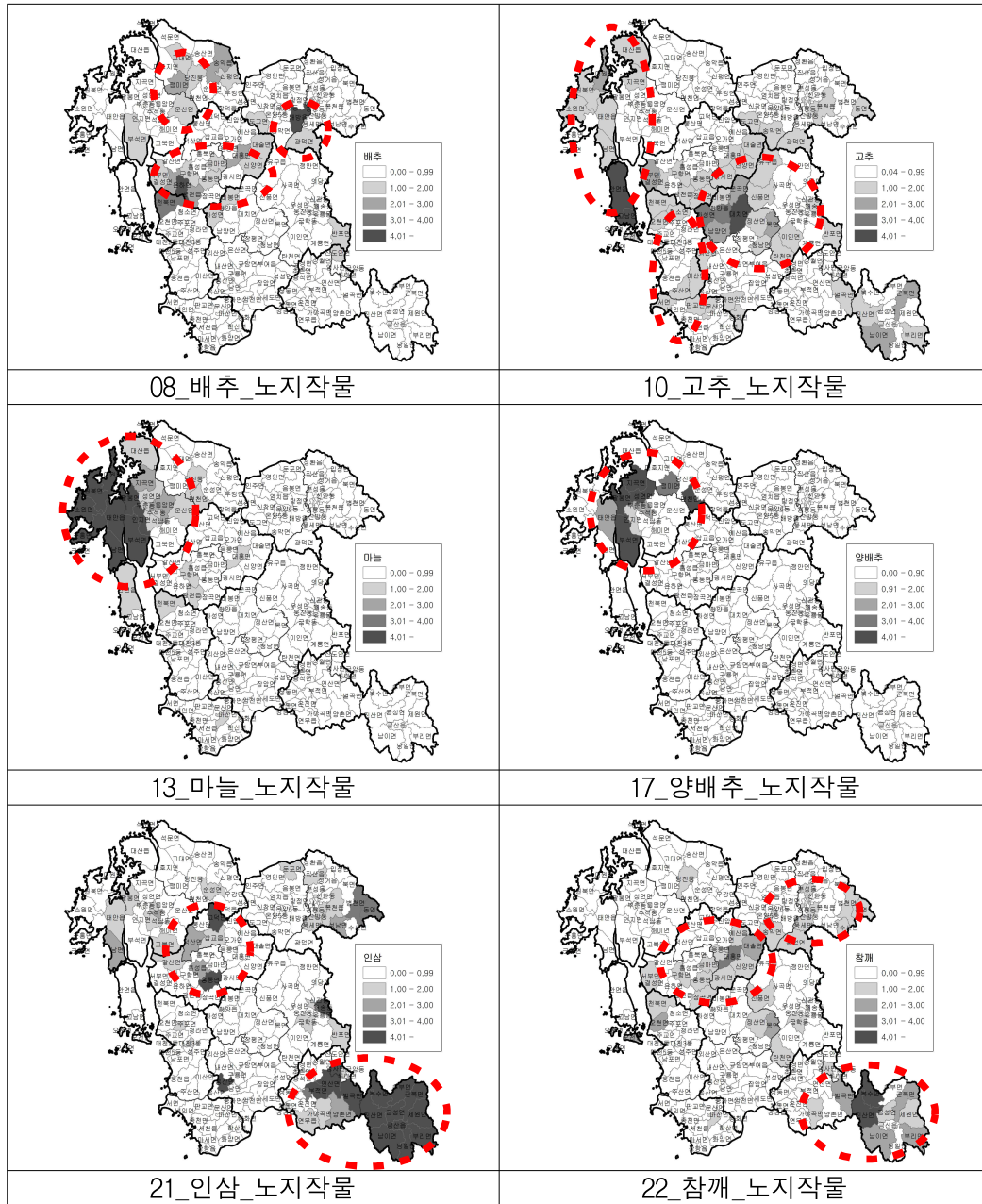
$$13) \quad LQ_i = \frac{E_i^r / E^r}{E_i^n / E^n}$$

E_i^r : 지역 r 의 농작물 i 경작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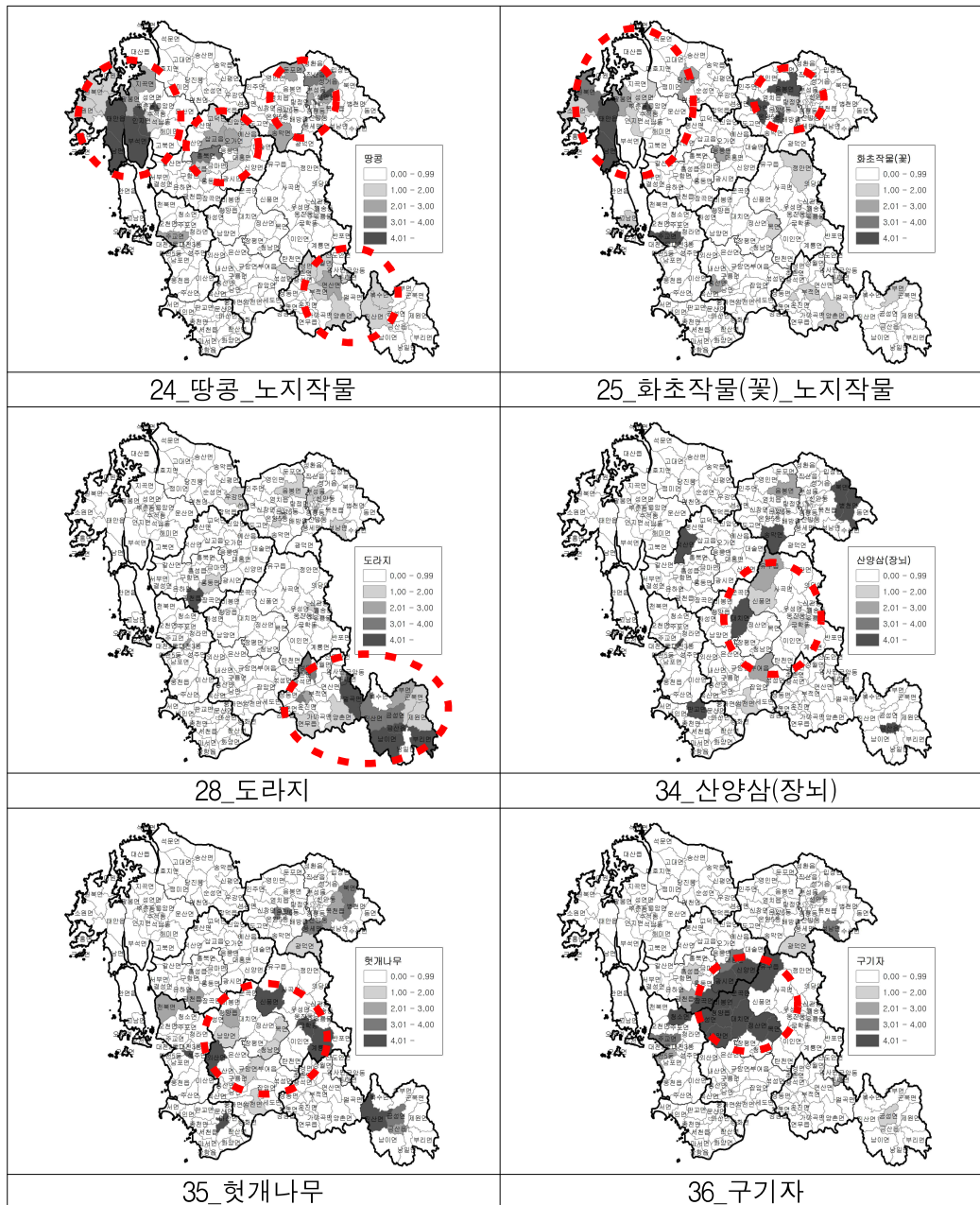
E_i^n : 전국의 농작물 i 의 경작면적

E^r : 지역 r 의 전체 경작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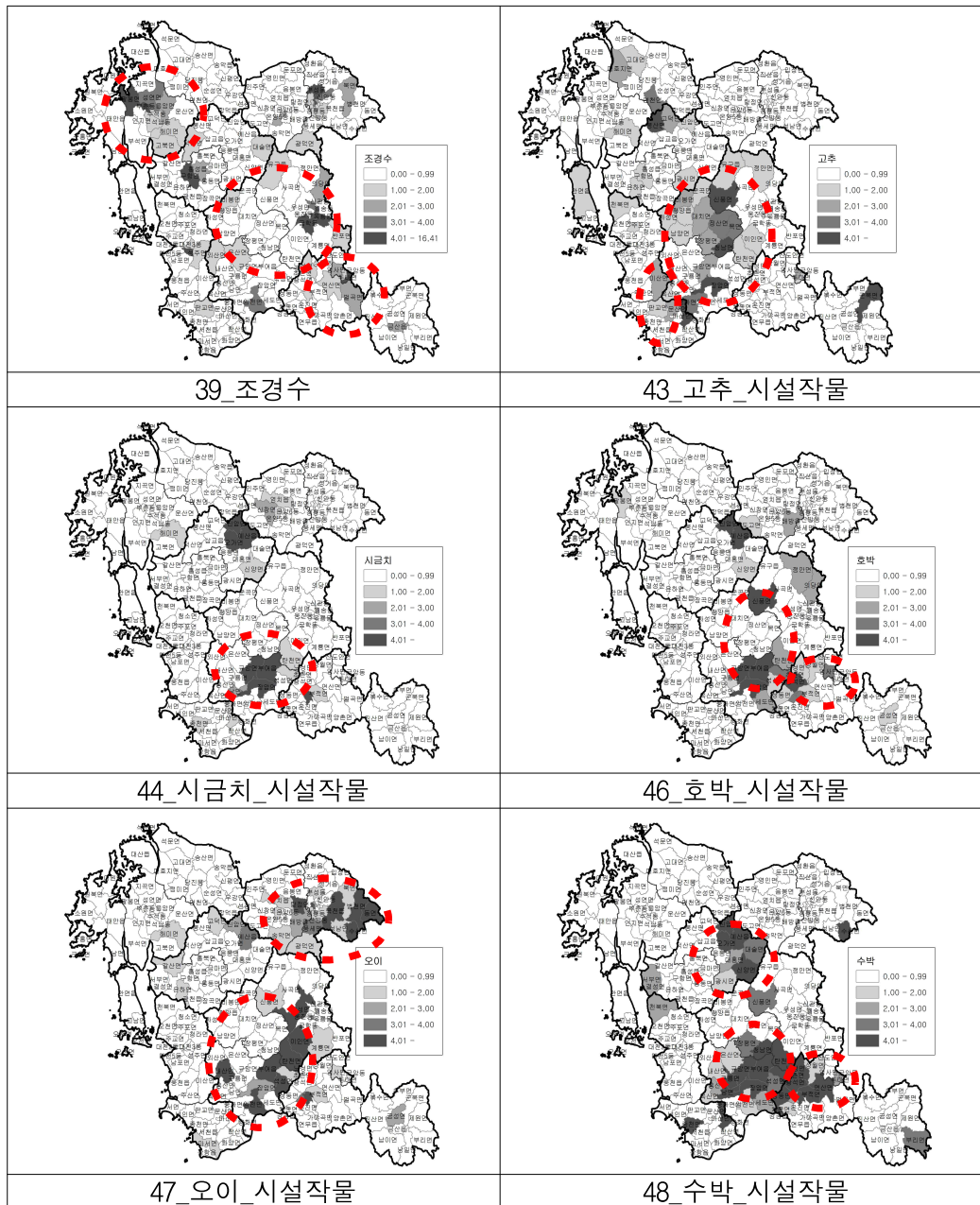
E^n : 전국의 전체 경작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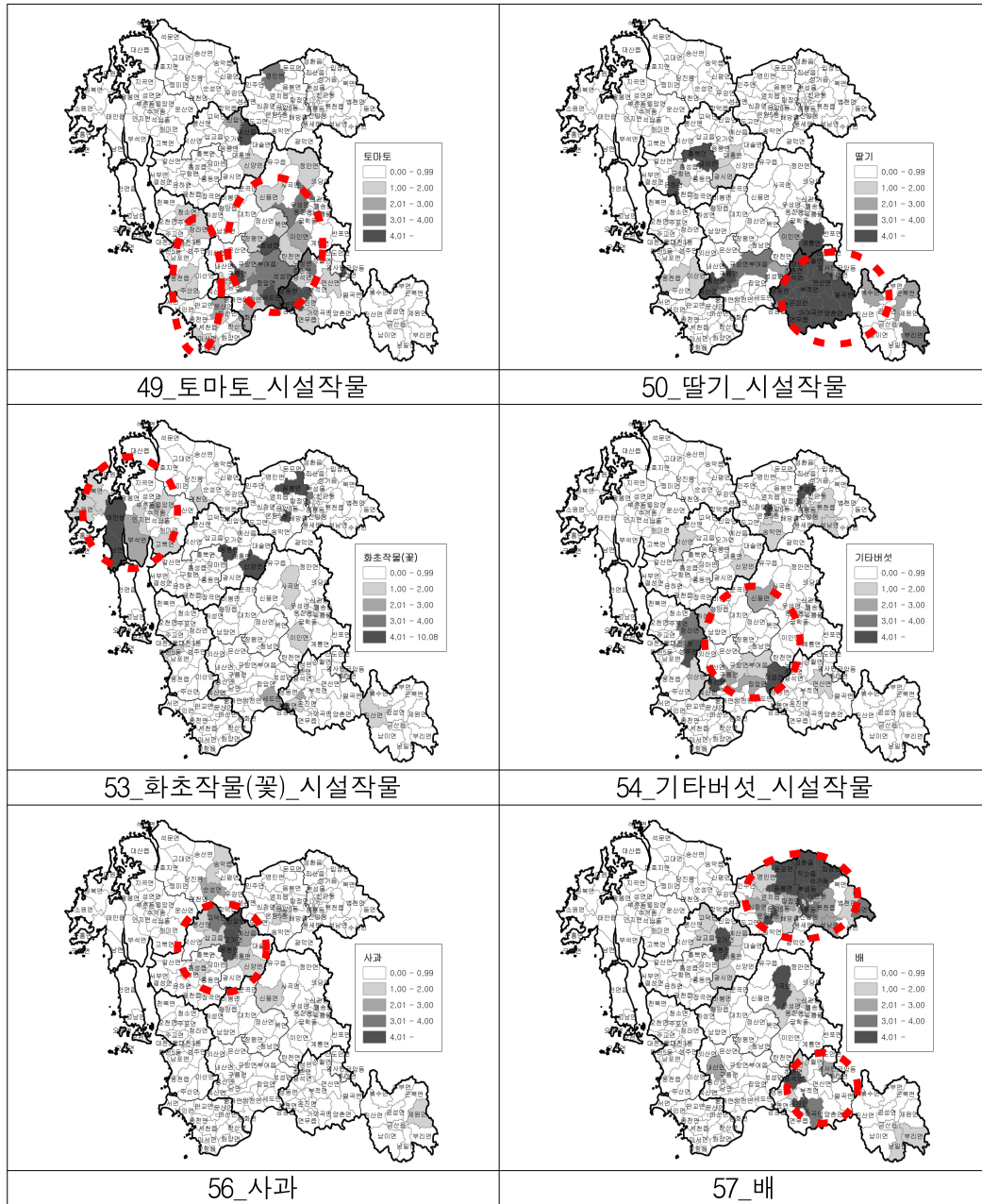
[그림 3-2] 생활권별 농작물 특화도_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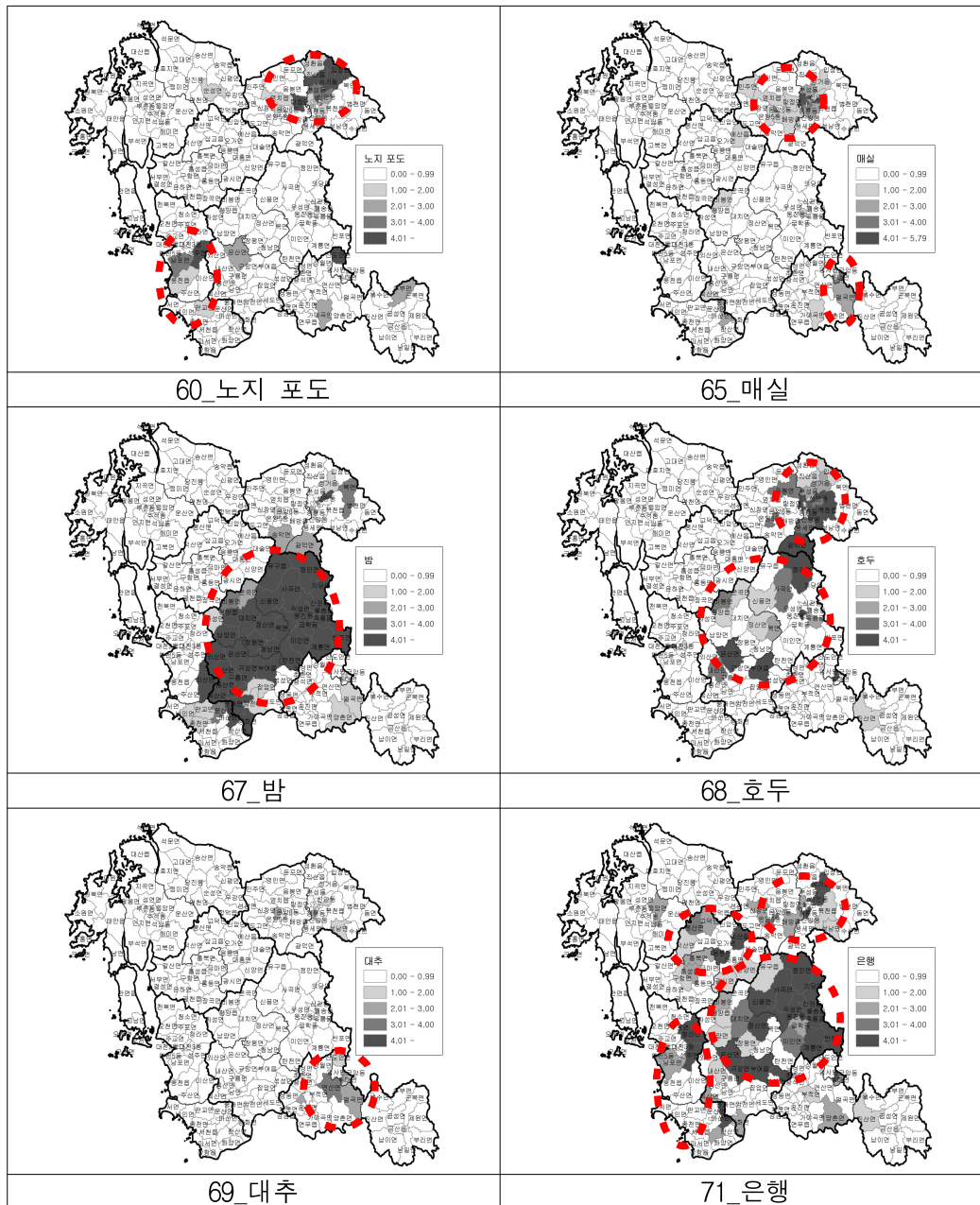
[그림 3-2] 생활권별 농작물 특화도_계속



[그림 3-2] 생활권별 농작물 특화도_계속



[그림 3-2] 생활권별 농작물 특화도_계속



[그림 3-2] 생활권별 농작물 특화도_계속

6. 생활권별 분석 종합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생활권별 사업 분야에 대한 방향을 도출하였다. 지역발전지수의 세부 지표 중 하위등급인 IV등급과 V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를 생활권 중점 분야 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업 분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동일 생활권 내에서 하위 지표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도출하기 위해서이다. 이때 생활권 중점분야 사업 중 님비해소, 주민안전 분야는 제외하였다. 그 이유로는 사업 분야를 대표하는 지역발전지수의 지표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업연계구조, 농업생산물 분석은 지역간 연관이 높고 특화되어 있는 산업과 농작물 분야를 파악하여 특화 가능한 사업을 도출하기 위하여 분석되었다. 산업연계구조 분석을 위하여 중간재 재와의 연계 구조를 통하여 산업적 연계가능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생활권내 농업생산물 분석을 통하여 생활권내 공동의 사업이 가능한 작물을 도출하였다.

생활권별 통행량 조사를 통하여 생활권내의 지역들이 지역간 통행량과 연계성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지역간 통행구조는 생활권내 통행분포를 파악하여 현재의 생활권 구조를 파악하고 향후 생활권으로서의 역할을 가능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1) 천안 아산 생활권

천안아산 생활권은 교육 및 의료 분야의 경우 교육여건 개선, 의료기반 시설, 노인복지기반 구축 분야의 사업이 도출되었으며, 일자리 창출 분야는 고용기회 향상,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생활인프라 분야는 녹색 휴양 분야, 체육 분야가 우선 사업 분야로 도출되었다.

지역간 통행 분석 결과 천안·아산은 상호 통행량이 많아 교통 인프라 시설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계구조 분석을 통한 연계 산업은 전기전자, 수송, 정밀기계로 나타났다. 농업 생산물의 경우 콩, 팥, 땅콩, 화초, 매실, 호두, 은행 등이 공동 경작 작물로 나타나 공동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2) 홍성 예산 생활권

홍성 예산 생활권은 교육 및 의료 분야의 경우 공교육기반, 의료서비스질 및 시설기반, 노인복지기반, 아동복지기반이 도출되었으며, 일자리 창출 분야는 인구변화 및 활력, 사업체 기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생활인프라 분야는 식수보급, 녹색휴양기반, 문화시설, 체육시설분야가 우선 사업분야로 도출되었다.

지역간 통행 분석 결과 홍성은 예산, 보령, 천안 순으로 나타났으며, 예산은 홍성, 당진, 아산, 천안의 통행량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간 연계의 경우 비금속광물, 음식료품의 연계가 높게 나타나 공동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활권내 주요 농업생산품은 팥, 고구마, 배추, 인삼, 참깨, 땅콩, 오이, 수박, 은행 등으로 나타났다.

3) 공주 부여 청양 생활권

공주 부여 청양 생활권은 교육 및 의료 분야의 경우 공교육기반, 사교육기반, 의료서비스 질 및 시설기반, 노인복지기반이 도출되었으며, 일자리 창출 분야는 인구변화 및 활력, 사업체 기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생

활인프라 분야는 하수처리, 녹색휴양기반, 문화시설, 체육시설분야가 우선 사업 분야로 도출되었다.

지역간 통행 분석 결과 공주는 논산, 천안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여는 논산, 공주, 천안의 순으로, 청양은 예산, 공주, 부여의 순으로 나타나 생활권내에서의 통행연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간 연계의 경우 농림수산물, 음식료품의 공동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생활권내 주요 농업생산품은 고추, 산양삼(장뇌), 헛개나무, 구기자, 조경수, 고추, 밤, 호두 등으로 나타났다.

4) 서산 태안 당진 생활권

서산 태안 당진 생활권은 교육 및 의료 분야의 경우 공교육기반, 사교육기반, 의료서비스질 및 시설기반, 아동복지기반, 노인복지기반이 도출되었으며, 일자리 창출 분야는 인구변화 및 활력, 사업체 기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생활인프라 분야는 주택신규화, 식수보급, 하수처리, 녹색휴양기반, 문화시설, 체육시설분야가 우선 사업분야로 도출되었다. 생활인프라 시설분야의 경우 대부분의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간 통행 분석 결과 서산은 태안, 당진, 예산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안은 서산, 천안의 통행량이 많으며, 당진은 서산, 예산, 천안의 순으로 나타나, 생활권 내 통행구조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간 연계의 경우 1차금속, 전기전자, 수송, 정밀기계, 농림수산물, 음식료품의 연계가 높게 나타나 공동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활권내 주요 농업생산품은 콩, 감자, 고구마, 고추, 마늘, 땅콩, 화초 등으로 나타났다.

5) 논산 계룡 금산 생활권

논산 계룡 금산 생활권은 교육 및 의료 분야의 경우 인구구조, 공교육기반, 사교육기반, 의료서비스질 및 시설기반, 노인복지기반이 도출되었으며, 일자리 창출 분야는 인구변화 및 활력, 사업체 기반, 고용기회 향상을 위한 사업, 생활인프라 분야는 주택신규화, 녹색휴양기반, 문화시설, 체육시설분야가 우선 사업분야로 도출되었다. 교육 및 의료 분야의 시설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간 통행 분석 결과 논산은 계룡, 천안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계룡은 논산, 공주의 통행량이 많으며, 금산은 계룡, 천안, 공주, 계룡 순으로 분석되었다. 산업간 연계의 경우 비금속광물, 농림수산물, 음식료품의 연계가 높게 나타나 공동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활권내 주요 농업생산품은 콩, 고구마, 인삼, 땅콩, 도라지, 조경수, 수박, 딸기, 배등으로 나타났다.

6) 보령 서천 생활권

보령 서천 생활권은 교육 및 의료 분야의 경우 공교육기반, 의료시설기반, 노인복지기반이 도출되었으며, 일자리 창출 분야는 인구변화 및 활력, 사업체 기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생활인프라 분야는 하수처리, 녹색휴양기반, 문화시설, 체육시설분야가 우선 사업분야로 도출되었다.

지역간 통행 분석 결과 보령은 논산, 천안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서천은 보령, 부여, 홍성의 순으로 나타나 생활권내에서의 상호 통행연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간 연계의 경우 수송, 비금속광물, 농림수산물, 음식료품의 공동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생활권내 주요 농업생산품은 팥, 고구마, 고추, 고추_시설, 포도 등으로 나타났다.

〈표 3-65〉 생활권별 사업 분야 도출 결과

구분	지역발전위원회 사업분야			지역간통행구조	산업연계구조	농업생산물
	교육및의료	일자리창출	생활인프라			
천안 아산 생활권	공교육기반 의료기반시설 노인복지기반	고용기회 소득수준	녹색휴양기반 체육시설	천안:아산>논산 순 아산:천안>예산 순	전기전자/수송/정밀 기계	콩/팥/고구마/참깨/ 땅콩/화초/ 헛개나무/오이/포도/배/화초/시 설/매실/호두/은행
홍성 예산 생활권	공교육기반 의료서비스 의료시설기반 아동복지기반 노인복지기반	인구변화 인구활력 사업체기반 소득수준	식수보급 녹색휴양기반 문화시설 체육시설	홍성:예산>보령>천안 순 예산:홍성>당진>아산>천안 순	비금속광물/음식료품	팥/고구마/배추/인삼/참깨/땅콩/ 오이/수박/은행
공주 부여 청양 생활권	인구구조 공교육기반 사교육기반 의료서비스 의료시설기반 노인복지기반	인구변화 인구활력 사업체기반 소득수준	하수처리 녹색휴양기반 문화시설 체육시설	공주:논산>천안 순 부여:논산>공주>천안 순 청양:예산>공주>홍성>부여 순	농림수산물/음식료품	고추/산양삼/헛개나무/구기자/ 조경수/고추_시설/시금치/호박/ 오이/수박/토마토/버섯/밤/호두/ 은행
서산 태안 당진 생활권	공교육기반 사교육기반 의료서비스 의료시설기반 아동복지기반 노인복지기반	인구변화 인구활력 사업체기반 소득수준	주택신규화 식수보급 하수처리시설 녹색휴양기반 녹지기반 문화시설 체육시설	서산:태안>당진>예산 순 태안:서산>천안 순 당진:서산>예산>천안 순	1차금속/전기전자/수 송/정밀기계/농림수 산물/음식료품	콩/감자/고구마/고추/마늘/양배 추/땅콩/화초/조경수/화초_시설
논산 계룡 금산 생활권	인구구조 공교육기반 사교육기반 의료서비스 의료시설기반 노인복지기반	인구변화 인구활력 사업체기반 고용기회	주택신규 녹색휴양기반 문화시설 체육시설	논산:계룡>천안 순 계룡:논산>공주 순 금산:논산>천안>공주 순	비금속광물/농림수산 품/음식료품	콩/고구마/인삼/참깨/땅콩/도라 지/조경수/호박/수박/딸기/배
보령 서천 생활권	인구구조 공교육기반 의료시설기반 노인복지기반	인구변화 인구활력 사업체기반 소득수준	하수처리 녹색휴양기반 문화시설 체육시설	보령:홍성>천안>부여 순 서천:보령>부여>홍성 순	수송/비금속광물/농 림수산물/음식료품	팥/고구마/고추/고추_시설/포도/ 토마토/은행

제4장 생활권별 사업추진 실태 분석

본 장에서는 앞서 분석되어 도출된 생활권별 사업방향 및 분야와 실제 지역발전위원회 생활권 선도사업 공모에 신청된 사업을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한다.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생활권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시군 공무원과 사업의 발굴 및 추진과 관련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도록 한다.

1. 생활권별 특성과 사업추진 비교 분석

1) 천안 아산 생활권

분석결과 교육 및 의료 부분의 교육, 의료, 노인복지사업, 일자리 창출의 고용기회, 소득향상사업, 생활인프라 분야의 녹색휴양기반, 체육시설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활권 선도사업에 신청한 사업의 경우 교육 및 의료분야의 사업은 제시되지 않았다. 신청된 사업을 살펴보면 2015년 신청사업은 일자리 창출분야와 생활인프라 분야 사업이 신청되었으며, 2014년 신청사업은 생활인프라 5건, 님비해소 1건이 신청되었다.

천안 아산 생활권의 경우 생활권내 통행이 많은 특징에 따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사업, 천안 불당~아산 탕정간 연계 교통망 연결 사업의 교통체계 구축 사업이 제시되었다. 녹색휴양기반 지표의 향상을 위한 공원의 공동정비 사업도 제시되었다. 대도시, 대기업 성격이 강한 천안 아산 생활권의 특징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사회경제활성화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산업구조의 다양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분석된 일자리 지표 중 고용기회 및 소득수준 향상에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 판단된다.

천안 아산권은 중추도시 생활권으로 도시성격의 생활권이며,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는 특징이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생활권내 도시근교지역의 농가와 도시주민을 연계하는 로컬푸드 사업, 농산물 가공산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반면 도시성격의 생활권이지만 교육 및 의료 부분의 지표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이에 대한 사업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대기업 중심의 생활권 특징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산업과 직종의 고용기회 향상을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

<표 4-1> 천안아산 생활권 수요 분석 결과와 공모 신청사업 비교

구분	지역발전위원회 사업분야					산업	
	교육및의료	일자리창출	생활인프라	남비해소	주민안전	산업연계	농업생산물
분석결과	공교육기반 의료기반시설 노인복지기반	고용기회 소득수준	녹색휴양기반 체육시설			전기전자/수송/ 정밀기계	콩/팥/고구마/참 깨/땅콩/화초/헛 개나무/오이/포 도/배/화초/시설 /매실/호두/은행
2015년 신청사업		·천안아산 「사회 경제활성화 네트 워크」 구축사업	·천안아산 지역공동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2014년 신청사업			·천안·아산 복합문화 정보센 터 조성사업 ·천안·아산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사업 ·천안·아산 중추생활권 활력 거점 공간 조성사업 ·천안불당-아산탕정간 연계 교통망 연결사업 ·천안 부영공원 ·아산 용곡 공원 공동 정비사업	천안 추모공원 공동 이용 사업			

2) 홍성 예산 생활권

분석결과는 교육 및 의료 부분의 공교육, 의료, 아동 및 노인복지기반사업, 일자리 창출의 사업체 기반, 소득향상 사업, 생활인프라 분야의 식수보급, 녹색휴양, 문화, 체육시설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된 사업을 살펴보면 2015년 신청사업은 교육 및 의료분야 1건, 일자리 창출 1건, 생활인프라 사업 3건으로 다양하게 신청되었다. 또한 2014년 신청사업은 일자리 창출분야 1건, 생활인프라 6건, 산업연계 1건이 신청되었다.

노인복지기반과 공교육기반 구축을 위하여 평생교육 사업이 제시되었으며, 내포문화권의 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를 도모하는 사업이 제시되었다.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사업으로 내포신도시 기반정착사업, 내포 힐링 네트워크 조성사업이 제안되었다.

홍성 예산 생활권은 내포신도시의 공동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생활권 사업의 적격지라고 판단되는 지역이다. 또한 생활권내 통행구조 상 상호 통행량이 많으나, 지역의 산업과 농업생산품의 공통적 특징은 적은 편이다. 따라서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생활권내 교통체계 구축사업, 내포문화권의 문화적 특징 활용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또한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두 지역이 다양한 인프라를 공동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설과 프로그램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추도시 생활권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농촌의 특성이 큰 지역임을 감안하여 농촌의 특성을 살리고 보완하는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표 4-2〉 홍성 예산 생활권 수요 분석 결과와 공모 신청사업 비교

구분	지역발전위원회 사업분야					산업	
	교육및의료	일자리창출	생활인프라	농비해소	주민안전	산업연계	농업생산물
분석결과	공교육기반 의료서비스질 의료시설기반 아동복지기반 노인복지기반	인구변화 인구활력 사업체기반 소득수준	식수보급현대화 녹색휴양기반 문화시설 체육시설			비금속광물/음 식료품	팥/고구마/배추/ 인삼/참깨/땅콩/ 오이/수박/은행
2015년 신청사업	내포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내포 역사·문화 투어사업	·내포신도시 기반정착 지원 ·내포 힐링 네트워크 공원 조 성사업 ·내포 스포츠클럽 육성 사업				
2014년 신청사업		내포'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	·문화프로그램 공동지원 ·내포 녹색 행복투어 사업 ·내포 농경 체험프로그램 사업 ·내포 녹색 행복투어 ·용봉·수암산 해피트레일 조성 ·내포신도시 기반정착을 위한 지원			·내포 협력 거 버넌스구축	

3) 공주 부여 청양 생활권

분석결과 교육 및 의료 부분의 인구, 교육, 의료, 노인복지사업, 일자리 창출의 인구, 사업체, 소득수준, 생활인프라의 하수처리, 녹색휴양기반, 문화시설, 체육시설 관련 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된 사업을 살펴보면 2015년 신청사업은 교육 및 의료분야 1건, 일자리 창출분야 3건, 님비해소 분야 1건으로 다양하게 신청되었다. 또한 2014년 신청사업은 일자리창출 분야 1건, 생활인프라 분야 2건이 신청되었다.

지역 의료·복지 서비스 제고를 위한 정신건강(치매) 관리사업이 제시되었으며, 공주·부여·청양의 공동 농업생산물인 “밤”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3개 지자체 농산물을 활용한 특화음식개발사업(백제 맛갈, 味에 빠지다), 지역 내 인구증가 및 도시민 유치를 통한 인력 확보를 위한 귀농·귀촌 지원사업, 공주 나래원에 대한 3개 지자체 주민의 이용지원사업(공주 나래원 공동지원사업)이 제안되었다.

공주·부여·청양생활권은 백제문화권으로서의 역사적·문화적 동질성, 밤, 고추, 구기자 등 유사한 농업환경, 공주를 중심으로 한 교육(고등학교)·의료 연계성, 생활권 간 통행 연계성 등이 높은 지역으로 하나의 생활권으로서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격지라고 판단되는 지역이다. 따라서 3개 지자체의 공동자원을 활용한 문화적 연계협력사업, 농업·생산 측면에서의 연계협력사업 등의 추진이 필요한 지역이다. 또한 3개 시·군이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특화시설(예, 나래원 등)을 활용하여 3개 지자체 주민들이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공주·부여를 중심으로 과거부터 추진되어 오던 다양한 연계협력사업에 청양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생활권으로서의 특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표 4-3〉 공주 부여 청양 생활권 수요 분석 결과와 공모 신청사업 비교

구분	지역발전위원회 사업분야					산업	
	교육및의료	일자리창출	생활인프라	농림축산	주민안전	산업연계	농업생산물
분석결과	인구구조 공교육기반 사교육기반 의료서비스질 의료시설기반 노인복지기반	인구변화 인구활력 사업체기반 소득수준	하수처리 녹색휴양기반 문화시설 체육시설			농림수산물 / 음식료품	고추/산양삼/헛개나 무/구기자/조경수/ 고추/시금치/호박/ 오이/수박/토마토/ 버섯/밤/호두/은행
2015년 신청 사업	행복인생, 안전 한 정신건강(치 매) 관리사업	·백제 맛깔, 味에 빠지다 ·두동실 밤느정 이 두레 ·희망드림 귀농· 귀촌지원사업		·하늘 가는 길, 함께 걷기(공주 나래원 화장터)			
2014년 신청사업		도시에서 농촌으 로, 도시민 공 동유치 지원사업	·감성 나눔! 금강권 문화 기부 콘서트 ·1400년! 백제숨결 따라 한걸음씩				

4) 서산 태안 당진 생활권

분석결과 교육 및 의료 부분의 교육, 의료, 아동복지, 노인복지사업, 일자리 창출의 인구, 사업체, 소득수준, 생활인프라의 주택, 식수, 하수처리, 녹색휴양기반, 녹지기반, 문화시설, 체육시설 관련 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된 사업을 살펴보면 2015년 신청사업은 교육 및 의료분야 1건이며, 2014년 신청사업은 일자리창출 분야 1건, 남비해소 분야 1건이 신청되었다.

2015년에는 안전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고려한 안전 교육 및 체험활동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 거점 조성사업이 제시되었으며, 2014년에는 해안가에 입지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인공어초사업, 해양폐기물 처리사업 등이 제안되었다.

서산·당진·태안 생활권은 내포문화권, 종교 성지로서의 역사적·문화적 동질성, 서해안을 공유하고 있는 지역으로서의 생활환경의 동질성, 유사한 농수산물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더불어 서산시와 당진시의 경우 대규모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서산시와 태안군의 경우 과거 하나의 지자체를 형성하였다는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서산시를 중심으로 태안군과 당진시가 함께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의 발굴이 필요하다. 즉 서산시를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태안군과 당진시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역사·문화·산업·관광 프로그램 개발, 해양자원의 공동 개발 및 활용, 보존을 위한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특히 지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서산시를 중심으로 대중국 관광산업 등을 연계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도농생활권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농어촌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특징을 감안하여 농어촌의 특성을 살리고 보완하는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표 4-4〉 서산 태안 당진 생활권 수요 분석 결과와 공모 신청사업 비교

구분	지역발전위원회 사업분야					산업	
	교육및의료	일자리창출	생활인프라	남비해소	주민안전	산업연계	농업생산물
분석결과	공교육기반 사교육기반 의료서비스질 의료시설기반 아동복지기반 노인복지기반	인구변화 인구활력 사업체기반 소득수준	주택신규화 식수보급 하수처리시설 녹색휴양기반 복지기반 문화시설 체육시설			1 차금속/전기 전자/수송/정밀 기계/농림수산 품/음식료품	콩/감자/고구마/고추/ 마늘/양배추/땅콩/화 초/조경수/화초_시설
2015년 신청사업	서해안 평생안전 체험교육센터 설 치	인공어초사업		해양폐기물 수거 및 정화사업			
2014년 신청사업							

5) 논산 계룡 금산생활권

분석결과는 교육 및 의료 부분의 교육, 의료, 아동 및 노인복지기반사업, 일자리 창출의 사업체 기반, 소득향상 사업, 생활인프라 분야의 주택, 식수 보급, 녹색휴양, 문화, 체육시설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권내 지역간 통행은 논산과 계룡은 상호 통행비율이 높는데 반하여 금산의 경우에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된 사업을 살펴보면 2015년 신청사업은 일자리창출사업 3건이 신청되었다. 또한 2014년 신청사업은 일자리 창출 분야 1건, 생활인프라 6건이 신청되었다.

교육 및 의료기반 부분의 대부분 지표가 낮은 수준이나 생활권 사업의 사업 신청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반면 일자리 창출 사업 분야에 집중하여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을 살펴보면 농업을 기반으로 하여 6차산업 육성사업, 특화작물 클러스터 조성 사업, 친환경 미생물 사업, 지역내 생산품을 이용한 딸기잼 가공 사업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지역의 일자리 창출사업은 지역 내 기존의 산업적 연계와 지역의 농업생산품을 고려한 사업 선정으로 판단된다. 또한 문화 관광 측면의 사업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문화생활과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제시되었다. 생활권내 교통인프라 조성은 금산~논산간 도로가 제시되었으며, 이는 계룡과 논산의 상호 통행이 많은 통행 분석결과와는 다른 경로의 도로 사업이 제시되었다.

<표 4-5> 논산 계룡 금산생활권 수요 분석 결과와 공모 신청사업 비교

구분	지역발전위원회 사업분야					산업	
	교육및의료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생활인프라	농비해소	주민안전	산업연계	농업생산물
분석결과	공교육기반 사교육기반 의료서비스질 의료시설기반 아동복지기반 노인복지기반	인구변화 인구활력 사업체기반 소득수준	주택신규화 식수보급 하수처리시설 녹색휴양기반 복지기반 문화시설 체육시설			비금속광물/농 림수산물/음식 료품	콩/고구마/인삼/참깨/ 땅콩/도라지/조경수/ 호박/수박/딸기/배
2015년 신청사업		·친환경 미생물 6차산업 육성 ·창조농업을 위한 특화작물 벨트 조 성 ·문화유산콘텐츠 발굴을 통한 관광 코스 개발					
2014년 신청사업		·친환경 발효 미생 물 보급사업 ·건강 초청 딸기잼 개발사업	·기호 선비의 멋과 흔 체험 ·숲길네트워크 구 축사업 ·산과들 Music City Festival ·금산 ~ 논산간 4 차선 확포장공사				

6) 보령 서천 생활권

분석결과는 교육 및 의료 부분의 공교육, 의료, 노인복지기반사업, 일자리 창출의 사업체 기반, 소득향상 사업, 생활인프라 분야의 하수처리, 체육시설, 문화시설사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된 사업을 살펴보면 2015년 신청사업은 생활인프라 사업, 님비사업이 신청되었다. 또한 2014년 신청사업은 일자리 창출분야 1건, 생활인프라 1건이 신청되었다.

생활인프라 사업은 지역민들의 문화 접근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지역 홍보 마케팅 사업이 추진되었다. 보령 서천 생활권의 통행구조는 높은 편은 아니며, 다른 생활권 보다 산업연계구조 체계와 농업생산물의 생산도 연계성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4-6> 보령 서천 생활권 수요 분석 결과와 공모 신청사업 비교

구분	지역발전위원회 사업분야					산업	
	교육및의료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생활인프라	님비해소	주민안전	산업연계	농업생산물
분석결과	인구구조 공교육기반 의료시설기반 노인복지기반	인구변화 인구활력 사업체기반 소득수준	하수처리 녹색휴양기반 문화시설 체육시설			수송/비금속광 물/농림수산물 /음식료품	팥/고구마/고추/고추 /포도/토마토/은행
2015년 신청사업			문화예술공연 프 로그램 공동유치 및 시설 연계 사 업 추진	보령 모란공원 및 수목장림 야 외 봉안당 설치 사업			
2014년 신청사업		지역홍보·마케팅 공동 추진	문 화 예 술 공 연 공동유치 및 찾 아가는 대민서비 스 운영				

2. 생활권별 사업추진 실태 인터뷰 조사¹⁴⁾

본 절에서는 생활권별 사업추진 실태와 관련하여 시·군 생활권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업발굴, 사업추진 과정 사업분야 측면에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때 앞 장에서 분석된 내용과 선정 사업을 반영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1) 천안 아산 생활권

(1) 사업발굴

천안 아산권은 대도시 특징을 지니고 있어 이러한 지역 특성을 보완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사업, 농산물 판매를 위한 사업을 선정하였다. 사업 발굴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였다. 사업 선정을 위하여 고려한 사업 혹은 향후 사업으로는 관광분야 사업인 시티투어, 축제사업, 로컬푸드 사업, 버스환승 시스템, 화장장 사업으로 조사되었다.

생활권 선도사업 5대 중점분야(남비해소, 교육 및 의료질 개선, 주민안전, 일자리 창출, 생활인프라)중 생활권내에서 효과가 높은 분야로는 교통분야로 천안아산 KTX역과 관련한 이슈로 택시영업권 이었다. 또한 생활권의 의미를 살리는 '지역간 연계협력'의 효과성이 높은 사업분야는 교통, 문화, 복지 사업으로 조사되었다.

사업선정시 생활권 행정협의회를 제도화하여 운영하고 있어 사업발굴에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절에서는 생활권별 사업추진 실태와 관련하여 시·군 생활권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업발굴, 사업추진 과정

14) 자세한 내용은 부록 1의 인터뷰 결과를 참고할 것

사업분야 측면에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때 앞 장에서 분석된 내용과 선정 사업을 반영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사업분야

향후 추진이 필요한 연계사업은 화장장 관련 사업으로, 아산시에서는 천안시의 화장장 이용 혜택을 받는 대신 천안시민에게 아산 시내 영인산 등 관광시설의 이용요금 할인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산업간 연관관계에 따른 생활권내 산업부문 연계사업 발굴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을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고자 하였다. 지역간 통행구조와 관련된 교통분야 연계사업으로는 주민 체감도가 높은 버스 환승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며, 적용 범위를 공주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었다.

(3) 사업추진 과정

사업추진 과정상의 애로점으로 지난 2014년 선정된 복합문화정보센터 조성사업시 지역발전위원회의 공모사업에 사업선정이 되었으나, 안전행정부 투융자심사 과정에서 탈락하여 사업집행이 어려웠던 점을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생활권 계획으로 선정되면 투융자심사 등의 과정을 의제처리 해주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사업기간 내에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방안이다.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시 건의사항으로 지자체 자체사업과 중앙부처 지원 필요사업을 구분하여 선정, 시설의 공동이용에 따른 효율을 높이는 사업 선정, 사업특성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실질적이고 구속력있는 행정협의회 구축의 중요성과 지속가능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 홍성 예산 생활권

(1) 사업발굴

내포신도시가 공동개발되고 있는 홍성 예산 생활권은 공간적으로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 사업 아이템의 경우 내포문화라는 동질성을 기반으로 하여 발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주민의견 수렴 및 수요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선정된 사업은 관광을 활용한 지역 일자리창출 분야, 생활인프라 확충 사업이다. 선정이유로는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관광이라는 측면에서 군수의 공약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업선정을 위하여 고려한 사업분야로는 일자리 창출, 귀농귀촌 사업, 생활인프라 사업으로 나타났다. 지역발전위원회 5대 중점분야(농비해소, 교육 및 의료질 개선, 주민안전, 일자리 창출, 생활인프라) 중 생활권내에서 효과가 높은 분야로는 의료시설, 내포신도시내 쓰레기 처리사업으로 나타났다. 생활권의 의미를 살리는 '지역간 연계협력'의 효과성이 높은 사업분야는 교통분야로서 버스환승등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사업으로 조사되었다.

사업선정시 어려움으로 사업과 관련된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의 필요성, 사업부서의 관심도 부족, 시군내에서 관심도 부족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간 연계협력 수준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연계협력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군내 사업부서와 지속적인 교류와 협의, 예산 상향등을 통한 지자체 관심도 높이는 것을 제안하였다.

(2) 사업분야

기존 산업간 연관관계에 따른 생활권내 산업연계 사업 발굴은 소득과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생활권내 농업과 관련하여 추진 가능한 사업은 홍성의 홍동마을을 중심으로 한 6차산

업화, 로컬푸드 분야로 나타났다. 지역간 통행구조와 관련된 교통분야 사업은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광역버스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3) 사업추진 과정

사업추진시 지속적인 협의, 개별 사업부서의 관심도를 높이는 방안, 사업부서들의 인식개선과 학습의 필요성, 생활권 협의회의 지속적 추진을 강조하였다. 건의 사항으로 선도사업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만 공모했으면 한다, 연계협력사업과 단독사업의 인센티브 부여필요, 사업제안시 사업분야 제약 완화로 조사되었다. 생활권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금액의 규모를 낮춰 많은 시군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사업 관련 부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생활권 사업 정책의 이해를 위한 워크숍 등의 교육필요, 생활권 추진 사업과 개별 시군내 유사 사업에 따른 관점 전환 등으로 나타났다.

3) 서산·당진·태안생활권

(1) 사업발굴

서산·당진·태안 생활권은 생활권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 선정이 어려운 지역중 하나였다. 그 이유는 지역적으로 공통의 자원 발굴이 단기간 내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다. 안전관련 체험센터를 생활권 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선정 이유는 학생들의 안전, 소방 및 교통 교육을 위한 거점 조성을 위해서이다. 사업선정을 위하여 고려한 사업으로는 응급의료체계사업, 어린이 관련 분야, 해양 문제 관련 분야(예, 쓰레기 등), 천주교 성지 자원화 등이다.

지역발전위원회 5대 중점분야(님비해소, 교육 및 의료질 개선, 주민안전,

일자리 창출, 생활인프라) 중 생활권내에서 효과가 높은 분야로는 생활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나타났다. 생활권의 의미를 살리는 '지역간 연계협력'의 효과성이 높은 사업분야는 주민 편의를 위한 하드웨어 사업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주민들을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사업선정시 어려움으로 시군간의 이해관계 차이를 들었다. 시군의 현안문제 등 상호 여건의 차이로 인하여 공동의 사업발굴이 어려웠다.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협의 과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지자체간 연계협력 수준은 보통과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연계협력을 높이기 위하여 이해와 양보, 주관사업의 지역적 배분, 서로 간 입장 배려로 나타났다.

(2) 사업분야

넘비해소 사업은 주민협의, 지역간 협의 등의 어려움으로 단기간에 추진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권내 농업과 관련하여 추진 가능한 사업은 실현가능한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간 통행구조와 관련된 교통분야 사업은 대중교통 광역체계화 사업을 준비중으로 조사되었다.

(3) 사업추진 과정

사업추진시 지속적인 협의, 생활권 정책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실무부서의 교육, 홍보가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 건의 사항으로는 3개 지역이 생활권으로 형성된 지역은 공간적으로 서비스 권역이 넓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기는 어려운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사업의 수가 적더라도 좋은 사업을 선택하여 예산을 높이는 방안, 연계사업, 단독사업의 인센티브 제공, 사업분야의 제약 완화로 나타났다. 생활권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5

대 중점과제 라는 제한 없이 창의적인 사업 발굴이 가능하도록 정책변경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

4) 공주 · 부여 · 청양생활권

(1) 사업발굴

공주 부여 청양 생활권은 화장장 사업인 나래원 사업을 선정하였다. 이 사업은 생활권내 주민들, 특히 공주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사업이었다. 이유는 기존의 시설을 확장하여 이용하는 사업이었고, 공주시의 경우 기존 사업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큰 이득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생활권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선정되었다.

사업선정을 위하여 고려한 사업분야로는 치매관련 사업, 밤 관련 사업으로, 밤과 연계하여 다양한 제품화 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의료분야의 사업도 고려 대상 사업이었다. 지역발전위원회 5대 중점분야(넘비해소, 교육 및 의료질 개선, 주민안전, 일자리 창출, 생활인프라) 중 생활권내에서 효과가 높은 분야로는 일자리 창출 사업, 교육 및 의료 사업, 넘비해소 사업으로 조사되었다.

생활권의 의미를 살리는 '지역간 연계협력'의 효과성이 높은 사업분야는 프로그램 사업, 분야로는 교통분야로 나타났다. 사업선정시 어려움으로 타 시군간의 협의 어려움, 지자체장의 정책방향, 지역현안의 차이로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군의 내부적 상황으로는 생활권 정책의 이해부족에 따른 사업부서와의 사업조율이 부분이다. 지자체간 연계협력 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무원들의 정책의 홍보 및 교육, 지속적인 교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사업분야

기존 산업간 연관관계에 따른 생활권내 산업연계 사업은 공동의 특화작물인 밤을 활용하여 제품화 하는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활권내 농업과 관련하여 추진 가능한 사업은 제2의 지역 특산물 발굴 사업, 로컬푸드 사업으로 나타났다. 지역간 통행구조와 관련된 교통분야 사업은 공주 KTX역 중심으로 교통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관련사업으로 대중교통, 택시 영업권역 등으로 조사되었다.

(3) 사업추진 과정

이미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경우 국비가 계획대로 집행이 안되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사업선정→사업승인→국비지원 단계별 시간이 오래 걸려 사업 기간내 추진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의 사항으로 생활권 구축이 자유롭게 형성되는 (2013년 초기 생활권 계획 모델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지역적 제한에 따른 사업발굴의 제한이 있으며, 타 시도 혹은 주변의 필요한 지역과 연계하는 것이 사업발굴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사업을 선정하는 중앙부서와 사업비 집행부서의 일원화, 선도사업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만 공모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조사되었다. 또한 연계협력사업과 단독사업의 인센티브 부여필요, 사업제안시 분야 제약을 완화로 조사되었다. 생활권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공무원 대상의 정책 홍보 및 교육, 시군 관심도 증대를 위한 예산 증액, 구속력 있는 정책협의회 구축 등으로 조사되었다.

5) 논산·계룡·금산생활권

(1) 사업발굴

논산 계룡 금산 생활권은 일자리 창출 부문의 사업으로 친환경 미생물 6차산업육성을 선정하였다. 다른 분야의 경우 생활권으로의 형성이 어렵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로 논산과 금산의 경우 지역간 통행구조의 비율도 낮고 다른 분야의 연계도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업선정을 위하여 고려한 사업분야로는 생활권내 주민들 대상으로 하여 관광시설 요금 할인 사업, 공동축제 사업, 도축장 건설 이다. 지역발전위원회 5대 중점분야(농비 해소, 교육 및 의료질 개선, 주민안전, 일자리 창출, 생활인프라) 중 생활권 내에서 효과가 높은 분야로는 교통인프라(도로사업, 대중교통)로 조사되었다. 하나의 생활권이지만 논산쪽과의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고 교통 인프라 없이는 주민들의 교류 할 수 있는 생활권으로의 형성이 어렵기 때문으로 조사되었다. 금산과 논산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지만 지형적 특성(산지 등)으로 실질적 생활권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지역간 통행구조 결과와 같이 통행량도 거의 없다. 지자체간 연계협력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사업분야

기존 산업간 연관관계에 따른 생활권내 산업연계 사업은 인삼을 활용한 가공산업으로 조사되었다. 생활권내 농업과 관련하여 추진가능한 사업은 인삼, 딸기 분야로 조사되었다.

(3) 사업추진 과정

건의 사항으로 사업발굴, 계획수립을 위해서 별도의 재원(예, 포괄보조금 형태) 마련 및 지원이 필요하며, 사업기간이 3년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기간이 촉박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활권 정책의 성공적 추진과

주민 혜택을 위하여 실질적인 생활권으로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생활권 지역 설정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지역 스스로 생활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모색(공간적 자율성 보장), 등으로 조사되었다.

6) 보령·서천생활권

(1) 사업발굴

보령 서천 생활권은 주민혜택 측면에서 님비해소 사업분야인 보령 모란공원 및 수목장림 야외 봉안당 설치 사업이 제안 되었다. 실질적 생활권으로서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을 발굴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촉박하였다. 또한 생활권내 통행구조 비중이 낮고, 공통적인 지역특성을 찾기 힘든 생활권임을 고려하면 단기간 내에 공통의 사업 발굴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주민들 편의를 위한 시설을 중심으로 사업발굴이 진행하였다. 사업선정을 위하여 고려한 사업은 지역내 자원을 활용하는 사업분야 보다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발굴하였으며, 그러한 사업이 산후조리원 사업이었다.

지역발전위원회 5대 중점분야(님비해소, 교육 및 의료질 개선, 주민안전, 일자리 창출, 생활인프라) 중 생활권내에서 효과가 높은 분야로는 교통인프라(도로사업, 대중교통),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조사되었다. 보령 서천의 경우 주민들 간의 교류, 산업적인 교류가 낮은 실질적인 생활권으로서의 특성이 작은 생활권의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생활권으로서의 형성을 위한 교통측면의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중규모미만의 지역들은 일자리 창출 분야의 사업을 통하여 지역활력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자체간 연계협력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행복생활권 정

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생활권의 시군들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응답되었다.

(2) 사업분야

사업분야의 경우 님비사업은 도축장사업, 공동화장장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응답되었다. 그리고 보령 서천 생활권의 경우 관광분야를 공통적으로 강점이 있는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생활권내 관광 분야의 공통 사업 발굴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 생활권내 농업과 관련하여 추진 가능한 사업은 팥, 고구마, 토마토, 은행 등으로 조사되었으나 비교적 다른 생활권 보다 공통으로 특화된 작물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간 통행구조와 관련된 교통분야 사업으로는 대중교통 체계 구축, 버스환승 사업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사업추진 과정

사업추진 과정상의 어려움은 사업발굴 과정으로 조사되었다. 그 이유로는 지역적 이슈와 자원이 틀리고 기존의 생활권 형성이 실질적인 생활권의 특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 추진의 인센티브와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어 시군내의 관심도가 낮은 것이 사업추진의 어려움으로 조사되었다. 정책의 필요성으로 생활권내 공통의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생활권 구성시 실질적인 생활권으로의 구성이 선행되어야 사업추진이 용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천의 경우 실질적 생활권은 군산이며 군산과의 협력사업, 현안해결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연계사업 발굴시 사업분야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 사업선정시 사업선정과 예산결정의 행정체계의 일원화 등으로 조사되었다.

3. 생활권 사업 실태 분석 결과

(1) 사업발굴

생활권 사업의 발굴 이유는 공동추진의 필요성, 유사한 지역적 특성, 공동의 현안문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님비해소 사업의 경우 시설이 설치되는 지자체의 우선적인 양보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사용하게 되는 주변 시군의 인센티브 제시가 반대 급부로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거의 모든 시군에서 연계협력사업의 발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지속적인 정보공유의 부족, 생활권내 시군 간 협의·조정 어려움, 시군내 관련 사업부서와의 협의 어려움 등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생활권협의회의 지속적인 운영, 생활권 정책의 홍보·교육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천안 아산 생활권에서 협의 기구를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행정협의회 수준으로 격상하여 구성·운영하는 사례는 생활권 협의체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결정 내용에 대한 구속력 담보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각 생활권에서의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

사업의 유형은 교통·생활인프라·교육 및 의료 분야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일부 생활권(논산 계룡 금산생활권)에서는 기존 지역간 통행 연계가 거의 없어 발굴할 수 있는 사업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생활권은 권역의 조성 등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여 지자체의 수를 기준으로 보면 2개의 지자체로 구성된 생활권보다 3개 이상으로 구성된 생활권의 사업 협의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공통적인 지역 특징을 도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권역의 면적이 넓어 서비스의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민 혜택이 적게 돌아가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사업분야

향후 추진 가능한 님비해소 관련 사업으로는 화장장, 쓰레기 처리장, 도축장 등의 건립 사업이 제시되었다. 산업 분야의 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가 많지만, 생활권내 산업간의 연계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사업이 구체화된 것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업분야에서는 생활권내 농산물의 통합브랜드 구축, 로컬푸드 사업과 함께 농산물의 공동 가공을 통한 제품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통분야 사업으로는 버스환승 시스템 구축, 택시 영업권역 확장, 버스 시간연장 및 운행 회수 확대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간 통행 빈도가 낮은 지역은 장기적으로 현재 생활권의 유지를 위해 상호 접근성 제고를 통하여 공동사업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의 발굴이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권역의 재편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사업추진 과정

대부분의 생활권들은 생활권 정책이 지역발전 및 주민 체감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 이유로는 공동의 현안사업 추진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사업 발굴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동의가 이루어져 사업 추진이 원활하기 때문이다.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였다. 적은 생활권에 사업을 선정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과, 예산은 적더라도 많은 생활권을 선정하여 주민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

선정된 일부 사업의 추진 과정상 난맥상이 존재하고 있었다. 선정된 사업 중 사업추진 과정상에서 국비지원의 지원이 지연되거나 절차상의 중복 심의 등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표적 사례

로 2014년 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천안 아산 생활권의 복합문화정보센터 조성사업은, 안전행정부의 투융자심사 과정에서 탈락하여 사업집행이 지연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진행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활권 선도사업을 선정될 경우 투융자심사 등의 과정을 의제처리 해주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

생활권 정책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정책의 단순화를 통해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선도사업과 취약지역 개조 프로젝트(새뜰마을 조성사업)만 생활권 계획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생활권 과제는 각 개별부서에서 추진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다. 생활권 과제를 생활권 계획에 포함시키려면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이는 생활권 과제로 포함된 개별 사업의 담당 부서와의 협의 과정에서 중복작업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사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간 협력이 효율적이라는 의견, 사업선정과 예산집행 과정상 중앙부처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추진의 일원화 등의 의견이 있었다.

건의사항으로는 지자체 자체사업과 중앙부처 지원 필요사업을 구분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 사업발굴의 노력에 비하여 사업비가 적다. 사업발굴과 계획수립을 위해서 별도의 재원(예, 포괄보조금형태)을 마련하여 지원해야 한다. 지속적인 생활권 정책 추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성공적인 생활권 정책 추진을 위한 각 주체별 역할로는 지역발전위원회는 제도의 간소화, 생활권별 특성을 감안한 사업발굴, 사업발굴의 유연성(5대 중점과제 이외의 사업발굴, 공간적 자율성), 적정한 예산의 배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충청남도는 사업발굴 초기부터 도청 관련 실과와의 협력, 적정한 예산집행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각 생활권 및 지자체는 일방적인 사업추진이 아니라 협의와 양보를 통한 사업추진, 주민 공감을 위한 주민협의, 생활권내 정보공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7> 생활권 사업추진 실태 분석 결과

구분	사업분야	사업발굴 과정	사업추진 과정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님비해소 관련 사업: 화장장 건립, 쓰레기 처리장, 도축장 · 특화 농산물의 가공을 통한 제품화 · 통합브랜드 구축, 로컬푸드 사업 · 산업과 관련한 계획의 경우 일자리와 연계전략 · 버스환승시스템, 택시 영업권역, 버스시간 연장 및 운행 횟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정보공유, 생활권내 시군간 협의의 어려움 · 시군내 관련 사업부서와의 협의 어려움 · 3개의 시군으로 이루어진 생활권 사업발굴이 상대적인 어려움 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정된 국비의 지원이 지연 · 사업선정 절차상의 간소화 및 일원화 · 정책을 단순화 하여 효율성 제고 · 연계사업과 단독사업 계획의 의미 부재 · 생활권 구성의 자율성 보장 · 자유로운 사업발굴 분야 보장
해결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권내 주민간, 지자체간 행정의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권협의회 지속적 운영 · 생활권 정책의 홍보 및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도사업과 취약지역 개조 프로젝트 정도만 생활권 계획에 포함 · 연계협력사업, 단독사업 제외 혹은 인센티브 제공 · 사업을 중심으로 시군간 자유로운 생활권 형성

제5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1.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제언

과거 광역경제권정책은 지역간 공동사업을 추진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과소지역의 투자 효율성 제고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지역 산업정책으로 초점이 맞춰져 추진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문제와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3년부터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맞춰 충청남도는 총 6개의 생활권역이 지정되어 생활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는 충남지역의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추진을 위하여 생활권별 특성분석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생활권별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추진시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생활권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 생활권별로 중심지 계층구조 분석, 지역발전수준 분석, 지역간 통행구조 분석, 시·군간 산업연계구조 분석, 농작물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역발전지수 분석을 통하여 생활권별 낙후된 분야를 도출하여 생활권 계획시 관련 사업의 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강점분야를 도출하기 위하여 산업간 연계구조분석, 농작물 분석을 실시하여 공동의 사업추진을 위한 특징을 분석하였다. 지역간 통행구조 분석은 생활권별 현재의 통행 비율을 살펴보고 향후 생활권별 교통관련 사업추진을 위하여 실시하였다.

두 번째로, 생활권별 특성 분석을 통해 도출된 사업의 방향 및 분야에 대해 실제 지역발전위원회에 신청된 사업을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된 결과를 중심으로 생활권사업 발굴과정 및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복수

의 지자체간 문제점과 애로점을 파악하기 위해 생활권별 시·군의 실무담당자를 중심으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 분석 결과 사업발굴과정에서는 지속적인 정보공유, 생활권내 시군간 협의 어려움, 시군내 관련 사업부서와의 협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결방안으로는 생활권협의회 지속적 운영, 생활권 정책의 홍보 및 교육 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분야의 도출 과정에서는 님비해소 관련 사업의 추진 수요로 화장장 건립, 쓰레기 처리장, 도축장 사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특화 농산물의 가공을 통한 제품화, 통합브랜드 구축, 로컬푸드 사업, 산업과 관련한 계획의 경우 일자리와 연계전략, 버스환승시스템, 택시영업권역, 버스시간 연장 및 운행 횟수 확대등의 사업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발굴시 생활권내 주민간, 지자체간 행정의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 모색될 필요가 있어 구속력 있는 생활권 협의회 추진이 모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업추진 과정상의 정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정된 국비의 지원이 지연, 사업선정 절차상의 간소화 및 일원화, 정책을 단순화 하여 효율성 제고, 연계사업과 단독사업계획의 의미 부재, 생활권 구성의 자율성 보장, 자유로운 사업발굴 분야 보장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는 생활권계획의 간소화(선도사업과 취약지역 개조 프로젝트 정도만 생활권 계획에 포함), 연계협력사업, 단독사업 제외 혹은 인센티브 제공, 사업을 중심으로 시군간 자유로운 생활권 형성등으로 조사되었다.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충청남도 내 6개 생활권을 중심으로 생활권별 특성과 사업의 추진실태 분석을 실시하여 생활권별 사업 추진방향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사업추진과정상 정책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들의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생활권 계획의 추진시 도 차원의 가이드라인과 전체적인 발전방향이 부재한 상황에서 생활권별 사업의 추진은 생활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른 측면이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분석을 통하여 생활권별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정책 추진시 실태분석을 위하여 인터뷰를 통한 정책적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사업발굴을 위한 분야별 지속적인 연구와 시군간의 협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거버넌스 측면에서 생활권내 시군의 생활권 협의회의 구성과 추진방안의 연구가 필요하다.

생활권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 방안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생활권들이 정책적 효율성을 체감하여 공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의 발전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과 사업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모색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권원용 외, 1986, 「중부권 정주생활권체계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 김동주외, 2009, 「국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경제권 발전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김동주 외, 2010, 「글로벌 도시권 육성방안 연구(Ⅰ)」, 국토연구원.
- 김동주외, 2011, 국토연구원. 해외의 도시권 정책사례와 시사점. 국토연구원.
- _____, 2011, 「글로벌 도시권 육성방안 연구(Ⅱ)」, 국토연구원.
- _____, 2012, 「글로벌 도시권 육성방안 연구(Ⅲ)」, 국토연구원.
- 김선기·박승규, 2014, 「지역생활권의 삶의 질 분석 및 지역격차 해소방안 연구(중간보고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용웅·차미숙·강현수, 2008, 「신지역발전론」, 한울.
- 김정연·오명택 외 5인, 2013. 12, 「내포광역도시권 형성을 위한 기초연구-지역간 연계·협력권 구성과 분야별 추진과제」, 충남발전연구원.
- 김태환, 2010,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국의 다지역간 협약제도 추진동향과 시사점”, 「국토정책 Brief」, 288호, 국토연구원.
- 문태헌 외, 2012, 「중소도시권 육성방안 연구」, 지역발전위원회.
- 박병주 외, 「지방정주생활권의 설정과 개발에 관한 연구」, 내무부.
- 변필성 외, 2007, 미국의 도시권 정의 : Core Based Statistical Areas, 국토연구원.
- 송미령 외, 2008, 「시·군 기초생활권 정책 발전방안 구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구원.

- 심재현 외, 2014, 「2014 지역발전지수를 통해서 본 농어촌 삶의 질 실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유영휘 외, 「지역생활권조성 추진방안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1984.
- 윤정중 외, 2007, 중소도시 지역개발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국토해양부.
- 이기석·이옥희, “정주체계의 정립과 계획권역의 설정”, 「21세기 국토개발의 정책과 과제」, 국토개발연구원, 1996.
- 이원섭, 2014, “영국의 도시권 정책”, 「지역과 발전」, 12호, pp.70-73.
- 이재준 외, 2010, 「기초생활권 중심지 계층별 적정 서비스 공급방안」, 지역발전위원회.
- 이종상, 2013. 5. 27, “통근통행을 통해서 본 충남서북부지역의 공간구조와 내포광역도시권”, 「충남 서북부지역의 공간구조와 광역도시권 구상」 전략과제 제11차 전문가 워크숍
- 임선빈, 2013. 4. 29, “충남 서북부지역의 역사·문화적 고찰-동질성과 연계성을 중심으로”, 「충남 서북부지역의 역사·문화, 관광 특성과 연계·협력 과제」 전략과제 제8차 전문가 워크숍
- 이한순 외,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위한 생활권개발구상에 관한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1980.
- 전경구 외, 2012, 「대도시권 육성」, 지역발전위원회.
- 정희윤·김선웅·김찬동, 2011, 「지역생활권 중심의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과 지역상생 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지역발전위원회, 2013. 1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가이드라인」.

- 지역발전위원회, 2009, 「지역발전과 광역경제권 전략」.
- 지역발전위원회, 2011, 「지방 중추도시권의 활성화 방안」.
- 지역발전위원회, 2014, 「2015년 지역행복생활권사업 가이드 라인」.
- 지역발전위원회 홈페이지(www.region.go.kr)
- 차미숙 외, 2014, 「지역행복생활권 실현을 위한 지역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최양부 외, 1985, 「농촌지역 정주생활권 설정 및 유형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양부·윤원근, 1993, 「도·농통합적 시·군 행정구역 설정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표환·김선기·김필두, 2002, 「지역간 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한표환·김선기, 2003,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사업 유형별 성공·실패요인 분석과 추진방안”, 「한국행정학보」, 37(3), pp.345-362.
- 황영우·이동현, 2012, 「부산시 생활권별 유형화에 따른 발전방안」, 부산발전연구원.
- Batten, I, 1994, “Network Cities: Creative Urban Agglomeration for the 21st Century”, Urban Studies, 32(2), pp.313-327.
- Camagni, R. and Capello, R., 2004, “The city Network Paradigm: Theory and Empirical Evidence”, Contribution to Economic Analysis, 226, pp.495-532.
- Capello, R., 2000, “The City Network Paradigm: measuring Urban Network Externalities”, Urban Studies, 37(11), pp.1925-1945.

[부록 1] 생활권 사업 담당자 인터뷰 결과

■ 사업 발굴 단계

1. 2015년 생활권 선도사업으로 발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자체장 공약, 현안사업 등/ 시군 의견 중심, 전문가 의견 중심 등)		
천안· 아산 생활권	천안	· 당초 아산시에서 강력하게 건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됨 - 아산시에 도서관 등이 부족했는데, 아산시 자체사업이 무산된 상황에서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음 - 반면, 천안은 이러한 시설들이 기존에 보유되어 있었으며, 이용성도 미흡할 것으로 판단하여, 처음에서는 관심이 없었음 - 그럼에서 아산시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추진된 사업임
	아산	지역발전위원회에 신청한 2015년 생활권 사업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 지역 공동 브랜드 개발 사업이다.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선정하였다.
홍성· 예산 생활권	홍성	생활권 사업 발굴을 위한 사전작업이 늦어져 시간상 촉박했다. 이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 및 수요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생활권 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의 근거는 예산군과 공동추진을 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고민하였다. 그 이유는 생활권계획의 의미가 사업의 추진의지가 중요했기 때문이다. 선정된 사업은 내포문화권이라는 공통의 자원과 공간적으로는 내포신도시를 활용하고자 했다. 본 사업은 관광을 활용한 지역 일자리창출 분야, 생활인프라 확충 사업이다.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관광이라는 측면에서 군수의 공약사업과 관련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산	내포신도시를 대상지로 한 내포 힐링 네트워크 사업은 공간적으로 생활권 사업이 추진되기 좋은 여건이라 판단하여 신청하였으나 탈락하여 아쉽다. 탈락 된 이 사업은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주민 체감 사업이었다.
서산· 당진· 태안 생활권	서산	상호 연결되는 사업이 없었다. 그나마 안전센터가 가능했다. 지역 특성상 당초 협의했던 사항에서 3개 시군이 가능했던 것이 “안전” 이었다.
	태안	안전센터는 당진시가 주도한 사업이며, 타 시군 의견이나 동의가 있는 사업이 아님
	당진	서해안 평생안전센터 체험교육센터이다. 어린이 안전 체험시설 관련 수요를 고려하여 추진하였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선정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변경되는 바람에 사업추진 어려움 있다. 건설후 운영비 부담도 있다.
공주· 부여· 청양	공주	나래원(화장장사업) 사업이다. 생활권내 주민들 반대 심했다. 기존의 시설을 확장하여 이용하는 사업이었다. 생활권내 타 지자체가 요구하여 추진하였다.

생활권	부여	선도사업 사업은 NIMBY 사업인 나래원 화장터 사업, 향토 음식개발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이 사업의 선정이유는 우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었고, 주민 편의 측면에서 고려하였다.
	청양	백제 맛갈 사업(지역 음식 특화사업)이다. 공통자원을 중심으로 연계가 가능했다.
논산 계룡 금산 생활권	논산	친환경 미생물 관련사업이다. 전략적 사업발굴은 아니었고 계속사업의 확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계룡	
	금산	친환경 미생물 6차산업육성이다. 이 사업은 생활권내 시군에서 각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령· 서천 생활권	보령	
	서천	보령 모란공원 수목장설치사업이다. 주민혜택 측면에서 선정하였다.

1.1. (1번 사업과 연계)사업 선정시 고려한 사항은 무엇입니까?(지역상황, 여건)		
천안 아산 생활권	천안	-
	아산	대기업 중심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보완할 수 있는 대안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과 농산물 관련 사업을 선정하였다.
홍성· 예산 생활권	홍성	연계협력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자 했다.
	예산	생활권계획의 의미를 구현 할 수 있는 공간이 내포신도시라 판단하였다.
서산· 당진· 태안 생활권	서산	안전과 학생들의 소방 및 교통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거점이 없었다. 처음에서는 서산이 추진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당진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되었다. 서산시는 당초에 여러 거점을 조성하는 것을 제안했으나 협의되지 못했다.
	태안	-
	당진	생활권내에서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다.
공주· 부여· 청양 생활권	공주	생활권 내에서 협의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부여	주민이 원하는 사업과 시군 개별실과의 현안과 수요를 파악한 후 생활권내 시군의 합의를 통하여 선정하였다.
	청양	주민과 행정의 의견이다. 지역발전위원회 지침에 맞고, 공무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수렴하였다.
논산· 계룡· 금산	논산	공통으로 사업가능한 사업을 선정하였다.
	계룡	
	금산	각자 공통으로 하고 있던 사업을 선정하였다.

생활권		
보령·서천 생활권	보령	
	서천	주민들 직접적인 혜택을 주기위한 사업을 선정하였다.

1.2. 지역발전위원회에 신청되지는 않았지만 고려한 사업이나 분야는 무엇입니까?		
천안·아산 생활권	천안	-
	아산	관광분야 사업인 시티투어, 축제사업, 로컬푸드 사업을 고려하였다.
홍성·예산 생활권	홍성	분야로는 일자리창출 분야의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계획하였다. 사업 발굴 시 고려사항은 지역발전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맞는 사업 발굴, 예산군과 연계 방안, 내포신도시를 공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하드웨어 사업을 고려하였다. 특히 내포신도시 내 유입되는 인구를 고려하여 시설 공급이 필요하다.
	예산	귀농귀촌 사업,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사업이다.
서산·당진·태안 생활권	서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의료체계사업이다. 서산, 당진 거점화 가능한 사업이다. · 어린이 관련 분야 · 해양 문제 관련 분야(예, 쓰레기 등) · 천주교 자원화 : 당진시 요구, 그러나 솔피성지 개발만 요구 · 관광 및 문화 분야 : 마애불(3개 시군 공통 보유)
	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쓰레기 관련 사업: 현재 계획서가 완료된 상황임(가로림만 중심) · 대산항 여객선 관광개발 연계사업: 서산은 쇼핑, 당진은 산업관광, 태안은 안흥성 등을 중심으로 한 중국인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점의 복원 및 정비 · 해안도로 연계사업
	당진	의료분야, 해양폐기물 처리사업등이다. 생활권내 모든 시군을 만족시키기 어렵다. 프로그램 사업의 경우 서비스권역이 넓고 여건이 다양해서 충족시키는 사업 발굴이 어렵다.
공주·부여·청양 생활권	공주	치매관련 사업, 밤 관련 사업이다. 밤과 연계하여 다양한 제품화 하는 사업을 발굴 예정이다.
	부여	교육 부분과 생활인프라 분야 중 문화체육 사업을 후보로 고려하였다.
	청양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하고 싶지만 지침 준수 때문에 어려움있다.
논산·계룡·금산 생활권	논산	문화, 관광분야로 유교문화권 개발 사업, 금강활용사업, 국방관련사업이다.
	계룡	
	금산	· 생활권내 주민들 대상으로 하여 관광시설 요금 할인 사업

		· 공동축제 발굴
보령· 서천 생활권	보령	
	서천	-

1.3. 생활권 계획으로 추진하고 싶은 사업 분야, 혹은 사업 내용은 무엇입니까?		
천안· 아산 생활권	천안	-
	아산	· 천안시 인접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발굴 중에 있다. · 버스환승 시스템, 화장장 사업이다.
홍성· 예산 생활권	홍성	생활권내 전반적인 인프라수준(생활인프라, 교육 및 의료분야)의 향상이 필요하며, 이러한 시설 공급을 위한 하드웨어 사업 발굴도 필요하다.
	예산	전반적인 생활인프라가 부족하다. 이를 향상시켜 주민들의 혜택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산· 당진· 태안 생활권	서산	행양과 문화관광 분야가 가능할 듯 하다.
	태안	· 님비시설, 안전시설, 휴양관련 · 의료는 기본적인 인구가 없어서 불가능
	당진	-
공주· 부여· 청양 생활권	공주	치매관련 사업, 밤 관련 사업이다. 앞의 대답과 같다.
	부여	의료분야로 특히 진료가 어려운 분야(산부인과 등)가 있다. 생활권 사업으로 의료 부분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청양	-
논산· 계룡· 금산 생활권	논산	1.2와 같다.
	계룡	
	금산	도축장 사업이다. 금산 논산을 중심으로 하여 추진 가능할지 협의가 필요하다.
보령· 서천 생활권	보령	
	서천	산후조리원 사업이다.

2. 지역발전위원회 5대 중점분야(님비해소, 교육 및 의료질 개선, 주민안전, 일자리 창출, 생활인프라) 중 생활권내 해당 지자체에서 추진시 효과가 높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분야는? 그리고 지역에서 추진하고 싶은 분야는 무엇입니까?		
천안 아산 생활권	천안	추모공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현충원 등을 활용한 “문화 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싶음
	아산	· 교통분야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버스요금 단일화, 버스환승 시스템 등의 사업이다. · 천안아산 KTX역과 관련한 이슈로 택시영업권 등의 사업이다. · 공동 이용이 가능한 화장장 사업이 있다.
홍성· 예산 생활권	홍성	의료시설이 부족하다. 특히 관련 전문의가 없는 응급환자 발생 시 타 지역의 병원으로 가야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른 시설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산	내포신도시 내 쓰레기 처리 관련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서산 당진· 태안 생활권	서산	· 생활인프라 구축 필요-시설구축, 문화복지시설 등 : 서산시와 당진시에는 기업이 들어오는 지역이라 이들을 위한 시설 필요 · 서산시의 인프라 기반이 미흡하기에 시설 확충이 필요함(서산시는 근처 시군에 비해 조금 더 나은 지역일 뿐) · 의료 분야는 국가 차원의 문제임
	태안	-
	당진	교육, 복지관련 사업이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공주 부여· 청양 생활권	공주	일자리 창출 사업, 교육 및 의료 사업이다. 교육 및 의료 사업은 평생 학습도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려고 한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사업은 고도라는 지역특성 유네스코 등재와 연계하여 추진 예정이다.
	부여	님비해소, 일자리 분야(귀농귀촌 등)가 우선적으로 사업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생활권내에서 필요한 분야보다는 선정이 가능한 사업 분야로 사업 발굴이 되는 측면이 있다.
	청양	의료사업이다. 현재 1차 진료만 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지역 외로 나간다. 따라서 “의료진” 확충(숙련된 전문의 등), “검진능력강화” 및 “검진 장비 교체” 등(예, 원격진료서비스 등)이 필요하다.
논산· 계룡· 금산 생활권	논산	일자리 창출, 생활인프라 사업이다. 지역내 인구유입, 고령화 대비를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과 생활인프라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계룡	
	금산	교통인프라(도로사업, 대중교통)가 필요하다. 공동의 생활권이지만 논산 쪽과의 교통 인프라 부족하다. 그래서 교통 수요도 별로 없다.
보령· 서천 생활권	보령	
	서천	교통체계 분야 사업, 버스요금(환승) 관련 사업이다.

3. 생활권 계획의 핵심은 ‘지역간 연계협력’이다. 연계협력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형태와 사업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안 아산 생활권	천안	프로그램 중심의 사업 추진 필요
	아산	주민이 체감도가 높고, 사업추진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교통, 문화, 복지 사업이다.
홍성· 예산 생활권	홍성	사업발굴과 협의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생활권 공모 시점은 알고 있으나 각 군의 상황이 달라 정기적으로 사업 협의가 어렵다. 지속적인 정보의 공유, 절대적인 시간을 활용하여 생활권 공동의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예산	필요한 생활인프라 시설건립 등의 하드웨어 사업이다. 그러나 건설 후 운영과 예산의 문제점이 있다. 대중교통 체계 구축(버스환승 등)은 필요한 사업이나 비용이 많이 들고 사업자의 수익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다.
서산· 당진· 태안 생활권	서산	유지보수가 가능하다면 하드웨어 사업이 중요하다. 소프트웨어 사업은 하드웨어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서산시처럼 하드웨어가 부족한 지역에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태안	시설과 프로그램의 복합된 사업 필요
	당진	프로그램 사업이 중심이 될 필요가 있다. 서산과 버스BIS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용률(수요)가 어느정도 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주· 부여· 청양 생활권	공주	시설조성 사업은 상황, 여건 측면에서 어렵다. 생활권 내 공동의 생산물이 밤과 연계하여 양봉산업을 고려중이다.
	부여	대중교통 체계 구축 분야이다. 공주 KTX역과의 연계 교통망이 필요하다. 다만 부여와 관련한 승객수요가 얼마나 될지 파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택시 영업권역과 관련한 생활권 정책 내에서 해결 논의가 필요하다.
	청양	경우에 따라 H/W와 S/W가 필요하다. 단, H/W사업은 사후 관리가 문제이다. 입지 선정 문제, 수익배분 측면에 어려움 있다. 반면 S/W사업은 단기 사업으로 좋지만, 성과가 문제이다.
논산· 계룡· 금산 생활권	논산	기본인프라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사업도 필요하다. 주변 대도시인 대전과 생활인프라 등 모든 분야에서 상대적 비교 열위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구의 유출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 생활권 측면에서 인구유입, 도시성장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이 필요하다,
	계룡	
	금산	· 교통측면에서 접근성이 낮다. 이러한 생활권 특성으로 프로그램 사업, 시설 공동이용 사업은 어려운 편이다. · 인삼, 딸기 등의 농업관련에서 가능할 듯 하다.
보령· 서천 생활권	보령	
	서천	일자리 창출사업이다. 인구유입과 관련하여 추진할 만한 사업이다.

4. 전반적인 사업 선정시 과정상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생활권내 시군의 이해관계에 따른 사업협의/ 추진체계, 기간, 제도)		
천안 아산 생활권	천안	시·군 간/직원 간 관심·협조 부족 무엇보다 지자체 인력이 부족하다. 여력이 없다.
	아산	생활권 행정협의회를 제도화하여 사업 발굴에 대해 어려움은 없다. 또한 실무부서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협의회를 상시화하고 행정협의회 아래 실무협의회를 두어 사업 실무부서간의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행정실무협의회는 시장이 관할하며 연 2회 실시, 실무협의회는 국장이 중심으로 2-3개월에 한번씩 개최하고 있다.)
홍성· 예산 생활권	홍성	생활권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사업발굴이 이루어짐에 따라 아이템 발굴의 한계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관련 사업부서는 부서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보공유와 협조체제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예산	· 사업부서의 관심도가 떨어진다. 개별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의 중첩되는 문제가 있고 사업의 운영과 활용방안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군내의 우선순위에서 뒤쳐져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적다. 생활권 협력보다 군의 현안 등이 우선되어 추진되기 때문이다.
서산· 당진· 태안 생활권	서산	시군 이해관계문제로, 논의 따로 협의 따로, 계획서 따로가 문제이다. 상호 여건의 차이로 협의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태안	· 사업협의를 어렵다(서산, 태안은 포기 수준) · 정책 소개가 잘못되었다(연계협력도 국비가 나오는 줄 알고, 금번 사업에 대해 당진에 우선권을 준 것이다.)
	당진	연계사업 발굴과정이다. 성과의 불확실성도 사업선정시 어려움에 있다. 사업부서간의 협의는 차후 문제이다.
공주· 부여· 청양 생활권	공주	타 시군과의 협의 어려움이 있다.
	부여	생활권내 시군 기획실간 협의의 어려움은 시장, 군수들의 정책 방향, 공약, 지역현안이 다르기 때문에 협의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개별 시군 사업부서와의 협의도 생활권 정책의 이해도가 낮은 측면이 있어 사업 발굴의 어려움이 있으며, 개별실과의 설득, 정책 이해를 시키는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특히, 생활권 정책이 추진 된지 얼마 되지 않아 사업부서의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청양	· 공동 자원이 필요한데, 우선 청양군 내 연계협력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 정책 이해도도 낮고, 발굴 사업에 대한 연계 가능 의문, 지역 발전 효과 미흡하다.
논산 계룡	논산	시군과 정책적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공통의 목표, 정책을 활용하여 지역에 도움이 될

금산 생활권	계룡	수 있는 방안 측면에서 홍보, 교육이 필요하다.
	금산	· 금산과 논산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지만 지형적 특성(산지 등)으로 실질적 생활권이 아니다. 지역간 통행구조 결과와 같이 통행량도 거의 없다. · 지역적 공통점이 별로 없다.
보령· 서천생 활권	보령	
	서천	공통의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다.

4.1. 선정된 사업 중 과정상 가장 어렵게 선택한 사업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간 협력여건 미조성, 지자체장 관심부족, 사업성과에 관련, 공모선정 불확실성, 적은 예산)		
천안· 아산 생활권	천안	-
	아산	-
홍성· 예산 생활권	홍성	내포 힐링 네트워크 공원 조성사업(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공원 조성사업)이다. 먼저 용봉산, 수암산의 가치를 활용하는 방안의 관점의 차이가 존재했다. 홍성군의 용봉산은 개발이 이루어져 이미 활용이 활발한 상황이고, 예산군의 수암산은 아직 미개발 상태인 차이가 있었다. 두 번째로는 용봉산, 수암산의 가치 활용의 문제였다. 이용자 타겟층의 차이로서 내포신도시 주민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활용방안과 전국적인 관광지로서의 가치를 활용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이용을 위하여 내포신도시 주민들의 산책길 조성을 위해 산의 주변부를 활용하여 사업을 구상하였다.
	예산	내포 창조관광 기반 구축사업이며 지역발전위원회 사업 선정 후 사업 구체화 및 사업비 협의에 어려움 있었다.
서산· 당진· 태안 생활권	서산	-
	태안	-
공주· 부여· 청양 생활권	당진	모든 사업 선정 어려웠다.
	공주	귀농귀촌 사업이다. 청양, 부여군은 현재 단독으로 추진중이다. 공동 사업시 사업경험, 발전수준이 비슷해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부여	밤산업 클러스터조성 사업의 협의가 어려웠다. 밤 생산량은 생활권 전역에서 전국적인 경쟁력이 있는 품목이며, 개별 시군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 생활권 사업으로 합의하기가 어려웠다. 공동 특화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생활권 사업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는

		데 개별 실과와의 의견 차이가 많았다. 시군별 모두 강점이 있는 분야들은 연계하여 협력이 어렵다. 기존 국비로 진행되고 있고 독자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서이다.
	청양	-
논산	논산	-
계룡	계룡	
금산생 활권	금산	발굴한 모든 사업이 어렵다.
보령· 서천생 활권	보령	
	서천	-

5. 생활권 사업시 생활권내 지자체간 연계협력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강함/보통/미흡)		
천안 아산 생활권	천안	아산천안 생활권의 협력수준은 매우 양호함 - 물론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만나서 협의를 하니깐 바뀌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도 변화하였다.
	아산	지속적인 생활권 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가 개최되고 연계수준은 높다.
홍성· 예산 생활권	홍성	사업 발굴 시 협의는 잘 이루어졌다. 사업추진도 연계협력이 잘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예산	생활권 사업을 추진하는 기획실간 협의는 잘 이루어졌으나 군내 사업 부서와의 사업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속적인 사업협의로 사업 추진의 공감대형성이 필요하다.
서산 당진· 태안 생활권	서산	보통과 미흡 사이
	태안	보통임. 의지는 충만하였으나, 협력이 어렵다.
	당진	생활권 사업 정책 차원에서의 공감도는 높다. 그러나 사업구상 측면에서 협의의 어려움 있다.
공주 부여· 청양 생활권	공주	보통이다.
	부여	생활권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의 기획실 간 연계협력은 잘 이루어졌다. 그보다 각 시군 내에서 기획실과 사업부서간의 협조가 어려웠다. 이유는 정책이 이해도가 다르고, 연계 사업추진의 어려움 및 여건의 차이 때문이었다.
	청양	기획실간 연계는 잘 이루어졌다.
논산 계룡	논산	미흡하다.
	계룡	

금산 생활권	금산	미흡하다.
보령· 서천 생활권	보령	
	서천	미흡하다.

5.1. 지자체 간 연계협력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 혹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천안· 아산 생활권	천안	-
	아산	제도화권 협의회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지역간 발생하는 현안문제, 공동사업 발굴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홍성· 예산 생활권	홍성	생활권내 지자체들이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협의가 필요하다. 사업 관련부서와의 지속적인 자료 공유와 협의가 필요하다.
	예산	투입되는 행정력 대비 사업의 사업비가 낮은 편이다. 사업의 예산을 높여 지자체의 관심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서산· 당진· 태안 생활권	서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와 양보가 필요함 · 손해를 보더라도, 주관사업의 지역적 배분이 필요 · 서로 간 입장을 살려 줄 수 있어야 함 · 사업때문에라도 강한 어필이 필요함
	태안	-
	당진	생활권 협의회는 실질적 운영이 필요하다. 올해부터 추진중이며 지방행정법상 행정협의회로 추진되어 구속력 있는 협의회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주· 부여· 청양 생활권	공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워크숍, 정책홍보, 기획실(생활권 추진부서) 노력이 필요하다.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정보공유(예산, 현안 사업)가 필요하다. 또한 상시적인 교류가 필요하다. 또한 사업계획 추진 시 생활권내 지자체 간 사업 주도권을 협상할 수 있는 여유, 배려가 필요하다. · 현재의 느슨한 형태의 행정협의회가 아니라, 구속력 있고 정기적인 협의회 추진이 필요하다.
	청양	-
논산· 계룡· 금산 생활권	논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권내 사업추진,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필요성을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인위적인 생활권으로의 공간이 아니라 사업을 중심으로 생활권이 형성되는 것이 효과적이다.(2013년 연계협력 사업 정책)
	계룡	

	금산	· 실질적인 생활권을 설정해야 사업추진이 원활하다. 금산의 경우에는 논산, 계룡과는 실질적인 생활권이라 할 수 없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전과의 추진이 더욱 효과가 높다. 실질적인 생활권이다.
보령· 서천 생활권	보령	
	서천	협업체 구축이 우선이다, 8월부터 협업체 가동할 예정이다.

■ 사업 분야

6. 지역발전위원회 5대 중점분야 중 님비해소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금액이 최대 두배 (60억원) 수준이다. 생활권 내에서 해결해야할 이슈나 현안이 있습니까?		
천안·아산·생활권	천안	추모공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가로 하고 싶다. 물론 아산시와 협의를 해야 한다.
	아산	화장장 사업 추진이 예정이다. 추진과정상에서 각 시에서 주민들 혜택 차원에 대한 반대급부가 필요하다. 아산시의 경우 화장장 이용 혜택을 제공받는 대신 아산시 내 영인산 등 관광시설의 이용요금 할인을 제안할 예정이다.
홍성·예산·생활권	홍성	내포신도시 내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해결방법을 모색 중이나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환경문제 해결과 관련한 투자가 필요하다.
	예산	-
서산·당진·태안·생활권	서산	· 님비시설은 주민 합의가 어렵다.(예, 서산-당진 간 광역쓰레기장을 준비 중인데, 난항이다.)이유는 입지 지역과 수혜지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태안	해양쓰레기 관련 사업
	당진	쓰레기 처리, 화장장시설
공주·부여·청양·생활권	공주	쓰레기 재활용 선별 처리장 사업을 고려중이다. 이 사업은 수익성이 담보 되어야 하나, 공주시만으로는 수익성이 없다. 생활권 사업으로 추진하면 수익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한다.
	부여	올해 선정된 공주 나래원사업(화장터) 이외에는 없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발굴 예정이다.
	청양	-
논산·계룡·금산·생활권	논산	화장장 시설
	계룡	
	금산	도축장사업, 공동 화장장 건설
보령·서천·생활권	보령	
	서천	-

7. 산업간 연계가 있는 산업중(연구결과 분석결과와 관련하여), 생활권내에서 연계가 높은 산업관련 사업을 추진 계획, 혹은 검토한 사업은 무엇입니까?		
천안·아산 생활권	천안	-
	아산	산업과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은 효과가 높은 사업으로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산업기반과 이해관계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기업지원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소기업을 중 소기업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방법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 중이다.
홍성·예산 생활권	홍성	기업유치가 필요하다. 최근의 수도권규제완화의 영향인지, 경제상황의 영향인지 예전보다 어려운 상황이다.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업유치는 언제나 필요한 정책이다.
	예산	
서산·당진·태안 생활권	서산	전략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산업적 공통점 찾기는 어렵다.
	태안	첨단산업도시 혹은 기업도시(현대측/태안) + 서산(자동차) + 당진(제철 등) - 태안군 입자에서만 검토한 것으로, 연계협력 가능성은 미검토함
	당진	금속소재관련 기술개발센터를 테크노파크에서 추진중이다.
공주·부여·청양 생활권	공주	밤과 연계한 제조업인 양봉과 관련된 사업(제조업, 음식료품)
	부여	부여는 농업 관련 분야가 강점이며 산업분야는 농업과 연계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할 예정이다.
	청양	특화 농작물을 가공하여 제품화 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논산·계룡·금산 생활권	논산	국방관련사업(비무기 업종 유치, 국방관련 R&D)
	계룡	
	금산	인삼을 활용한 가공산업
보령·서천 생활권	보령	
	서천	관광분야

8. 농업생산물 연계가 높은 작물(분석결과와 관련하여) 중 생활권 내에서 추진할 계획, 혹은 검토한 계획은 무엇입니까?(농업관련 사업을 생활권 내에서 검토한 계획, 사업은?)		
천안·아산 생활권	천안	-
	아산	통합브랜드를 검토하였으며, 향후 유통 등의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홍성·예산 생활권	홍성	최근에 홍동마을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업특구로 지정되었다. 전국적인 6차 산업의 모델로 만들 필요가 있다. 유기농업, 친환경쌀 등 다양한 농작물을 공급할 예정이다.
	예산	로컬푸드 사업을 군에서 직영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작목반이나 영농조합에서 추진 시 수익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어 초기에는 군에서 직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홍성군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연계사업은 군 간 역량, 경험, 사업추진 측면에서 수준이 비슷해야 연계 가능하다.
서산·당진·태안 생활권	서산	실현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도출할 예정이다.
	태안	· 전혀 검토된 적 없음 - 산수향(서산-태안) 브랜드도 안되고 있음. 하려면 산수향부터 살릴 필요가 있음
	당진	쌀, 유통, 수요발굴 차원에서 추진중이다. 생활권내 협력은 어려운 편이다.
공주·부여·청양 생활권	공주	· 시군별 제 2 특산물 발굴 사업이다. · 생활권내 생산물 활용한 로컬푸드 사업이다. 매장설치, 가공식품개발 등 사업이 추진될 수있고, 유통은 인근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추진하면 될 듯 하다. 브랜드 이름은 산들강(산: 청양/ 들:공주/ 강: 부여)이다.
	부여	농업과 관련하여 로컬푸드, 학교급식, 친환경 등 관련된 사업을 검토 중이다. 생활권내에서 광역적인 로컬푸드 체계를 구축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
	청양	겉치는 농작물(밤, 토마토, 메론 등)을 활용한 “주스 등 가공식품화(가공산업 혹은 가공센터 등)” 방안 모색 필요
논산·계룡·금산 생활권	논산	· 딸기, 젓갈 ·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계룡	
	금산	인삼, 딸기
보령·서천 생활권	보령	
	서천	-

9. 생활권내 지역간 통행구조상 통행비율과 관련하여 대중교통 체계는 어떠한지, 혹시 체계가 미미할 경우 보완해야할 계획은 무엇입니까?(버스 배차시간, 기타 교통수단은?)		
천안 아산 생활권	천안	-
	아산	주민들이 체감하는 사업인 버스환승시스템을 추진 예정이며, 공주시까지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홍성· 예산 생활권	홍성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광역버스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내포신도시 건설 후 홍성과 내포신도시 간의 버스운행 횟수는 증가하였다. 그리고 홍성으로 접근하는 광역 교통망체계는 수덕사IC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통문제는 아직까지는 없다.
	예산	내포신도시 내 간선 중심으로 대중교통 체계가 구축되어있다. 향후 내부 도로까지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서산 당진· 태안 생활권	서산	서산시 교통과에서 “대중교통 광역체계화 사업”에 대한 관련 공모사업을 준비 중에 있음-시설설치 사업이며 운영 관리비가 없음. 그래서 연계사업 측면에서 별도 고려 중인 사업이 없음
	태안	검토 된 적 없음
	당진	버스환승시스템이다. 그러나 수요는 많은 편은 아니다.
공주 부여· 청양 생활권	공주	· 논산의 통행비중이 높다. 생활권 사업을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연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공주 KTX역 중심으로 교통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대중교통, 택시 문제 등이 있다.
	부여	공주 KTX역 중심으로 도로건설, 대중교통(버스) 체계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으로는 주민할인, 버스운행 시간연장, 노선확장, 환승요금 할인, 택시 영업권역등 연계할 현안이 많다.
	청양	KTX에서 공주는 연계되어 있으나 청양은 연계가 어렵다. 청양에서는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며, 내륙철도가 필요하다.
논산 계룡· 금산 생활권	논산	생활권내 교통비율이 낮으나 도로건설의 추가 필요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도로교통 시설이 증가한다고 생활권내 연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계룡	
	금산	통행비율이 낮다. 동일 생활권으로 추진하려면 정책적으로 교통측면의 사업인 도로건설,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생활권 사업이 어려울 수 있다.
보령· 서천 생활권	보령	
	서천	대중교통 체계 구축이다. 관련하여 버스환승 사업도 필요하다. 보령과 연결되는 21호선 4차선 확충 사업이다.

10. 주민안전과 관련한 사업(방재 등)의 추진 계획과 의향 어떠 십니까?		
천안 아산 생활권	천안	-
	아산	하천관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2014년 선정사업인 복합문화정보센터 내에 CCTV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홍성· 예산 생활권	홍성	국가적차원으로 안전문제가 중요해졌으며, 안전총괄과에서 개별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향후 이슈를 발굴하여 생활권 사업 고려해 볼 예정이다.
	예산	-
서산 당진· 태안 생활권	서산	응급의료체계, 해안 쓰레기 처리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무부서에는 주민설득, 생활권내 시군과 협의의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다.
	태안	안전센터 추진 중임
	당진	-
공주 부여· 청양 생활권	공주	금강 치수 관련이다.
	부여	구제역 관련 사업, 금강 치수 관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청양	-
논산· 계룡· 금산 생활권	논산	금강 치수관련이다.
	계룡	
	금산	-
보령· 서천 생활권	보령	
	서천	금강 하구둑 관련 사업이다.

■ 사업 추진단계

11. 지역 생활권 추진 상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사업발굴 단계, 선정단계, 사업 추진 단계)		
천안·아산 생활권	천안	발굴단계가 가장 어렵다. - 처음에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
	아산	사업선정 후 사업추진 시 절차상 어려움이 있다. 2014년 선정된 복합문화정보센터 조성사업의 경우 지역발전위원회의 공모사업에 사업선정이 되었으나, 안전행정부 투융자심사 과정에서 탈락하여 사업집행이 어려웠다. 생활권 계획으로 선정되면 투융자심사 등의 과정을 의제처리 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생활권 사업기간 동안에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홍성·예산 생활권	홍성	사업 발굴이 어렵다.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하는 애로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속적인 협의와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또한 사업 발굴 시 개별 사업부서의 관심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업부서들의 인식개선과 학습이 필요하다. 공무원들이 변해야 주민들의 공감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속적인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예산	사업 발굴 단계이다. 생활권내 지속적인 사업협의, 군내 부서와의 협의, 주민들과의 협의 등의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생활권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모색하겠다.
서산·당진·태안 생활권	서산	· 발굴 및 선정이 모두 어렵다. 사업풀이 있어야 하는데, 실무부서에 사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작년에 총 4-6건 수렴). 그래서 기획실 사업의 큰 틀에서 제시하여 협의하였다. · 생활권 정책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실무부서의 교육, 홍보가 필요하다.
	태안	사업선정 과정이며, 시군 협의가 어려움
	당진	사업발굴 단계이다.
공주·부여·청양 생활권	공주	사업발굴 단계이다. 다양한 분야, 고려해야 할 사항 많다.(현안사업, 주민 협의 등). 사업부서와의 사업 협의도 필요하다.
	부여	사업 발굴 후 세부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 작성 시 협의 과정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특히 예산배분, 공간설정 등의 사업계획 부분이다.
	청양	2014년 사업에 대해 정상추진중이다.(백제문화제에 맞춰 준비 중)
논산·계룡·금산	논산	사업선정단계이다. 사업발굴시 추진부서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계	

생활권	룡금산	사업발굴 단계
보령·서천 생활권	보령	
	서천	사업발굴이다. 공통의 사업을 발굴하기 어렵다. 지역적 이슈와 자원이 틀리다. 생활권 사업의 정책적 인센티브와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어 관심도가 떨어진다.

12.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이 있는 경우) 추진 상황은 어떠십니까?(정상추진/더딘추진/)		
천안·아산 생활권	천안	추진이 더딘편이다. - 중앙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 상 예산이 늦게 배정되었기 때문이다
	아산	투융자 심의가 늦어져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는 정상추진 중이다. 이유는 11번 내용과 동일하다.
홍성·예산 생활권	홍성	2013년 내포문화숲길 사업이 있다. 여러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사업 추진 협의에 어려움이 있다.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걱정하는 예산 집행이 늦은 이유가 그 때문인 듯하다.
	예산	2013년 내포문화숲길 사업이며, 집행률이 낮다. 관련 시군이 많아 사업협의 시간이 더딘 측면이 있다.
서산·당진·태안 생활권	서산	내포문화 숲길사업이며, 예산 집행률이 계획보다 낮은 상황이다. 4개 시군이 함께하는 사업이며, 공간적으로 넓은 사업이라 애로가 있다.
	태안	-
	당진	내포숲길의 경우 예산집행이 낮은 편이다. 사업협의 과정, 예산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사업추진이 더딘 이유도 있다. 향후 생활권내 각 시군들이 예산만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추진 속도는 낮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공주·부여·청양 생활권	공주	· 사업추진이 더디다. 국비가 계획대로 집행이 안된다. 사업선정→사업승인→국비지원 단계별 시간이 오래 걸린다. · 사업의 변경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한다. 절차적으로 시간이 너무 길다.
	부여	2014년 선정사업인 백제문화 관련 사업이 있으며, 중앙정부 사업예산이 늦게 배정되어 사업추진이 촉박하고 추진이 느려지는 어려움이 있다.
	청양	14년 사업에 대해 정상추진중이다.(백제문화제에 맞춰 준비 중)
논산	논산	2013년 연계사업인 금강에코사업(논산, 서천, 부여, 익산)이다. 정상추진

계룡 금산 생활권		진중이며 2015년 사업이 종료된다. 향후 추가사업의 예산으로 추진되었으면 한다.
	계룡 금산	-
보령· 서천 생활권	보령	
	서천	-

■ 사업 추진 애로사항 및 개선과제

13.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천안· 아산 생활권	천안	도움이 되며 확대하고 싶다. - 지금은 주민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산	현안해소, 주민체감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홍성· 예산 생활권	홍성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 협의 과정이 어려운 점은 있지만, 사업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수월한 면이 있다. 주민과 소통의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예산	공동의 현안사업을 생활권 정책으로 해결 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
서산· 당진· 태안 생활권	서산	· 지역간 현안 발생 시 생활권 정책으로 추진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첨예한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가능할 듯하다. 가로림 조력발전 사업등이 가능했으면 좋겠다. · 천안-아산 같은 시군 경계지역에 들어 올 수 있는 사업이면 좋겠다.
	태안	· 매리트가 없음 : 절차가 너무 어려움 -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일부 생활권만 선정하고 크게 지원할 필요가 있음
	당진	단기적으로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다.
공주· 부여· 청양 생활권	공주	2015년 선정 사업인 나래원(화장장) 사업은 공주시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 활용범위를 넓힌 것으로 공주 주민 혜택 측면에서는 적은 편이다. 다만 지역발전 측면 생활권 측면에서는 도움이 된다.
	부여	현안 해결, 주민 혜택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지역발전위원회 사업선정 시 선정 생활권 수를 줄이더라도 사업비를 높여서 실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청양	도움이 된다. 하나의 사업으로 크게 변화는 없지만, 행정력의 역량강화가 가능하다. 실질 효과 측면은 결과가 없어서 아직은 판단할 수 없다. 향후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논산 계룡 금산 생활권	논산	현재의 생활권 체계로는 어렵다.
	계룡	
	금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생활권 체계는 지역발전과 어떻게 연결시켜야 하는지 모르겠다. 대전과의 중추도시생활권이 실제적 생활권으로서 효과가 높다.
보령· 서천 생활권	보령	
	서천	정책적으로 잘 활용될 경우 도움이 될 듯하다. 실직적인 생활권은 군산이며 군산과의 협력사업,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더 필요하다.

14.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이 갖고 있는 장점이거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안· 아산 생활권	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점이 매우 많아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싶다. - 특히 지자체 간 상호 이해, 공무원들의 할 수 있다는 인식제고, 필요한 사업의 추진 가능성 향상 등 · 단점은 운영비가 문제이다. - 작년 사업에 대해서는, 운영비 조달을 위한 수익창출 모델 등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산	문제점) 사업선정 시 과다 선정으로 사업특성을 살리기 어렵다. 생활권 계획 선정 시 다른 심의를 유연하게 하여 기간 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시켰으면 한다.
홍성· 예산 생활권	홍성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선도사업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만 공모했으면 한다. 연계협력사업과 단독사업의 사업계획상 위치가 애매하다. 연계협력사업은 사업부서별 중앙부처 공모기간에 맞추어 추진되고 있어 중복작업의 느낌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업부서에서 관심도가 떨어진다. 생활권계획 시 포함시킨다면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
	예산	연계사업, 단독사업은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생활권 계획 내 포함되어 있지만 향후 어떻게 추진되는지 알 수 없다.
서산· 당진· 태안 생활권	서산	<p>장점) 지역간 연계사업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프로그램사업들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크다.</p> <p>단점) 3개 지역이 생활권인 지역의 경우 모든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 발굴이 제한적이다.</p>
	태안	장점) 생활권 차원에서 정책을 접근하기 때문에, 생활권 내에 효과성이 있는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음(예, 화장장)
	당진	생활권 계획의 취지는 좋지만 추진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생활권이라는 공감대가 아직 미숙한데가 있고, 서비스권역에 비하여 예산이 적다. 또한 사업의 추진시 사업의 공감대, 분야의 발전과 필요성이 비슷해야 추진이 가능하다(생활인프라, 교육&의료 등).

공주 부여 청양 생활권	공주	생활권 구축이 자유롭게 이루어졌으면 한다. 지역적 제한에 따른 사업발굴의 제한이 있다.(2013년 초기 생활권 계획 모델이 더 좋다) 타 시도 혹은 주변의 필요한 지역과 연계하는 것이 사업발굴에 도움이 된다.
	부여	사업을 선정하는 부서와 사업비 집행부서가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이 문제점이다. 예산 측면에서 생활권들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청양	장점 : 지자체 간 연계협력 단점 : 사업발굴 과정-선정-집행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됨
논산 계룡 금산 생활권	논산	단점: 사업발굴과 추진과정에서 행정철자의 간소화 필요하다. 연계협력 사업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개별사업부서들은 공모시 개별부서에서 신청하려고 하다. 중앙부처 사업중 연계사업(119개)은 공모 수요가 별로 없는 연계협력 사업들이다. 2013년 연계사업처럼
	계룡	
	금산	현재의 생활권은 실질적인 교류가 거의 없는 생활권 체계이다(지역간 통행구조결과, 교통구조, 지리적 특징 등). 실질적 생활권 설정이 된다면 사업발굴 및 주민들 체감하는 사업 발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보령· 서천 생활권	보령	
	서천	생활권 체계상 실질적 생활권 구성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보령과 실질적인 생활권은 아니다.

15. 효과적인 생활권 사업을 위한 건의사항(제도, 절차 등...)		
천안 아산 생활권	천안	지원금 증액이 필요하고 계획은 생활권에서 협력해서 추진해야 한다.
	아산	· 지자체 자체 사업과 중앙부처 지원 필요 사업을 구분하여 선정이 필요하다. · 시설의 공동이용에 따른 효율을 높이는 사업 선정이 필요하다. · 사업특성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선정이 되었으면 한다.
홍성· 예산 생활권	홍성	
	예산	· 사업발굴의 노력에 비하여 사업비가 적다. · 연계사업 발굴이 어렵다. · 개별부서 공무원들의 생활권 정책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공무원이 정책을 이해해야 주민 공감 및 설득이 가능하다.
서산· 당진· 태안 생활권	서산	· 사업의 수가 적더라도 좋은 사업을 선택하여 예산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 시군간 사업의 배분 측면에서 충분한 협의가 중요하다. · 연계사업, 단독사업의 경우 인센티브가 없으면 관련 사업부서는 중복 작업이라는 인식을 갖는다. 개별부서는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부처 공모기간에 신청하려는 인식이 크다. · 신청할 수 있는 사업 분야의 제약이 많다. 사업 분야의 제약 없이 생

		활권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생활권별 특성을 살리는 계획이 될 수 있다.
	태안	· 생활권내에서 함께 할 수 있으면 하고, 안되는 지역은 “선택과 집중” 전략의 일환으로 제외하여야 함 · 선도사업뿐만 아니라, 최소한 단독사업도 지원 필요
	당진	· 사업선정 후의 과정인 컨설팅 예산 확정 과정에서 사업의 컨셉과 아이템이 너무 많이 변경이된다. 자율성이 높아졌으면 한다. 이는 사업 확정 전과 후 아이템이 바뀌는 상황이다. · 2013년 연계협력 형태의 정책이 필요하다. 사업을 중심으로 시군의 협력 사업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다.
공주 부여 청양 생활권	공주	· 선정 사업수 적더라도 예산이 증액될 필요가 있다(선택과 집중 차원). · 시설 조성 사업도 유지보수가 가능한 정도는 필요하다.
	부여	· 개별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과 비교하여 볼 때 생활권 사업의 사업비가 적은 편이라 군 내에서 관심도가 떨어진다. 또한 사업추진 과정상 타 시군과 연계라는 측면에서 어려운 측면이 있어 더욱 어렵다. · 새로 시작하는 정책이라 공무원들 중심으로 한 정책 홍보가 중요하다. 공무원이 이해해야 주민들을 설득하고 사업추진이 원활한 측면이 있다.
	청양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기간의 조정이 가능하였으면 좋겠다.
논산 계룡 금산 생활권	논산	· 사업을 중심으로 생활권이 형성되는 것이 효과적이다(2013년 연계협력 사업처럼). · 정책적, 예산측면에서 실질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지역생활권특별회계 계정 등)
	계룡	
	금산	· 사업발굴, 계획수립을 위해서 별도의 재원(예, 포괄보조금형태) 마련 및 지원 요구 · 사업기간이 3년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기간이 촉박한 측면이 있다.
보령 서천 생활권	보령	
	서천	연계사업 발굴이 어렵다. 발굴 가능한 사업분야를 자유롭게 했으면 한다.

16.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이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천안 아산 생활권	천안	공무원들 간의 협의와 논의, 만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산	실질적인 생활권 행정협의회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생활권 내 사업 발굴,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천안 아산 생활권의 경우 시장이 의장이 되는 생활권 행정협의회와 그 하위의 실무협의회가 구성

		되어 생활권 정책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 공동의 현안을 해결하고 있다. 행정협의회는 연 2회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실무 부서단위의 실무협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여 정책을 발굴하고 있다. 좀 더 구속력 있는 형태의 생활권 협의회이며,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다. 생활권 정책과 자연스럽게 연계되고 있다.
홍성·예산·생활권	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사업 금액의 규모를 낮춰 많은 시군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한다. 적은 금액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 주민협약의 지역 수요파악이 중요하다. 사업 선정 이후 추진이 원활해지기 때문이다. · 생활권내 시군의 정보공유와 협력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공감하도록 하는 사업 추진이 되어야 한다.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발굴 시 사업 관련 부서 실무자들 간의 지속적인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 · 사업 관련 부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생활권 사업 정책의 이해를 위한 워크숍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 · 단기적인 정책이 아니라 지속적인 생활권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 생활권사업 선정 시 개별 시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비슷한 사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다. 이는 비슷한 사업이라도 개별 시군 사업과 생활권내에서 추진되는 사업은 성격이 다른 사업으로 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서산·당진·태안·생활권	서산	-
	태안	-
	당진	생활권내 시군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현안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은 장기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주·부여·청양·생활권	공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속력 있는 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시장, 시의원, 전문가 등). 또한 실무협의회에서 정보공유, 현안사업의 공유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의 예산, 구체화가 필요하다. 협의회는 정례적인 모임을 갖을 필요가 있다. · 정책홍보, 공무원 교육, 정책이해 와 공감을 위하여 워크숍, 전문가 세미나 필요하다.
	부여	지역간 지속적인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생활권 협의회를 지속적 추진하여 현안 공유, 정보공유 등이 필요하다.
	청양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기간의 조정이 가능하였으면 좋겠다.
논산·계룡·금산	논산	생활권 체계가 획일적이다.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권으로 형성이 필요하다. 사업을 중심으로 생활권이 형성된다면 부여, 공주와 사업 협력이 가능할 것 같다.

생활권	계룡	
	금산	사업발굴, 주민 혜택을 위하여 실질적인 생활권으로 설정이 필요하다.
보령·서천 생활권	보령	
	서천	실질적인 생활권 구성이 필요하다.

17.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발전위원회, 충청남도, 지자체,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천안·아산 생활권	천안	-
	아산	지발위) 생활권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일정 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충청남도) 도 현안의 문제 중 공간적으로 생활권과 관련된 사안이 있을 시 함께 논의할 수 있었으면 한다. 지자체) 공동의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인 사업추진은 어렵다. 생활권 내에서 주고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향후 추진 예정인 화장장 공동이용의 경우 천안의 시설을 아산 주민들이 공동이용하고, 대신 천안 시민들이 아산의 관광시설을 이용 시 금액을 할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홍성·예산 생활권	홍성	지자체)사업 발굴 시 시군과 지역 연구원의 협력이 중요하다.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협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시군 내 부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예산	지발위) 주민들이 체감하고 혜택이 가는 사업의 발굴이 필요하다. 예산을 높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필요하다. 사업 선정 시 생활권별 특성을 고려해 줄 필요가 있다. 충청남도) 도 생활권 계획 시 생활권별 사업이 가능한 사업 발굴 등이 필요하다. 사업 추진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 예산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서산·당진·태안 생활권	서산	지발위) 5대 중점과제 라는 제한 없이 창의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충청남도) 사업계획대로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
	태안	충청남도) 정보를 빨리 알려줬으면 좋겠음 - 충북에서는 정기적으로 정보를 알려주고 있음(공모사업 관련)
	당진	지발위) 실질적 생활권 구성을 위하여 2013년 연계협력 사업정책을 통한 사업 중심의 생활권계획이 필요하다. 예산증액 및 자율성 확보 필요하다. 충남도) 사업의 컨설팅, 정책 설명회등 지속적 조언 필요하다. 새로운 정책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워크숍, 정책홍보 등을 통해 실무부서의 이해

		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정책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공주 부여 청양 생활권	공주	지발위)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많아 행정력이 많이 필요하다. 예산의 결정시 계획된 대로 승인 집행이 되었으면 한다. 신규사업에 대한 국비 비중이 높일 필요가 있다. 생활권내에서 결정된 선정사업의 이름을 바꾸지 않았으면 한다.
	부여	지발위) 선정된 생활권 계획의 적정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지자체) 지속적인 정보공유 및 협의가 필요하다.
	청양	지역위) 사업기간 조정 충남도) 설명회개최, 자체 평가 등 자주 시행, 평가진과 생활권 간 직접 연결, 충남도 우수사례 조사 및 소개
논산 계룡 금산 생활권	논산	충남도) 생활권 담당자들 정책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수범사례등의 소개등의 case study가 필요하다. 정책의 필요성, 목표, 의욕 고취가 필요하다 지자체) 개별 담당 공무원들에게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
	계룡	
	금산	지발위)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생활권 지역 설정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지역 스스로 생활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완 필요하다(공간적 자율성 보장).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많다.
보령· 서천 생활권	보령	
	서천	지발위) 선정과 예산관련 부처가 이원화되어 사업 선정시 어려움 있다. 일원화가 필요하다. 충남도) 선정 사업의 경우 확정된 예산대로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한다. 지자체) 실과부서와의 지속적 협의가 필요하다. 사업발굴의 의지가 필요하다.

■ 집 필 자 ■

연구책임 · 임형빈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정연 충남발전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내부연구진 · 한상욱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이상준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오명택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

전략연구 2015-00 · 충청남도 지역생활권 특성과 발전전략과 추진과제

글쓴이 · 임형빈, 김정연, 한상욱, 이상준, 오명택,
발행자 · 강현수 / 발행처 · 충남발전연구원
인쇄 · 2015년 00월 00일 / 발행 · 2015년 00월 00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14-140)
전화 · 041-840-1164(지역 · 도시연구부)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159
ISBN · 비워두세요

<http://www.cdi.re.kr>

© 2015. 충남발전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